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영역별 진단연구 III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진단연구

2017

통 계 개 발 원

이 연구는 사단법인 한국삶의질학회가 2017년 통계개발원「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영역별 진단연구 III: 교육·훈련, 문화·여가, 사회통합」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통계개발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영역별 진단연구 III: 교육・훈련, 문화・여가, 사회통합」 연구용역 과제의 “사회통합” 영역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연구책임자 한 준

연구책임자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삶의질학회

사회통합 공동연구자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 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이희길 (통계개발원 사무관)

연구보조원 권시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수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하헌주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사회통합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중에서 어떤 이유로든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포용(inclusion)과 사회집단 간에 갈등이 없고 서로 신뢰가 넘치는 응집(cohesion), 그리고 구성원들이 시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질서를 지키는 시민성(citizenship) 등이 모두 포함됨. 그러나 사회통계의 영역으로서 사회통합은 다른 영역들과 달리 다양한 관점과 입장들이 산재함.

○ 가족, 교육, 일, 소득과 소비 등 다른 영역들은 삶의 영역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면이 있지만 사회통합은 삶의 직접적 현실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향하는 이상적 상태를 표현함. 이처럼 사회통합이 가치지향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표출됨.

□ '사회통합'은 국내외적으로 널리 통용되기는 하지만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님. 사회통합 영역의 명칭과 정체성이 뚜렷하고 일관되지 못한 것은 내용면에서도 마찬가지임.

○ 그 결과 사회통합 영역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됨. 따라서 사회통합 영역의 프레임워크는 다른 영역들보다 더 내용을 분명히 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최근, 민주화 이후의 가치변화, 정보통신화에 따른 미디어의 발달,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사회 변화와 함께,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사회적 신뢰와 참여의 하락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확충 필요성 증대,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이동성 제고의 필요성 증가, 배려와 관용의 중요성 강조 및 사회적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증가 등이 빠른 속도로 나타남.

○ 사회통합 영역의 통계 생산은 몇몇 조사 이외에는 부분적으로만 관련 조사들이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기관별

로 내용이나 분류기준과 작성 방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여 통계의 불일치, 통계의 중복 및 누락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 따라서, 사회통합 관련 생산 통계 및 자료의 조정과 통폐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임.

□ 향후에는 사회통합이 개인의 웰빙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의 통계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일관되고 의미 있는 자료의 측정과 관련 통계자료 구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본 연구는 국내외 사회통합 영역에서의 주요 쟁점과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에 생산·활용되고 있는 통계 및 지표를 점검하고자함. 이렇게 작성한 통계 프레임워크는 향후 사회통합 영역에서의 통계 생산·작성·활용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개발 및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사회통합 통계의 체계적 생산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회통합 통계의 기본 프레임워크 구성임.

○ 이를 위해서는 각기 산재되어 있는 자료 생산의 현황과 생산방식을 비교·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고, 그러한 비판적 검토와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사회통합 영역에 관한 신뢰할만한 자료생산과 관리 및 공표를 위한 일련의 지침이 마련되어야함.

□ 이 연구의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구성원칙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통계의 하위 영역으로 사회통합 통계는 개인 삶의 웰빙과 사회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사회통합 통계는 개인들의 경험과 의견, 생각과 행동의 실태를 사회 전체 수준에서 종합함으로써 사회의 통합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함.

○ 셋째, 정부나 시민사회에서 관심을 가진 이슈들에 대응하는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비해야 함.

○ 넷째, 시간의 흐름이 고려되어야 함. 즉, 사회통합 통계는 사회 전반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통합의 조건과 사회 구성원들의 객관적 조건 및 주관적 가치와 의식의 변화가 반영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함.

□ 이러한 원칙하에 국내외 사회통합 관련 이론의 검토는 물론 사회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쟁점과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반영하여 구성된 프레임워크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점검 및 수정, 그리고 공유 과정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10명 이상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논의된 내용을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구성 과정에 반영하였음.

□ 끝으로 현재 한국 사회통합의 상태와 변화 방향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국가주요지표 체계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조건과 웰빙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한 논거점을 제시하고자하였음.

제2장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

□ 사회통합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치지향적이고 추상적인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들과 정의들을 고찰함으로써 주요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흡수(Social integration), 사회통합(Social cohesion) 3가지 개념의 차이를 제시함.

○ 사회통합은 연대(solidarity), 분화(specialization), 독점(monopoly)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 가능함. 연대 패러다임은 프랑스 공화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공동선에 대한 가치지향 및 이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가 사회통합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함. 분화 패러다임은 사회통합의 약화를 사회의 기능적 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인식하며, 독점 패러다

임은 사회통합의 약화를 집단 및 계층의 독점적 지위형성 결과로 이해하여, 특정계층의 권력독점이 사회통합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함.

○ 사회통합 논의의 핵심은 사회적 이동성과 불평등의 감소(포용), 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지켜야할 의무와 누려야할 권리(시민성), 그리고 포용과 시민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삶(연대)의 문제임.

○ 사회통합의 정의로는 '개인이나 집단 간에 갈등적이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 '생활세계 수준에서 사회규범, 개인의 정체성, 문화적 의미 등에 대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태',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상에서 행위자나 집단들 간에 호혜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등 다양한 정의들이 있음.

□ 이처럼 사회통합에서의 다양한 개념들은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흡수(Social integration),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로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빈곤과 실업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함. 이 개념은 사회통합이라는 표현보다 '사회적 포용' 개념과 유사함.

○ 사회적 흡수(Social integration)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획일성을 강조하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됨.

○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강력하고 긍정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더하여 사회통합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통합을 다른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생활의 환경의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사회통합이 경제적 성취와 웰빙, 건강, 민주적 제도 참여율과 정당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과 여러 요인에 의해 세계화와 신기술, 다양성, 공동체 분야에서 통합이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이 대립함. 최근에는 사회통합이 여러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동시에 영향을 받는 양자적 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함.

제2절 사회통합과 웰빙의 관계

□ 사회통합 통계의 생산·구축 이유는 사회통합의 수준과 현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실태와 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한 공공개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삶의 질 향상과도 맞닿아 있음.

□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은 개인적 수준의 삶의 질을 넘어서 관계적 존재로서의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사회의 질은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 네 구성 요소로 측정 가능함.

□ 사회통합은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응집성, 사회자본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함.

제3절 사회통합 관련 사회문제

□ 사회통합은 사회통계의 다른 분야와 달리 정부의 담당 부처나 부서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물론 정책자문 위원회로서 사회통합위원회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한 적은 있지만, 상설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상황과 달리,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유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 이동성 감소,

개인주의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의 증가, 사회적 신뢰 약화에 따른 사회 자본의 감소, 사회적 불만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심화 등이 있음.

□ 사회통합에 해당하는 '공동체, 시민참여, 거버넌스' 영역 중 다양한 영역에 걸쳐 함께 문제가 되는, 즉 통합영역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사회통합의 통합영역 쟁점으로는 안전 측면에서 파트너십에 의한 범죄예방이, 인권과 차별에서 관용성이, 그리고 가치와 규범에서 신뢰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불평등에서 계층귀속이 해당됨.

□ 이러한 통합적 쟁점 외에도 사회통합은 정보화, 세계화, 고령화와 같은 사회의 거시·구조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됨.

○ 정보화 측면에서는 투표율 하락에 대처한 전략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를 들 수 있으며, 세계화와 다문화 경향과 관련해서는 인구이동을 통해 늘어난 난민이나 탈북자들에 대해 정책 당국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세대간 형평성과 공존의 문제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함.

제4절 사회통합 관련 취약 인구집단 및 지역 간 비교

□ 사회통합 통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생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인구집단과 취약집단을 구분함.

○ 인구집단은 통계적 표준집단으로 사회통합 통계상의 기준집단이며, 통계적 취약집단은 표준집단 중심의 접근에서는 배제되기 쉬운 집단을 의미함.

□ 사회통합 영역의 대표적인 통계적 취약집단은 다문화가족이나 장애인 집단을 들 수 있음.

○ 이들 외에도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층, 이혼자,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농촌가구, 학업 중단자, 저소득층, 실업자, 은퇴자, 감정노동자, 임시

일용직, 비주거용 건물거주자, 전월세가구, 무주택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탈북자, 다문화가정 등이 통계적 취약집단에 해당됨.

○ 이들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하지만 기존 통계적 표준집단의 시각에서 작성된 지표체계에서는 특정 관심영역에 따라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

□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에 있어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장애인, 다문화가족 집단을 선정하고, 본 연구가 설정한 사회통합 지표체계 내 △포용 △연대 △시민성 영역에 존재하는 구체적 변수들을 통해 해당 집단의 사회통합 취약정도를 확인함.

□ 이에 더하여, 지역단위 사회통합수준의 비교를 포용, 연대, 시민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지역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남.

○ 포용에서는 지역별 차이를 보기 위해 사회적 이동성과 관련한 세대내 계층이동 가능성과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을, 연대에 대해서는 기부와 관련된 사회적 참여, 대인 신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망을, 마지막으로 시민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참여율 차이와 단체참여, 정치적 효능감, 준법의식 등을 통해 지역간 차이를 확인함.

○ 다만, 포용, 연대, 시민성에 포함된 항목들이 정부를 평가하거나 정책에 대한 호오도, 정치참여의 수준 등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통계청에서 다루기보다는 정치 관련 항목들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모듈화하여 포함시키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체계화하고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임.

제5절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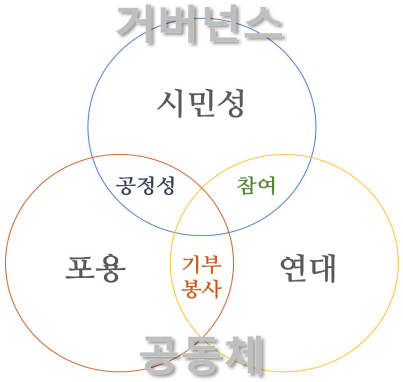
□ 앞서 살펴본 원칙과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해외 및 국내 선행사례들을 종합하여 구성한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의 하위영역으로는 포용(inclusion)과 연대(cohesion) 그리고 시민성(citizenship)이 포함됨.

○ 포용(inclusion)은 사회 성원 자격의 배제가 없이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연대(cohesion)는 사회성원들 간의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통해 협력이 가능한 것, 마지막으로 시민성(citizenship)은 공적영역에 신뢰와 효능감 있게 참여하며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것을 의미함.

○ 세 하위영역 각각은 사회통합에 필요불가결한 구성요소들이며, 또한 이들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중첩되는 영역이나 내용이 존재함.

○ 포용과 연대에는 기부와 봉사라는 중첩 영역이 존재하며, 시민성과 연대 간에는 사회, 정치적 참여가 시민성과 포용 사이에는 공정성이라는 중첩 영역이 존재함.

〈그림 1〉 사회통합 사회통계의 프레임워크



제3장 사회통합 통계 작성현황 분석

제1절 사회통합 통계 작성현황

□ 사회통합의 세 가지 영역으로서 포용과 연대, 시민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국내외 통계지표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통합과 관련성이 높은 조사들 중 국내적으로는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및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성균관대학교 KGSS, 국외적으로

는 WVS, ISSP, Social Cohesion Radar(BS) 등을 고려하였음.

□ 이에 더하여 국내의 사회통합관련 주요 조사인 사회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국민인권실태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지역사회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였음.

○ 통계청의 조사를 제외하고, 현재 사회통합 영역에 해당되는 정부 승인 통계조사는 사회통합실태조사와 청소년인권실태조사가 전부임.

○ 일부 조사에 한해서는 향후 사회통합 영역에서 보완되고 추가 혹은 정부 승인 통계로 생산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할 것으로 보임.

제2절 사회통합 프레임워크와 작성통계의 비교분석

□ 사회통합 프레임워크의 각 영역별로 통계조사에서 주로 조사되고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고, 각 항목들이 사회통합의 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검토하였음.

○ 포용영역의 작성통계는 사회이동가능성(세대내 이동, 세대간 이동), 차별경험, 관용여부와 관련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사항목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함께 포함되어야 할 질문들을 제시하였음.

○ 연대 영역에서는 사회적 참여(소속감과 정체성, 사회단체참여, 자원봉사경험), 사회적 관계와 지지(도움 받을 사람, 연락하는 사람 수), 대인신뢰(일반화된 신뢰, 사람의 신뢰여부)를 검토하고, 각 항목을 측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조사항목을 제시하였음.

○ 시민성 영역 역시 효능감(국민 참여에 대한 정부의 태도 인식, 국민의 정보 수준, 정치관심도, 현재와 미래 정치 상황 만족도, 지지정당 존재여부), 정치참여(정치사회 현안 관련 활동 정도, 투표율), 준법정신, 투명성(기관 청렴성, 정보 접근성 및 공개성, 반부패제도의 효과성), 공정성(정부공정성, 사회공정성), 제도신뢰(기관신뢰, 제도 행위자 신뢰)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질문들과 효과적인 조사항목 등을 제시하였음.

□ 또한 사회통합지표를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지표와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성 지표로 구분하였음.

○ 많은 지표들이 ISSP나 WVS와 같은 국제조사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함. 다만 사회적 이동 가능성, 차별 경험, 지지 정당 존재 여부, 기관 청렴성, 공정성, 제도 행위자 신뢰 등은 내부 지표로서 고유특성 지표로 분류하였음.

제4장 사회통합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제1절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기존 사회통합통계조사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영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통합영역에서 정부승인통계 조사가 매우 적음

○ 둘째,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계조사의 확대

○ 셋째, 유일한 승인통계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체계화

○ 넷째, 인권관련 통계 생산의 전문화 및 제도화

○ 다섯째, 정치 참여 관련 통계조사의 일원화 및 체계화

○ 끝으로, 가치관 및 의식에 대한 관련 통계조사의 확대

□ 특히 사회통계의 전반적 프레임워크 안에서 사회통합의 위치나 개념에 대한 합의의 수준이 낮고,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를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없다는 점이 사회통합통계 생산의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사회통계외연을 확장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

제2절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 사회통합통계 조사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단기적 과제는,

○ 사회통합 영역의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들과의 업무조정 및 협의,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함. 통계청이 구심점이 되어 안정적으로 자료생산이 이루어지는 유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통합 관련 조사들을 계층화할 필요가 있음.

○ 공유된 질문문항과 조사매뉴얼을 통해 조사의 주체와 실사기관마다 각기 다른 접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표준화되지 못한 측정(unstandardized measurement)의 문제를 최소화해야 함.

○ 공식통계의 관리 및 승인의 주관기관으로서 통계청과 해당 연구기관의 긴밀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사회통합 통계들을 종합・정리하고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중단기과제로 구분하는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함.

□ 보다 중장기적으로 실시해야 계획은,

○ 사회통합 영역의 조사를 확충하고 늘려가는 과정에서 중복과 비일관성을 줄이고 보완적이며 일관된 통계조사들이 늘어날 수 있기 위한 근거로서의 프레임워크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 새로운 사회통합통계를 생산할 때, 각 기관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 따른, 각 조사의 목적에 따른 내용의 조정과 조정 후 세부 내용의 전문화 과정의 조율이 이어져야 함.

○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그 활용여부 및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함.

제3절 주요지표 개선방안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와 기존의 국가주요지표는 세부적 지표보다는 하위영역 구성에서 더 큰 차이를 보여줌.

□ 기존 국가주요지표의 ‘사회통합’ 영역은 ‘사회참여’와 ‘신뢰’, ‘관계와 웰빙’ 및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 중 ‘사회보장’은 본 연구에서는 영역간 교차 영역에 해당함.

□ ‘사회참여’와 ‘신뢰’는 본 연구 프레임워크의 사회적 결속과 유대, 그리고 시민성으로 나뉘어 재편할 수 있음. ‘관계와 웰빙’의 일부는 사회적 결속과 유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웰빙은 국가주요지표의 중요 가치인 만큼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통합 통계의 체계성과 일관성, 포괄성의 측면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지표들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의 다양성의 증가에 따른 이질적 집단의 증가, 사회적 이동의 촉진에 따른 소속감의 변화, 공통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등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 항목들이 필요함. 새로운 하위영역 구성 및 지표체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와 국가주요지표 체계개선안

영역	국가주요지표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포용	● 차별 경험 유무** ●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 ● 사회경제적 이동 비율**	● 이동 가능성 인식	
연대	● 지역사회 소속감** ● 사회단체 참여 비율* ● 자원봉사 참여 비율** ● 사회적지지 정도* ● 일반화된 신뢰*	● 지역사회 정체성 ● 기부 참여 비율 ● 사회적 관계 수준 ● 신뢰의 반경범위	
시민성	● 선거 참여* ● 정치행위 참여** ● 준법의식** ● 투명성 인식* ● 공정성 인식** ● 제도 및 기관 신뢰*	● 정치적 효능감	● 선거 참여 ● 투명성 인식 ● 제도 및 기관신뢰

* 기존 국가 지표로 관리되어왔던 지표 들 가운데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의 완결성을 위해 새로 포함되어야 지표

** 신규로 포함되어야 할 지표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1. 통계 프레임워크 구성 ····· 4
2. 전문가 회의와 학술대회: 프레임워크의 확정 및 공유 ····· 5
3. 사회통합 통계 개선·개발방안 및 웰빙 시사점 도출 ····· 6
4. 국가주요지표 및 삶의 질 지표 개선방안 제시 ····· 7

제2장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 8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 ····· 8
1. 사회통합을 설명하는 이론들 ····· 11
2.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들 ····· 12
3.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흡수(Social integration),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개념 차이 ····· 16
4. 사회통합은 원인인가, 결과인가? ····· 17
5. 사회통합의 범위 설정 ····· 18
제2절 사회통합과 웰빙의 관계 ····· 19
1. 사회통합과 삶의 질 ····· 19
2. 사회통합과 사회의 질 ····· 23
제3절 사회통합 관련 사회문제 ····· 26
1. 사회통합과 정책관심 ····· 26
2. 사회통합과 통합영역 쟁점 ····· 28
제4절 사회통합 관련 취약 인구집단 및 지역 간 비교 ····· 32
1. 통계적 표준집단 ····· 32
2. 통계적 취약집단 ····· 35
3. 포용, 연대, 시민성의 지역 간 비교 ····· 49

제5절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 60
1.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해외 및 국내 사례 검토 ····· 60
2.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 69

제3장 사회통합 통계 작성현황 분석 ····· 80

제1절 사회통합 통계작성 현황 ····· 80
1. 사회통계 현황과 사회통합 통계 ····· 80
2. 주요 사회통합관련 조사현황 ····· 108
제2절 사회통합 프레임워크와 작성통계의 비교분석 ····· 136
1. 포용 ····· 136
2. 연대 ····· 138
3. 시민성 ····· 144
4. 지표별 국제비교/고유특성 구분 ····· 153

제4장 사회통합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 156

제1절 문제점 및 개선사항 ····· 156
1. 사회통합 관련 통계조사의 외연 확장 ····· 156
2. 취약집단 관련 통계조사의 개선과 정비 ····· 157
3.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체계화 및 정비 필요 ····· 158
4. 인권 관련 통계조사 부족 ····· 159
5. 정치 참여 관련 특별 조사의 필요 ····· 160
6. 가치관 및 의식 관련 통계조사의 미흡 ····· 161
제2절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 162
1. 단기과제의 실행계획 ····· 162
2. 중장기과제의 실행계획 ····· 164
제3절 주요지표 개선방안 ····· 166
1. 국가주요지표 개선방안 ····· 166
2. 국민 삶의 질 지표 개선방안 ····· 174
3. 하위영역별 필요지표 ····· 180

참고문헌 ····· 182

표 목 차

<표 Ⅱ-1>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 ····· 13
<표 Ⅱ-2> 삶의 질의 영역과 하위요소 ····· 21
<표 Ⅱ-3> 사회의 질의 요인과 영역 ····· 24
<표 Ⅱ-4> 통합영역의 쟁점들 ····· 30
<표 Ⅱ-5> 사회변동에 따른 도전들 ····· 31
<표 Ⅱ-6> 통계적 표준집단 ····· 34
<표 Ⅱ-7> 관심영역별 통계적 취약집단 ····· 36
<표 Ⅱ-8>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38
<표 Ⅱ-9>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38
<표 Ⅱ-10> 장애유형별 사회적 차별정도: 취업 ····· 40
<표 Ⅱ-11> 장애유형별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소득(임금) ····· 40
<표 Ⅱ-12> 취업장애인의 임금수준 ····· 40
<표 Ⅱ-13>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한국 생활 어려움 ····· 41
<표 Ⅱ-14>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사회적 차별 경험 ····· 42
<표 Ⅱ-15>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월평균 임금 ····· 44
<표 Ⅱ-16>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활동 참여율 ····· 45
<표 Ⅱ-17> 결혼이민자의 온라인 사회활동 참여율 ····· 46
<표 Ⅱ-18>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모임・활동별 참여 의향 ····· 47
<표 Ⅱ-19>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47
<표 Ⅱ-20>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에서의 투표경험 ····· 49
<표 Ⅱ-21>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 50
<표 Ⅱ-22> 다음세대에서의 계층이동 가능성 ····· 51
<표 Ⅱ-23> 기부경험 및 향후 기부의사 ····· 52
<표 Ⅱ-24> 일반적인 인간관계, 이웃,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 53
<표 Ⅱ-25> 일반인에 대한 신뢰(1) ····· 54
<표 Ⅱ-26> 일반인에 대한 신뢰(2) ····· 54
<표 Ⅱ-27> 사회적 지원망 ····· 55
<표 Ⅱ-28> 선거참여율 ····· 56
<표 Ⅱ-29> 지역별 단체참여 유형 ····· 57

<표 Ⅱ-30> 준법수준(자기 평가) ····· 58
<표 Ⅱ-31>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치 효능감 ····· 58
<표 Ⅱ-32> 부패에 대한 인식 ····· 59
<표 Ⅱ-33> 도민 정책 신뢰도 ····· 59
<표 Ⅱ-34> 사회통합 상태지표 ····· 64
<표 Ⅱ-35> 사회통합 조건지표 ····· 64
<표 Ⅱ-36> 사회통합의 다섯 가지 차원 ····· 68
<표 Ⅱ-37> 국내외 사례 및 본 연구 프레임워크 비교 ····· 71
<표 Ⅱ-38> 포용 영역 통계 생산 프레임워크 ····· 75
<표 Ⅱ-39> 연대 영역 통계 생산 프레임워크 ····· 77
<표 Ⅱ-40> 시민성 영역 통계 생산 프레임워크 ····· 78
<표 Ⅲ-1> 포용 관련 통계 ····· 81
<표 Ⅲ-2> 연대 관련 통계 ····· 85
<표 Ⅲ-3> 시민성 관련 통계 ····· 93
<표 Ⅲ-4> 사회조사 개요 ····· 108
<표 Ⅲ-5> 사회조사 세부 조사항목 ····· 109
<표 Ⅲ-6> 사회조사에서 사회통합 관련 구체적 설문문항 ····· 109
<표 Ⅲ-7> 사회통합실태조사 개요 ····· 111
<표 Ⅲ-8>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 세부내용 ····· 112
<표 Ⅲ-9> 사회통합실태조사 연도별 조사항목 변경사항 ····· 113
<표 Ⅲ-10>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 120
<표 Ⅲ-11> 국민인권실태조사 개요 ····· 122
<표 Ⅲ-12> 국민인권실태조사 조사대상별 조사주제 ····· 124
<표 Ⅲ-13> 중앙선거권리위원회조사 개요 ····· 125
<표 Ⅲ-14> 중앙선거권리위원회조사 조사분야별 조사항목 ····· 126
<표 Ⅲ-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 ····· 128
<표 Ⅲ-16> 지역사회조사 개요 ····· 129
<표 Ⅲ-17> 지역사회조사 사회통합 관련 항목 및 질문 ····· 129
<표 Ⅲ-18>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개요 ····· 133
<표 Ⅲ-19>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세부 조사항목 ····· 134
<표 Ⅲ-20> 지표별 국제비교/고유특성 구분 ····· 154

<표 Ⅳ-1> 국가주요지표 분류체계 중 사회통합 통계 ····· 167
<표 Ⅳ-2> 국가주요지표 영역과 프레임워크 영역의 비교 ····· 169
<표 Ⅳ-3>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와 국가주요지표 체계개선안 ····· 172
<표 Ⅳ-4> 하위영역별 개선·개발 필요 지표 ····· 174
<표 Ⅳ-5>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사회통합 관련 지표 ····· 175
<표 Ⅳ-6> 국민 삶의 질 지표 영역과 프레임워크 영역의 비교 ····· 178
<표 Ⅳ-7>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와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개선안 ··· 180
<표 Ⅳ-8> 하위영역별 개선·개발 필요 지표 ····· 181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사회통합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과정 ····· 6
<그림 Ⅱ-1> 삶의 질의 영향 요인들: 분석 결과 ····· 22
<그림 Ⅱ-2> 주관적 웰빙 순위 ····· 22
<그림 Ⅱ-3> 사회의 질 조건 ····· 25
<그림 Ⅱ-4>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직종별 분포 ····· 43
<그림 Ⅱ-5>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중 '의논・같이 할 상대 없음' 비율(2012, 2015) ····· 46
<그림 Ⅱ-6> UN ECLAC의 사회통합 개념틀 ····· 61
<그림 Ⅱ-7> Tree of the key dimensions of social cohesion ····· 63
<그림 Ⅱ-8>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 65
<그림 Ⅱ-9> 변화하는 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대한 프레임워크 ····· 66
<그림 Ⅱ-10> 국민통합지표 지표체계의 구성 ····· 69
<그림 Ⅱ-11> 사회통합 프레임워크 ····· 79
<그림 Ⅲ-1>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구조 ····· 119
<그림 Ⅲ-2> 국민인권의식조사의 이론적 프레임워크 ····· 12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통합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중에서 어떤 이유로든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포용(inclusion)과 사회집단 간에 갈등이 없고 서로 신뢰가 넘치는 연대(cohesion), 그리고 구성원들이 시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질서를 지키는 시민성(citizenship)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회통계의 영역으로서 사회통합은 다른 영역들과 몇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이 다른 영역들에 비해 추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이라는 점이다. 가족, 교육, 일, 소득과 소비 등 다른 영역들은 삶의 영역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면이 있다. 하지만 사회통합은 삶의 직접적 현실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향하는 이상적 상태를 표현한다. 이처럼 사회통합이 가치지향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표출되었다.

2014년의 사회통계 프레임워크(framework) 총괄체계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영역을 “공동체・사회참여・거버넌스”로 이름 짓고 그 내용을 국민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고, 정치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는지의 정도라고 규정한다. 또한 2011년 작성된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체계에서는 “가족과 공동체”, “시민참여”, “사회복지”로 나뉘어 있다. 사회통계 프레임워크를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활용하는 호주의 2001년 웰빙 측정 프레임워크(Measuring Wellbeing framework)에서도 삶의 질 지수의 지표체계와 유사하게 별도로 사회통합과 관련된 영역을 두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 영역에 포함시켰다. 반면

2012년 전면적으로 개편된 통계청 사회지표 체계나 2013년 이후 작성되기 시작해 매년 갱신되는 국가주요지표에서는 “사회통합”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매년 통계개발원에서 작성되는 사회동향 보고서에서도 “사회통합”을 영역들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다.

이처럼 “사회통합”은 널리 통용되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론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들에 따라 “사회통합”을 “공동체(community)”로 혹은 “거버넌스(governance)” 등으로 강조점을 달리 두어 표현한다. 이러한 사회통합 영역의 정체성의 다양성 혹은 모호함은 사회통합이 다른 영역들처럼 사회생활의 자연스럽고 일차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차적이고 파생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통합 영역의 명칭과 정체성이 뚜렷하고 일관되지 못한 것은 내용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된다. 사회통합 영역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통합 영역의 프레임워크는 다른 어느 영역 못지않게 아니 다른 영역들보다 더 내용을 분명히 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사회통합 영역은 민주화 이후의 가치변화, 정보통신화에 따른 미디어의 발달,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사회 변화와 함께, 사회적 신뢰와 참여의 하락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확충 필요성 증대,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이동성 제고의 필요성 증가, 배려와 관용의 중요성 강조 및 사회적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증가 등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사회통합 관련 통계의 생산이 부족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 영역 관련 통계 프레임워크의 작성은 신규 통계 및 지표 수요를 발굴하고 통계와 지표의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회통합 영역 프레임워크는 사회통합에 대한 핵심 개념 간의 논리적 관계를 설계도(mapping)로 그려냄으로써 주요 쟁점과 취약 집단을 규정하고 사회통합 영역 통계와 지표가 어떻게 측정・분석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사회통합 영역의 통계 생산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최근 시작한 “사회통합실태조사” 및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이외에는 부분적으로만 관련된 조사들이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이며 따라서 기관별로 내용이나 분류기준과 작성 방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여 통계의 불일치, 통계의 중복 및 누락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사회통합 관련 생산 통계 및 지표의 조정과 통폐합을 위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사회통합 영역에서의 주요 쟁점과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에 생산·활용되고 있는 통계 및 지표를 점검함으로써 향후 사회통합이 개인의 웰빙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의 통계 프레임워크를 작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통계 프레임워크는 향후 사회통합 영역에서의 통계 생산·작성·활용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개발 및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사회통합 통계의 체계적 생산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회통합 통계의 기본 프레임워크 구성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기 산재되어 있는 자료 생산의 현황과 생산방식을 비교·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고, 그러한 비판적 검토와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사회통합 영역에 관한 신뢰할만한 자료생산과 관리 및 공표를 위한 일련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다양한 기관들에서 조사되고 공표되는 자료들은 공식적으로 통계청의 승인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절차나 내용상의 기본적인 점검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각 조사의 특성과 장점을 보장하면서도 사회통합의 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조사문항의 구성과 설계, 조사방식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특정부분의 중복이나 부재는 물론 동일 내용임에도 측정방식의 차이나 시점, 주체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통합 현실을 적확하게 포착하면서도 각 조사목적에 합당하고 일정한 질적 수준이 보장된 사회통합에 대한 조사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된 자료의 분해와 재조정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와 충분 단위가 보장된 정보의 수집과 공표 관리 등의 체계적인 밑그림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성을 통해 사회통합 영역 통계의 생산과 집적, 관리, 공표 등의 작업과정을 체계화하고, 공식통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반영 및 가족 통계 생산의 연속성과 현실성 사이의 균형점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과제가 수행해야할 주요한 연구범주는 다음과 같다.

1. 통계 프레임워크 구성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개념적 도구이어야만 할 것이다.

첫째, 사회통계의 하위영역으로 사회통합 통계는 궁극적으로는 개인 삶의 웰빙과 사회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통합에 대한 일치된 개념 규정과 공통의 생각이 존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연역적으로 사회통합을 규정하고 이로부터 사회통합의 하위영역과 더 나아가 지표를 선정하기 보다는, 이론적 연역과 현실로부터의 귀납을 병행하며 해외 사례와 한국의 현실을 종합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통합에 대한 한국적 현실에 적합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프레임워크가 도출될 수 있다.

둘째, 사회통합 통계는 측정의 궁극적 단위는 사회 전체이지만 사회 전체에 대한 측정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통합 통계는 개인들의 경험과 의견, 생각과 행동의 실태를 사회 전체 수준에서 종합함으로써 사회의 통합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정도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 실태 등이 어떤 분포를 보일지에 대한 이론적 평가기준과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통합 통계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현재 사회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정부의 사회정책에 피드

백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시민사회에서 관심을 가진 이슈들에 대응하는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비해야만 한다(이재열 외, 2014: 61).

넷째, 시간흐름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은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그 촉진과 장애의 요인들이 변화하며,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조건과 가치관,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통합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조사에서는 사회 전반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통합의 조건과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객관적 조건 및 주관적 가치와 의식의 변화가 반영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문가 회의와 학술대회: 프레임워크의 확정 및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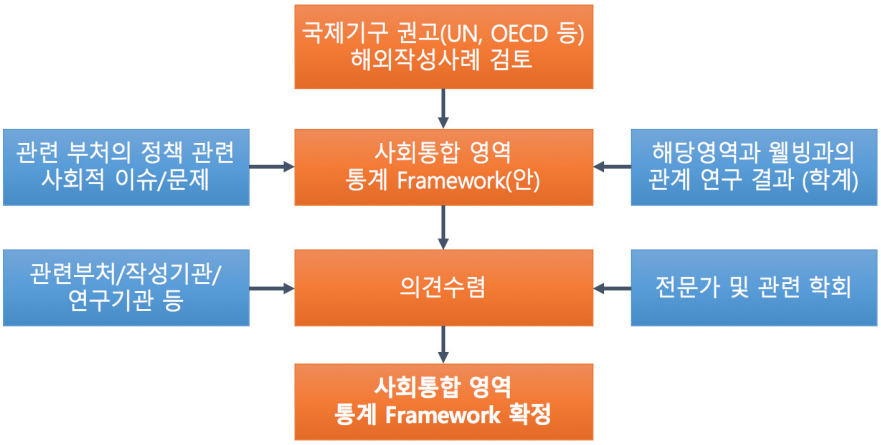
국내외 사회통합 관련 이론의 검토는 물론 사회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쟁점과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반영하여 구성된 프레임워크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점검 및 수정, 그리고 공유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국내외 사회통합 통계생산 현황 및 자료검토를 통한 사회통합 통계 생산방식의 특징 및 문제점 도출은 물론 이에 기초하여 구성한 사회통합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에 관한 의견청취의 과정을 밟았다.

자문 및 의견청취 과정에는 10명 이상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현재 사회통합 통계 생산방식의 장점과 문제점으로부터 대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자문의 내용은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구성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사회통합 통계 생산방식의 성과와 한계 검토 및 정책쟁점에 대응한 통계 생산 및 집적 방식 논의
- 사회통합 통계생산의 효율적 관리 및 주기설정에 관한 의견청취
- 연구진이 구성한 예비 프레임워크案에 대한 적실성 검토

이러한 연구의 과정과 방법을 통한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구성의 단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Ⅰ-1〉 사회통합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과정



3. 사회통합 통계 개선 · 개발방안 및 웰빙 시사점 도출

확정된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현재의 사회통합 통계 작성현황을 점검하고 각기 통계생산의 장점과 취약성 등을 비교평가,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는 정부 승인통계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중복통계, 신규개발이 필요한 통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추가·보완이 필요하거나 신규로 개발할 통계를 발굴함으로써 사회통합 통계의 개선사항 및 개발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도출된 개선·개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 이행방안(action plan)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관련 주무기관의 책무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책임과 역할의 명기는 개선·개발의 과제를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영역의 통계조사가 다른 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발전되고 정부 승인통계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향후 정부 승인 통계로 발전시켜 사회통합 관련 통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비승인 통계라도 내용적, 정책적 관련성에 따라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현재 한국 사회통합의 상태와 변화 방향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국가주요지표 체계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조건과 웰빙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한 논거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통합 영역과 관련된 주요 사회지표를 작성하여 현재의 상태와 향후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통합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 과제를 제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주요지표 검토 및 개선 작업에는 지표명으로부터 작성방법, 주기, 자료출처, 산식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4. 국가주요지표 및 삶의 질 지표 개선방안 제시

사회통계 프레임워크는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절차 즉 조사의 설계에서부터 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의 보고에 이르는 과정에 걸쳐 필요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실제 수행절차를 제안하는 것 뿐 아니라 이러한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지표들도 규정한다. 국가통계를 활용한 중요 지표로는 사회지표,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삶의 질 지표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e-나라지표는 조사통계 외에 행정통계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제출한 지표들을 담고 있어 사회통계 프레임워크가 그 내용을 규정하기 어렵다. 반면 국가주요지표와 삶의 질 지표는 그 대부분의 지표들이 국가 주요 조사통계들에 기반하고 있어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의 정비는 이들 지표체계에 대해서도 갖는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해외 사례의 검토, 그리고 통계생산 현실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내용이 국가주요지표와 삶의 질 지표에 대해 어떤 함의와 제안점들을 갖는가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제2장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제 1절 사회통합의 개념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의 발전 궤도에 오르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 낸 지도 어느덧 20여년이 지났다.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진보의 기반위에서 사회가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며 동시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최근 들어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로 인한 사회 격차의 확대, 고용구조의 악화로 인한 빈곤의 가능성 증가, 그에 따른 사회 위험의 확대가 심화되고, 사회집단 간 이견과 충돌이 일상화되면서 사회통합에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사회통합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난해하고 복잡한 개념이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통합은 법적 및 제도적으로 규정된 시민권(citizenship) 또는 국적(nationality)의 틀 안에서만 협소하게 해석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통합적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즉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성원권의 부여라는 협의의 정의와 사회성원들과 사회 간의, 그리고 사회성원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이라는 광의의 정의가 혼재되어 사용된다. 한국사회가 미래지향적 발전모델을 추구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방법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의 문제가 대두되었음을 상기해보면 보다 적극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광의의 정의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이라는 말에 대한 일반적 인식 가운데는 사회성원들이 동일한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획일적 사고와 행동에 의해 질서 잡힌 사회를 떠올리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새로운 성원들을 전통적 가치와 규범으로 사회화하고, 규칙과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통제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예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전체주의 혹은 권위주의 사회이겠지만,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한 경우에도 20세기 초반의 사회학자 탈콧 파슨즈의 구조기능주의처럼 사회화와 사회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사회의 다양한 부문들 간에 기능적 충돌이 없는 사회를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진 사회로 보는 경우도 있다.

구조기능주의 사회이론을 주장한 파슨즈는 사회체계가 스스로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네 가지 기능으로서 환경에의 적응(Adaptation: A), 목표달성(Goal attainment: G), 통합(Integration: I), 그리고 잠재성(Latency: L)을 제시하였다. 이들 각각의 앞자를 따서 AGIL 개념틀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구조기능주의적 설명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파슨즈는 통합이 규범과 규칙에 의해서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며, 이때 사회의 유지는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부분들이 서로 조응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파슨즈의 주장에 대해 갈등주의 사회학자들은 사회의 유지를 위해 갈등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또한 거시적 구조 중심의 사고라고 비판하며, 사회 성원들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록우드는 파슨즈에 대한 갈등주의 사회학자들의 비판은 동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역시 사회를 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며 이는 체계의 통합과 다른 사회성원들 간의 사회적 통합의 차원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1] 체계와 사회의 통합이라는 구분은 영국의 사회학자 록우드(Lockwood, 1964)가 1950년대 미국의 사회이론을 주도했던 파슨즈(Parsons)의 규범적 기능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동시에 이를 비판하며 등장했던 영국의 다렌도르프(Dahrendorf) 및 렉스(Rex) 등의 갈등주의 이론을 비판하며 처음 사용한

1) 기든스(Giddens, 1984) 역시 체계의 통합과 사회의 통합을 구분한다. 하지만 록우드와 달리 기든스는 사회의 통합을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같은 상황에 놓인(co-present) 행위자들 간의 조정의 문제로 생각한다. 이는 본래 록우드가 주장했던 사회의 통합보다 더 제한적인 규정이며, 이 글에서는 기든스보다는 록우드의 개념으로 사회의 통합을 이해한다.

개념이다.

파슨즈의 사회통합에 대한 주장은 20세기 초기와 중반 당시에도 계급적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경도된 면이 있었지만, 계급적 불평등 외에도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고 개인의 가치와 견해도 훨씬 다원화된 21세기 현재 시점에서는 더욱 현실과 맞지 않는 면이 많다. 따라서 사회통합에 대해서도 보다 열린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의 논의들에서는 통합적 사회를 민주적 수단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말한다(European Committee for Social Cohesion, 2004). 즉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개인, 집단, 결사체 등 사회적 단위들 간의 연결 및 관계를 다루는 사회적 노력" 또는 "구성원들 간 신뢰, 희망, 상호호혜를 바탕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도전의식을 공유하며,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McCracken, 1998).[2] 또한 사회통합은 불평등과 차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역동적인 사회적 관계, 공유된 가치와 상징,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및 결속감, 구성원들 간 신뢰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노력으로 정의되곤 한다(Woolley, 1998; Jenson, 1998). 결국 사회통합은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높이고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줄이고자 하며, 통합된 사회는 차이, 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및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자본 수준을 증대함으로써 만들어 진다는 관점이 우세하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통합은 최근의 논의를 수용하여 사회의 성원들 및 하위 단위들 간의 공존과 협력의 의미를 갖는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사회통합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문화권마다 사회마다 그 방식과 내용은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해외에서 이루어진 사회통합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21세기 한국

2)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계에서조차 social integration, social inclusion, social cohesion 등 유사한 개념들이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동일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원래 사회통합 개념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에서 비롯된다. 더욱이 국제이주의 증가, 빈곤, 양극화, 집단 간 갈등의 심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들이 사회통합에 대한 충분한 조작적 정의 작업과 이론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이유로 실천적 정책의제로 삼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회통합의 과다라고 부를 만하다.

사회에 적합한 사회통합의 개념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우선 사회통합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1. 사회통합을 설명하는 이론들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그동안 연대(solidarity), 분화(specialization), 독점(monopoly)의 세 가지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먼저 연대 패러다임은 프랑스 공화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데, 공동선(common good)에 대한 가치지향 및 이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가 사회통합성 약화의 원인이라고 간주한다. 사회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책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 경제, 사회영역에서의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중시한다.

다음으로 분화 패러다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사회통합의 약화를 사회의 기능적 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 혹은 필연적인 결과로 인식한다. 이 시각은 사회통합의 약화에 대해 구체적 원인을 제시하는데, 사회통합은 사회적 차별, 노동시장 분리와 같은 영역 간 부적절한 분리, 특정 영역에 대한 부적절한 규칙의 적용, 영역 간 자유로운 이동 및 교류 장애로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 차별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즉 사회적 이동성의 복원을 사회통합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독점 패러다임은 사회통합의 약화를 집단 및 계층의 독점적 지위형성의 결과로 이해한다. 특정 사회계층의 권력독점, 계층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등이 사회통합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이 시각은 사회통합의 약화와 강화는 사회불평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사회통합의 복원을 위한 정책적 프로그램의 핵심에는 공정한 경쟁과 수긍할만한 부의 분배를 통한 사회불평등의 감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회통합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고려했을 때,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의 위기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한 종합적 인식 하에서 설명하

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즉, 사회통합의 약화는 시민적 윤리의 약화, 연대의 약화, 물질적 불평등의 확대 등의 포괄적인 입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사회통합 논의의 핵심은 사회적 이동성과 불평등의 감소(포용), 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지켜야할 의무와 누려야할 권리(시민성), 그리고 포용과 시민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삶(연대)의 문제가 존재한다.

2.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들

사회통합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정의된다. 록우드(Lockwood, 1964)는 사회통합을 “개인이나 집단 간에 갈등적이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하버마스(Habermas, 1985)는 “생활세계 수준에서 사회규범, 개인의 정체성, 문화적 의미 등에 대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기든스(Giddens, 1984)는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상에서 행위자나 집단들 간에 호혜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등으로 정의한다. 무젤리스의 정의는 이들보다 더 구체적이다(Mouzelis, 1997). 그에 의하면 사회통합은 집단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새로운 소수민족이나 인종집단이 유입되어 집단 간 갈등이 생겨날 경우 사회통합의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회통합모델이 가능하다고 제시한다(이재열 외, 2014에서 재인용).

1) 구분통합(compartmentalized mode of integration): 상이한 문화를 지닌 집단들이 자율적으로 병존하되, 집단 간에는 최소한의 소통과 교환만 유지하는 것
2) 독점적 통합(monological type of integration): 주도적인 문화가 여타의 문화전통이 가진 정체성과 역동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지배하는 것
3) 혼합주의적 통합(syncretic integration): 매우 선택적으로 각각의 문화전통의 요소들을 혼합하되, 각 문화의 내부논리나 문화의 역사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방법

4) 소통적 통합(communicative integration): 각각의 문화전통의 자율성과 내적 논리를 존중하되, 활발하게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

최근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가령 EU에서는 사회통합을 하나의 완성된 상태의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민주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그 사회가 선택한 '준거틀(reference framework)'로 인식할 것을 제안한다. 즉 사회통합 프레임워크는 각 사회의 구체적 맥락 하에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각 국가별, 기관별로 '사회통합지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기도 하다.

<표 Ⅱ-1>은 UN, EU,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들과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통합 연구가 그 정의를 다루는 방식을 보여준다.

〈표 Ⅱ-1〉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

UN 경제사회국 (UN DESA, 2009)	사회통합은 사회가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최종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인간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동적 과정. 모든 사람들이 권리와 존엄의 평등에 기하여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가치, 제도, 관계를 증진하는 과정
UN 세계사회발전정상회의 (UN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1995)	1) 배제와 대비되는 포용으로서 사회통합: 더 많은 사람들에 게 더 많은 정의, 물질적 복지, 정치적 자유의 혜택을 주는 것 2) 해체와 대비되는 조화와 유대(harmony and solidarity): 가족, 공동체 등이 해체되고 범죄나 부패 등으로 사회질서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UN 인간개발보고서, 2013	사회통합: '고용', '개인 복지의 인식', '사회의 인식', '안전' 4측면으로 구성 1) 고용: 25세 이상 성인 인구의 고용비율과 15-24세 청년의 실업률 등 2) 개인 복지의 인식: 생활만족, 선택자유의 만족, 직업만족 등 3) 사회의 인식: 인간 신뢰와 중앙정부 신뢰, 지역사회 만족 등 4) 안전: 살인건수(인구 10만명 당), 자살건수(인구 10만명 당) 등
Council of Europe, 2005	격차를 최소화하고 양극화를 예방함으로써 장기인 측면에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웰빙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 웰빙은 다음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됨: 이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다양성을 고려한 인간 존엄성 존중, 개인 및 집단의 자율성,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 참여

Berger-Schmitt, 2000	사회통합을 '불평등 사회 배제의 축소'와 '사회자본의 강화'라는 두 가지 사회 목표 차원(societal goal dimensions)으로 구성함
OECD, 2009	경제발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발전의 측정에 초점. 국가간・국가내 사회의 전반적 여건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 여기서 사회발전이란 건강, 교육, 경제력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발전을 말하는 것이며 자립(Self-Sufficiency), 형평(Equity), 건강(Health), 사회통합(Social Cohesion) 등의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 그리고 이 네 가지 부문 외에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요인으로 일반여건(General Context)을 제시
노대명 외, 2009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
박준 외, 2009	한 사회의 갈등지수는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구조 요인과 갈등관리시스템의 효과성에 결정된다고 봄 사회갈등지수 = 지니계수/0.5*(민주주의지수+정부효과성지수)
장용석 외, 2012	사회적 유대나 결속을 반영하는 다원적 요소를 통칭하는 개념
전태국, 2014	불평등과 다문화주의 1) 불평등: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누릴 권리의 평등정도 2) 다문화주의: 권위주의의 반대로, 상이한 문화들의 이질성을 인정

사회통합이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 국가적 및 초국가적 수준의 핵심 사회적 목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통합은 불평등 수준이나 사회 내 사회적 관계의 강도와 같은 사회의 질에 초점을 두고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사회통합의 요소들을 인식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은 사회의 질 및 집단적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OECD, 2009). 결국 사회통합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회성원들과 하위 단위들이 함께 노력하며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수준이 높은 공동체는 "개인, 집단, 결사체 등 사회적 단위들 간의 연결 및 관계를 다루는 사회적 노력" 또는 "구성원들 간 신뢰, 희망, 상호호혜를 바탕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도전의식을 공유하며,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의해 건설될 수 있다(McCracken, 1998).[3] 또한 맥스웰도 사회통합이란 공동체에

서 공유되는 가치를 형성하고, 부와 소득의 차이를 축소시키며, 공통된 도전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는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Maxwell, 1996).

사회통합을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ocial Cohesion, 2004)는 사회통합을 "격차를 최소화하고 양극화를 예방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보장할 사회적 역량"으로 정의한다. 이들에 의하면, "통합적 사회란 민주적 수단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의미한다. 다렌도르프(Dahrendorf et al., 1995) 역시 사회통합을 공유된 가치와 제도의 틀 속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가 사회과학에서는 대개 추상적 수준에서 다양한 차원들과 요인들을 아우르는 형태로 제시되는데 반해, 사회심리학은 사회통합 개념의 규정과 측정은 미시적 수준의 태도와 행위를 공동체 수준의 속성들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는다. 즉 사회통합은 미시와 거시의 상호작용에 의해 역동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Friedkin, 2004). 가령 미시적 수준의 사회통합은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몰입 정도나 소속감과 같은 태도적 차원과 집단참여나 상호영향 관계와 같은 행위적 차원에서 표현되며, 이러한 태도와 행위가 공동체 내에서 분포된 방식-즉 집단 정체성, 태도 차원의 동의 수준, 행위의 유사성 수준 등-이 집합적 수준의 통합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수단은 개인이 집단에 가진 충성도와 애착 정도가 된다(Hogg, 1992).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어느 수준에 초점을 두느냐에 관계없이, 분명한 사실은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배제나 사회자본과 같은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단순한 조화를 의미하는 사회적 융합과 사회적 포용을 넘어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통합으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

3)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계에서조차 social integration(사회적 흡수), social inclusion(사회적 포용), social cohesion(사회통합) 등 유사한 개념들이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사회통합 개념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국제이주의 증가, 양극화, 사회 집단 간 갈등의 심화에 직면한 각국 정부들이 사회통합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검토와 준비 작업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천적 정책의제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국도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는 아니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사회통합은 불평등과 차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역동적인 사회적 관계, 공유된 가치와 상징,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및 결속감, 구성원들 간 신뢰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Woolley, 1998; Jenson, 1998). 즉 사회통합은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신뢰와 결속 등 사회적 관계를 지칭함과 동시에 소득불평등과 같은 물적 토대를 일컫는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항상 차이, 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및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자본 수준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은 1) 결속을 촉진하는 가치, 정체성, 문화, 2) 차이와 분리 - 불평등, 문화적 다양성, 지역적 분리, 3) 결사체와 연결망, 공동체 하부조직, 소속감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O'Connor 1998).

3.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흡수(Social integration),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개념 차이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빈곤과 실업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사회적 흡수(social integration)는 사회성원이 된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획일성을 강조하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이에 비해 사회 통합(social cohesion)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강력하고 긍정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광의의 사회통합 개념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이에 부합하는 사회통합의 개념은 세 번째 용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사회통합 논의는 이 세 가지 모두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한 사회 갈등의 수준이나 통합의 내용 또는 발전 단계에 따라 사

회적 흡수(social integration) →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 사회 통합(social cohesion)의 순으로 사회통합 논의가 변해간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배 가치에 대한 강제 통합(social integration)에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inclusion)으로 나아가고, 그것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개념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접근에서 출발하여 복지적 접근을 넘어서 종합/교차 접근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사회통합은 원인인가, 결과인가?

사회통합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통합을 다른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생활 환경의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통합을 원인으로 보는 입장은 사회통합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사회통합이 경제적 성취와 웰빙, 건강, 민주적 제도 참여율과 정당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령 퍼트남은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에서 사회자본과 교육성취, 건강수준, 조세 회피율, 웰빙 간에는 강한 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회통합은 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원인이 된다(Putnam, 2001).

사회통합을 결과로 보는 입장은 여러 요인에 의해, 세계화와 신기술, 다양성, 공동체 분야에서의 거시적 변동의 결과로 통합이 약화된다고 본다. 즉 사회통합은 다양한 층위에서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영역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성과로 간주된다. 가령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 주변화(marginalization)가 심화되고, 양극화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사회통합이 저하되었다는 입장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사회통합이 여러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동시에 영향을 받는 양자적 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Beauvais & Jenson(2002)은 사회통합과 건강과의 관계를 논하면서, 사회통합과 정부 수행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정부 수행은 사회통합과 건강에 동시에 영향 미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통합과 관련된 논의는 이론적 전통마다

학자들마다 문화마다 다양한 정의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을 찾는 일일 것이다. 이희길, 신지성(2010)은 사회통합과 관련해 세 가지 쟁점을 제시한다.

첫째는 사회통합을 일련의 과정(process)으로 볼 것인지 vs 상태(a state of affair)로 볼 것인지의 쟁점이다. 사회통합 개념을 과정으로 정의하는 동태적 정의는 사회통합을 특정 목표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간주하는 반면 상태로 보는 정태적 정의에서는 인간의 집단적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상태로 정의한다.

두 번째 쟁점은 사회통합과 특정 가치지향과의 관련성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사회통합은 가치지향적 개념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다. 유럽평의회의 경우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의 관점에서, 그리고 권리에 대한 접근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바라본다. 따라서 가치지향을 포함한 정의는 특정한 문화의 가치를 배제하기 어렵고, 문화 간 비교도 어렵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정의함에 있어 특정 가치를 전제하기 보다는 이념적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쟁점은 사회자본과 사회통합 개념과의 관계이다. 사회 통합을 과정이 아닌 상태로 보고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접근을 취할 경우, 사회통합은 사회자본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이희길・신지성은 사회통합을 사회자본과 동일하게 취하는 버거슈미트(Berger-Schmitt, 2000)의 경우도 있으나,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사회자본과 함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5. 사회통합의 범위 설정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개념 규정될 수 있고 또한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통계의 영역으로서 사회통합을 현실적으로 범위설정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용과 평등, 공

정성과 신뢰, 시민됨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여 사회통합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사회통합과 구분하고자 한다.

우선 삶의 만족과 웰빙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회통합과 분리하는 것이 옳다. 웰빙은 진보(progress)와 함께 사회통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향점이다. 또한 웰빙은 개인 및 사회차원에서 사회의 여러 영역들이 그 자체로 바람직한 상태에 있고 또한 영역들 간에도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결과로 얻어진다. 따라서 웰빙을 사회통계의 한 영역인 사회통합에 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체계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종종 언급되는 것이 사회보장과 복지이다. 사회보장과 복지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보장과 복지가 사회통합과 동일시되거나 일부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최근 국제적으로 사회보장과 복지는 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다움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 예컨대 적정 수준의 경제적 소득, 교육과 훈련, 여가와 문화, 경제활동과 일,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과 복지에 관련된 내용은 다양한 영역들에 걸친 범영역 쟁점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웰빙과 삶의 질, 사회보장과 복지와 구분되는 사회통합 영역의 범위는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민사회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과 범위에서 개인간,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에 걸친 관계와 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사회통합의 개념적, 현실적 범위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사회통합과 웰빙의 관계

1. 사회통합과 삶의 질

사회통합 통계를 생산 구축하는 이유는 사회통합의 수준과 현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실태와 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한 공공 개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통계의 일환으로 사회통합 통계의 측정 목적은 사회통계의 근본적 측정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통계의 측정 목적이 국민 삶의 질과 사회의 발전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인간 웰빙(human well-being)을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 웰빙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이재열 외, 2014). 최근 들어 인간 웰빙의 개념은 단순한 감정이나 심리적 행복보다는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능력을 갖는 것'의 의미로 진화하고 있다(Shah and Marks, 2004: 2; 이재열 외, 2014에서 재인용).

경제적 자원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가 선형적이지 않다는 이스털린(Easterlin)의 역설은 국가 단위의 비교연구에서 흔히 발견되는 바이다(Eaterlin, 1974). 특히 한국의 경우, 세계적인 조사에서 국민의 평균 행복도가 경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웰빙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거시 수준의 경제 성장과는 구분되는 개인들의 웰빙에 대한 미시적 관심은 웰빙에 대한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실제로 OECD의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분석적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사회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웰빙이지만(이재열 외, 2014), GDP 같은 거시경제 통계만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조건들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다"(OECD, 2014).

개인적 차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사회지표들은 측정모델이나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볼 때 경제적 요소, 사회관계적 요소, 사회심리적 요소, 환경적 요소, 제도적 요소, 신체적/인구학적 요소 등이 포함된다(김승권 외, 2008). 아래 표에 요약된 바와 같이, 경제적 요소에는 소득 및 생활수준, 주거, 교육수준, 직업, 여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사회관계적 요소에는 친구관계, 결혼생활, 가족생활, 이웃관계가 포함되며, 사회심리적 요소에는 성격, 문화가, 환경적 요소에는 물리적 환경, 재난, 지역사회, 치안이, 제도적 요소에는 민주주의 및 사회보장이, 신체적/인구학적 요소에는 건강, 연령, 성이라는 하위요소가 포함된다.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사회관계적 요소에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 또는 이웃관계와 같이 일차적인 집단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삶의 질에서 일상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Ⅱ-2〉 삶의 질의 영역과 하위요소

영역	하위요소		
경제적 요소	- 소득 및 생활수준	- 주택	
	- 학력	- 직업	- 여가
사회관계적 요소	- 친구관계	- 결혼생활	
	- 가족생활	- 이웃관계	
사회심리적 요소	- 성격	- 문화	
환경적 요소	- 환경	- 재난	
	- 지역사회	- 치안	
제도적 요소	- 민주주의	- 사회보장	
신체적/인구학적 요소	- 건강	- 연령	- 성

자료: 김승권 외(2008). p32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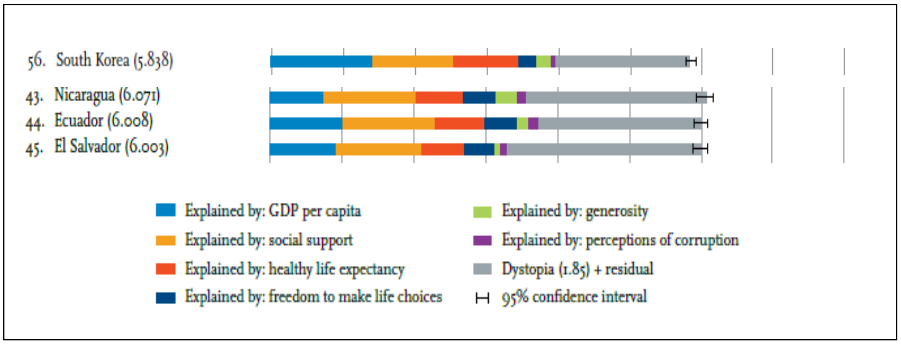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최근 발간된 UN의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행복의 사회적 기반(social foundation of happiness)을 강조한다(UN, 2017).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는 전 세계의 행복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여섯 개의 요인들을 주목하였는데, 그 중 GDP와 건강수명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가 모두 사회적 기반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들 요인들을 각각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인생에서 선택의 자유(freedom to make life choices), 관용과 아량(generosity), 정부 및 기업에서 투명과 청렴(absence of corruption in government and business) 등이다. 이들 모두 사회통합과 관련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이들 사회적 기반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그림 Ⅱ-1〉 삶의 질의 영향 요인들: 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antril Ladder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Cantril Ladder
Log GDP per capita	0.341 (0.06)***	-.002 (0.009)	0.01 (0.008)	0.343 (0.06)***
Social support	2.332 (0.407)***	0.255 (0.051)***	-0.258 (0.047)***	1.813 (0.407)***
Healthy life expectancy at birth	0.029 (0.008)***	0.0002 (0.001)	0.001 (0.001)	0.028 (0.008)***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1.098 (0.31)***	0.325 (0.039)***	-.081 (0.043)*	0.403 (0.301)
Generosity	0.842 (0.273)***	0.164 (0.031)***	-.006 (0.029)	0.482 (0.275)*
Perceptions of corruption	-.533 (0.287)*	0.029 (0.028)	0.095 (0.025)***	-.607 (0.276)**
Positive affect				2.199 (0.428)***
Negative affect				0.153 (0.474)
Year fixed effect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umber of countries	155	155	155	155
Number of obs.	1,249	1,246	1,248	1,245
Adjusted R-squared	0.746	0.49	0.233	0.767

그런데 한국은 특히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이들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서 GDP나 다른 요인들에 의해 행복이 증진된 부분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면도 있다.

〈그림 Ⅱ-2〉 주관적 웰빙 순위



위의 그래프는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남미 나라들이 한국보다 주관적 웰빙 순위가 높은 것에 대해 기여하는 요인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일인당 GDP면에서는 한국이 앞서지만 사회적 지지와 선택의 자유, 관용과 아량 등에서 낮은 기여 때문에 결국 한국의 주관적 웰빙 순위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사회통합을 정책적 노력으로 개선하면 개인들의 삶의 질도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려면 사회통합의 현황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측정하려는 노력이 통계 생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회통합과 사회의 질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은 개인적 수준의 삶의 질을 넘어서 관계적 존재로서의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의 질은 개인적 삶의 질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간과될 수 있는 사회의 공공성과 공동의 복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개인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자칫 삶의 질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삶의 질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둘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목표이다(이재열, 2009).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의 질은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의 네 구성 요소를 지닌다(Herrmann, 2006).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의 맥락 안에서 물질적 자원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적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체계, 제도, 기관, 구조)안에서 통합되어있거나 그렇게 느끼는 정도를,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 규범과 가치의 통합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 관계의 강도를, 그리고 역능성은 사회적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수단과 과정들을 의미한다.

〈표 Ⅱ-3〉 사회의 질의 요인과 영역

요인	영역	하위영역
사회경제적 안전성	- 일 - 재정적 안정 - 주거 - 건강 - 교육 - 사회적 관계 - 시간	- 노동복지, 취업안정성, 고용의 질 - 사회보장, 소득, 임금 지원체계에의 의존 - 주거의 질과 비용, 환경의 질 - 보건서비스의 질, 라이프스타일, 신체·정신건강 - 교육과 기술의 수준 및 분배 - 가족, 친구, 자선단체에의 의존성 - 돌봄에 사용된 시간, 이동시간
사회적 포용성	- 시민적 권리 - 노동시장 - 공적 서비스 - 사회적 관계	- 헌법적/정치적 권리, 사회권, 공민권 - 유급노동에의 접근성, 고용의 질 - 보건 서비스, 교통, 상업시설, 레져 서비스 - 우정, 지역사회 참여, 가족생활
사회적 응집성	- 신뢰 - 통합적 규범과 가치 - 사회적 관계 - 정체성	- 일반화된 신뢰, 특정한 신뢰 - 박애주의, 정의, 공동체성, 호혜성 - 수평적 관계망, 수직적 관계망, 연계 - 민족/국가, 지역/지역사회/지방의 상호관계
사회적 역능성	- 개인적 역량과 관계성 - 시민권 - 제도 및 시민참여에 대한 접근성	- 일반적, 정치적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 조언의 유무, 직업적 융통성, 보상적 사회화, 개인적 관계 - 새로운 조직에 대한 지역사회의 개방성, 자발적 행동에 대한 준비성 - 선거 및 정치적 접근성, 정치적 접근성에 대한 재정적 독립, 물리적·사회적 독립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유무

출처: Herrmann(2006). p32-33

이러한 사회적 질 개념은 미시(개인)-거시(사회구조), 그리고 체계와 생활세계 간의 구분 및 연결, 이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의 영향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에 의해 경험되는 사회의 질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한다(Walker and van der Maesen, 2004; 이재열, 2009; 이희길·심수진, 2009).

〈그림 Ⅱ-3〉 사회의 질 조건

사회통합은 이들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응집성, 사회자본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동원되는 자원(Lin, 2001)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사회자본은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돕고(Coleman, 1988),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자본은 그 사회의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Fukuyama, 1995).

사회의 질 프레임워크에서도 잘 나타나있듯이 사회자본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 참여에 기초한다. 결사체 혹은 공동체적 사회관계망은 소속감이나 연대의식이라는 규범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사회자본은 불신에서 비롯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Bian, 2007; Lin, 2001). 사회통합과 사회자본의 관계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작동의 결과로 사회통합이 향상되고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의 총괄체계를 연구한 이재열 외(2014)의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한국과 다른 선진국의 차이는 양적인 성장 수준이 아닌 질적인 수준 특히 사회자본 수준에 있다. 세계가치조사자료를 분석한 국제 비교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수화된 신뢰수준은 높지만 일반화된 신뢰 혹은 공적 신뢰 수준이 낮은 이중적 구조의

저신뢰 사회이다(장수찬, 2004). 사회자본의 수준의 높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 사회는 독특하게 결사체 참여수준, 사회자본, 정부신뢰의 수준 간 악순환의 사이클이 존재한다(장수찬, 2002).

다른 나라에서는 시민사회결사체 참여 등 정치참여가 높은 경우에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일반화된 신뢰와 특수화된 신뢰 사이에는 역설적 관계가 존재한다. 일반화된 신뢰가 낮아질수록 혈연, 지연 학연 등 특정집단에 대한 특수화된 신뢰가 높아지게 되고, 특수화된 신뢰가 높아질수록 일반화된 신뢰가 낮아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존재하게 된다.

제3절 사회통합 관련 사회문제

1. 사회통합과 정책관심

사회통합은 사회통계의 다른 분야와 달리 정부의 담당 부처나 부서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정책자문 위원회로서 사회통합위원회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한 적은 있지만, 상설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굳이 사회통합 정책과 가장 가까운 부처를 들라면 외국인 관련 법무부, 불평등 관련 보건복지부, 인권 관련 인권위원회, 사회자본 관련 행자부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부처들은 모두 자신들의 고유한 정책영역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문제는 이들 부처에서 주된 정책관심 사항이 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은 한국 사회에서 그 정책적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사회통합의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배경은 다음과 같은 한국 사회의 최근 동향과 관련이 깊다.

첫째로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이동성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까지

빠른 경제성장과 높지 않은 불평등 수준을 보이는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졌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불평등 수준 증가와 함께 이동성이 감소하면서 불평등의 대물림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사회적 이동성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현재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노력에 따른 성과의 차이라는 정당화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사회적 이동성의 약화는 사회통합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 심화 및 이동성 약화와 함께 사회통합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는 변화로 다문화 사회의 경향이 있다. 한국은 과거 인력 수출국에서 경제성장 이후 인력 수입국으로 변화하였다. 여전히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수준 향상으로 외국의 저임인력에게 매력적인 인력시장이 된 것이다. 글로벌화로 전세계로부터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과거 단일 민족국가임을 자랑스레 생각하기도 했던 한국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빠른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곧 닥칠 상황에서 법제도상 인구유입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집단이 공존하는 상황은 한국이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통합의 과제를 제기한다.

한국에서 사회통합이 중요한 정책적 의제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배경은 앞서 언급한 불평등 심화와 함께 나타난 여러 사회적 변화들이다. 이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변화는 개인주의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의 증가, 사회적 신뢰의 약화에 따른 사회자본의 감소, 사회적 불만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이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화는 다양한 변화의 산물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제도적 개혁과 구조조정의 결과로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로 사회적으로 공동체나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또한 출산율 감소로 어려서부터 형제 없이 성장하고 취학과 취직 이후로는 극심한 경쟁에 노출되면서 성장해온 새로운 세대는 과거에 비해 훨씬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한 경쟁적 개인주의가 일종의 마음의 습관(habits of the heart)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적 개인주의는 협력과 상호의존을 어렵게 만들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국 사회에서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는 꾸준히 낮아져 왔으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경쟁적 개인주의의 심화로 타인들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 역시 낮아지기 시작했다. 타인들에 대한 신뢰는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갈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또한 제도에 대한 신뢰는 거버넌스에 도움이 되며, 공적 갈등을 줄인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나 타인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가 모두 감소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회자본의 약화로 인한 사회통합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국민들의 일반화된 불신과 냉소주의로 인해 협력과 신뢰의 선순환이 작동하지 못하고 불신과 갈등의 악순환이 작동하면서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은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과 갈등의 악순환을 지속시킨다는 면에서도 사회발전과 통합의 걸림돌이 된다. 물론 사회적 갈등은 부정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갈등이 효과적으로 제도화되었을 때에 가능하다. 한국에서 현재 갈등의 증가는 갈등 해결의 제도적 절차에 대한 존중이 없이 악순환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긍정적 기능보다 부정적 기능이 더욱 부각된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의 긍정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갈등의 발생 소지를 줄여나가는 방향에서 사회통합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사회통합과 통합영역 쟁점

통합영역 쟁점들(cross-cutting issues)은 어느 특정 영역에만 해당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함께 문제가 되는 쟁점들을 의미한다. 사회통계 총괄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이재열 외, 2014)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영역별로 안전, 공공복지, 인권과 차별, 가치와 규범, 사회적 약자와 불평등, 지속가능성이라는 여섯 개 통합영역의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회통합에 해당하는 영역은 “공동체, 시민참여, 거버넌스”이다.

사회통합의 통합영역 쟁점으로는 안전 측면에서 파트너십에 의한 범

죄예방이, 인권과 차별에서 관용성이, 그리고 가치와 규범에서 신뢰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불평등에서 계층귀속이 해당된다.

파트너십에 의한 범죄예방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공공의식이 투철하고 서로 이웃간에 신뢰가 돈독하여 서로 돌봐주는 상황에서는 범죄의 발생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에 의한 범죄예방은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적 결속이나 사회자본의 확충을 필요로 한다.

인권과 차별에서 관용성은 다양한 소수자들을 사회집단이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 편견을 없애는 것은 시민교육과 함께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동시에 소수자들을 격리하거나 따돌리지 않고 자주 접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점점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여러 종류의 소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용성의 제고는 매우 중요한 사회통합적 쟁점이다.

가치와 규범의 통합영역에서 신뢰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타인에 대해 불신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일단 신뢰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들의 타인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경험이나 신념에도 기초하지만 사회 전반의 일반적 경향을 추종하는 경우가 많다.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을 배척한 결과, 협력을 통한 공공선의 구축 기회를 놓치고 불신과 갈등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

사회적 약자 및 불평등과 관련해서 사회통합의 쟁점은 계층귀속이다. 계층귀속은 객관적 사회적 지위가 아닌 주관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평가한 결과이다. 계층귀속은 많은 경우 객관적인 사회적 지위보다 의식성향이나 평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객관적 지위 못지 않게 주관적 지위평가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주관적 계층귀속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관적 계층귀속을 하향으로 만드는 중요한 배경은 사회적 상향비교 성향이다.

〈표 Ⅱ-4〉 통합영역의 쟁점들

통합 영역 / 쟁점 / 영역	안전	공공복지	인권과 차별	가치와 규범	사회적 약자와 불평등	지속가능성
범죄와 사법정의			학교폭력/ 가정폭력	법의식		
공동체, 시민참여, 거버넌스	파트너십에 의한 범죄예방		관용성	신뢰	계층귀속	
가족과 가구		돌봄/사회적지지		가족가치		
교육과 훈련	학교안전	장학금	학생인권	시민교육	교육격차/ 이동가능성	
여가와 커뮤니케이션	문화시설 안전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문화복지	표현의 자유	시간가치/ 문화정체성	문화교육 격차	문화다양성
인구		복지대상가구				출산/ 인구전망
건강	식품안전	장애인복지/ 의료보험			건강불평등	
생활환경	재해예방			환경가치		환경지속 가능성
노동	산업재해	근로빈곤/실업	부당노동행위	노동가치	불안정고용/ 비정규직	부양비
소비와 자산	소비자보호	빈곤층비율		물질주의	소득/ 자산격차	노후보장
주거	교통안전	서민주택공급			기준미달주택/ 하우스푸어	

출처: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총괄체계(이재열 외, 2014). p96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총괄체계(이재열 외, 2014)’에서는 통합영역 쟁점들 외에도 한국 사회의 거시적 트렌드인 정보화 및 세계화 다문화 그리고 고령화와 관련하여 각 영역별로 해당되는 쟁점들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사회통합 분야와 관련하여 해당되는 쟁점들로는 정보화 측면에서 전자민주주의가 있다.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 하락과 함께 정치에 대한 신뢰의 하락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가 높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후로 많이 드는 것이 투표율의 하락이다. 하지만 전자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단지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다양한 쌍방향의 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로 생각된다. 특히 전자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하는 측면에서 최근의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기술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표 II-5〉 사회변동에 따른 도전들

사회변동에 따른 도전들 / 영역	정보화	세계화와 다문화	고령화
범죄와 사법정의	개인정보보호		노인범죄피해
공동체, 시민참여, 거버넌스	전자민주주의	난민/탈북자의 사회통합	
가족과 가구		다문화가족	노인1인가구/ 노인사회적지지
교육과 훈련	교육정보화	유학생/ 다문화자녀교육	평생교육
여가와 커뮤니케이션	뉴미디어사용/ 인터넷중독	해외여행비율, 문화포용성	여가교육
인구		외국인 현황	기대수명
건강			건강수명/ 노인건강비용
생활환경			
노동	정보산업고용	외국인노동자	은퇴연령
소비와 자산	정보비지출		노인빈곤
주거	정보화기반		

출처: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총괄체계(이재열 외, 2014). p97

세계화와 다문화의 경향은 인구이동을 통해 늘어난 난민/탈북자의 수용이라는 쟁점을 제기한다. 서구 사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시리아 난민 문제처럼 글로벌화의 경향은 정치적 난민과 함께 다양한 인구이동을 통한 다문화 사회로의 경향을 촉진한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으며 최근들어 탈북자들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난민이나 탈북자들에 대해 정책 당국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사회통합 영역에서 쟁점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대간 형평성과 공존의 문제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세대간 경합 가능성, 소득과 소비에서 연금이나 복지 등으로 인한 국민이전계정 상의 불균형 등 다양한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대간 갈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세대간 공존과 형평성의 회복이 중요한 통합영역의 문제로 부각될 것이며 그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제4절 사회통합 관련 취약 인구집단 및 지역 간 비교

1. 통계적 표준집단

사회통합의 정의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를 뿐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람직한 사회통합의 방향은 서로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실제로 사회통합 개념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빈곤과 실업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흡수(social integration),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 등, 사회통합은 각 사회의 구체적 맥락 하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사회

통합 통계의 작성목적은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이라는 시공간적 특수성을 포착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표준집단과 취약집단을 구분하고자 한다. 통계적 표준집단은 사회통합 통계상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며, 통계적 취약집단은 표준집단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통계적 표준집단은 사회통합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준점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설정 시 인구집단을 표준화하여 개념화해야 하며, 통시적인 통계 생산이 용이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인구집단을 표준화하는 방법으로는 성, 연령 등의 기본적인 인구적 속성을 따르는 방법도 있고,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속성 등에 따르는 방법도 있다. 지리적 특성도 물론 반영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산된 통계적 표준집단은 사회통합 통계상의 기준집단이 된다.

<표 Ⅱ-6>은 인구학적, 지리적,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통계적 표준집단을 설정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위의 세 가지 변수를 대분류로 두고 각 변수를 구성하는 핵심 변수들이 일종의 하위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다. 가령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 표준집단을 구성한다면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구성과 같은 핵심적 요인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핵심적 요인들의 특성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성별을 기준으로는 법적 성별인 남성과 여성이 연령집단에서는 아동, 청소년, 장년층, 노인 등이 표준집단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 혼인상태에서는 미혼, 기혼, 동거, 별거, 사별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같은 이치이다. 즉 통계적 표준집단의 설정은 사회통합 통계 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통계 체계 작성 시 사전에 필수적으로 완료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표 Ⅱ-6〉 통계적 표준집단

대분류	변수명	권고	인구집단
인구학적 변수	성별	필수	▸ 남성, 여성
	연령		▸ 아동, 청소년, 청년층, 장년층, 노인
	혼인상태	선택	▸ 미혼자, 유배우자, 무배우자
	가구구성		▸ 일반가구와 친족가구, 1인가구, 비친족 가구 ▸ 가구원수별 가구 ▸ 한부모 가구 ▸ 세대 구성(1세대・2세대・3세대 이상)
지리적 변수	거주지역	필수	▸ 도시 및 농촌 거주자(가구)
사회 경제적 변수	교육정도	필수	▸ 미취학자, 무학자, 학교급별 졸업・재학・중퇴자
	소득		▸ 저소득층 ▸ 중산층 ▸ 고소득층
	경제활동		▸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직업		▸ 직업별 취업자
	산업	선택	▸ 산업별 취업자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주거형태		▸ (다가구)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아파트 거주자(가구)
	점유형태		▸ 전・월세 거주자(가구) ▸ 유주택・무주택자(가구)

출처: 통계개발원, (2014).「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총괄체계」

여기서 문제는 통계적 표준집단을 아무리 꼼꼼하게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회통합의 표준적 시각에서 잘 들어맞지 않는 속성을 가진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족 결혼이주여성은 혼인상태에서 기혼에 해당하지만 통계적 표준집단에서 가정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 기혼자와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 기혼자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서로 크게 다를 것이다. 따라서 기혼자 집단으로 같은 범주 안에 포함되어 포용, 연대, 시

민성의 시각에서 동일하게 취급되더라도 표준집단에 근거한 사회통합 수준의 개념과 측정이 다문화 가족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장애인 집단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령 아래 표의 사회경제적 변수들–교육, 소득, 경제활동,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 주거형태, 점유형태 등–의 기준에서 보면 장애인 집단은 모든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일상화된 곳에서는 이들의 경제활동이나 조직 내 위치가 다른 인구집단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는 없다. 그리고 포용, 연대, 시민성의 기준에서 통계적 표준집단을 상정하고 만든 사회통합 지표체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 수준을 적절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2. 통계적 취약집단

앞서 밝힌 것처럼 다문화가족이나 장애인 집단은 대표적인 통계적 취약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층, 이혼자,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농촌가구, 학업중단자, 저소득층, 실업자, 은퇴자, 감정노동자, 임시일용직, 비주거용 건물거주자, 전월세가구, 무주택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탈북자, 다문화가정 등이 통계적 취약집단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하지만 기존 통계적 표준집단의 시각에서 작성된 지표체계에서는 특정 관심영역에 따라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통계적 취약집단은 한 사회의 관심대상인 동시에 삶의 어느 한 영역 또는 복수의 영역에서 여타 인구집단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도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지표체계 작성 시 반드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기도 하다. <표 Ⅱ-7>은 통계청의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의 관심영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취약집단을 보여준다. 사회통합과 관련이 높은 공동체, 시민참여,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청년층, 노인층, 은퇴자, 탈북자, 다문화가정이 특히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집단인 장애인, 범죄피해자, 탈북자, 다문화가정 등은 기존 통계체계의 모든 영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표 Ⅱ-7〉 관심영역별 통계적 취약집단

취약집단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관심영역										
	범죄와 사법정의	공동체/ 시민참여/ 거버넌스	가족과 가구	교육과 훈련	여가와 커뮤니케이션	인구	건강	생활 환경	노동	소비와 자산	12주거
여성	√			√		√			√		
아동	√		√			√	√				
청소년	√		√	√	√	√			√		
청년층		√	√	√	√	√			√		
노인층		√	√	√	√	√	√		√	√	√
이혼자			√						√	√	√
1인가구			√		√					√	√
한부모가구			√						√	√	√
농촌가구					√					√	
학업중단자	√			√					√		
저소득층			√	√	√		√		√	√	√
실업자				√					√	√	
은퇴자		√	√		√		√			√	
감정노동자							√		√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					√		
비주거용 건물 거주자											√
전・월세가구											√
무주택자											√
장애인				√			√		√		
범죄피해자	√						√				
탈북자		√	√	√		√			√		√
다문화가정		√	√	√		√			√	√	

* 음영으로 표시된 취약집단은 조사항목을 통해 파악할 수는 없으나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취약인구집단

출처: 통계개발원, (2014).「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총괄체계」

따라서 사회통합과 관련지어 취약집단(소수자, 이민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느 집단이 취약집단인지 선별해내는 것에서 나아가 각 집단이 구체적으로 사회통합 영역의 하

위 쟁점들을 얼마만큼 달성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만큼 취약한지 그 정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취약성이 본 연구가 제시한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를 통해 얼마나 잘 드러나는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에 있어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장애인, 다문화가족 집단을 선정하고, 본 연구가 설정한 사회통합 지표체계 내 △포용 △연대 △시민성 영역에 존재하는 구체적 변수들을 통해 해당 집단의 사회통합 취약정도를 확인할 것이다.

가. 포용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포용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관용, 그리고 사회적 이동 기회의 보장을 살펴본다. 포용은 배제 및 차별의 반대 개념으로, 법 앞에서의 평등과 관련된다. 형식적 측면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특정 인종과 종족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확장되고 있으나 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여전히 소수자이다. 장애인 집단 역시 마찬가지다. e-나라지표에 의하면 1990년 24만 명에 불과했던 등록장애인의 규모는 18년 만에 8.5배 증가하여 2016년 기준 251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장애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아래에서는 통계자료를 통해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집단의 차별실태를 살펴보겠다. <표 Ⅱ-8>과 <표 Ⅱ-9>는 각각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인식과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다.

<표 Ⅱ-8>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이 조금 심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차별이 '조금 심하다'는 응답이 5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별로 없다'(31.5%), '매우 심하다'(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학력자, 고소득자일수록 사회적 차별이 '조금 심하다', 혹은 '매우 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정도는 장애인에 비해 비장애인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Ⅱ-8〉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구분	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조금 심함	매우 심함
2015 전체	100.0	2.7	31.5	51.9	13.9
남자	100.0	2.7	31.7	51.8	13.8
여자	100.0	2.7	31.3	51.9	14.1
장애인	100.0	4.7	32.8	48.6	13.8
비장애인	100.0	2.6	31.4	52.0	13.9
초졸이하	100.0	3.7	42.9	46.2	7.3
중졸	100.0	3.1	38.0	49.9	8.9
고졸	100.0	2.9	30.9	52.2	14.0
대졸이상	100.0	2.0	24.6	54.7	18.7
100만원 미만	100.0	3.9	41.3	45.9	8.9
100-200만원 미만	100.0	3.6	35.6	48.8	12.0
200-300만원 미만	100.0	2.5	31.1	52.4	14.0
300-400만원 미만	100.0	2.4	28.4	53.7	15.5
400-500만원 미만	100.0	1.9	27.9	54.5	15.8
500-600만원 미만	100.0	1.5	27.5	54.8	16.2
600만원 이상	100.0	2.4	24.9	55.5	17.1

1)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15)

〈표 Ⅱ-9〉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항상 느낀다	6.2	6.9	5.2	14.3	11	7.2	3	11.6	2.9
가끔 느낀다	31.6	31.5	31.7	53.7	41	32.1	26.1	43.9	23.3
별로 느끼지 않는다	41.7	40.8	43	21.8	30.6	40.1	48/6	33.9	46.6
전혀 느끼지 않는다	20.5	20.8	20.1	10.2	17.4	20.6	22.3	10.6	27.2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 실태조사

이제 장애인이 실제로 느끼는 차별의 정도를 살펴보자. <표 Ⅱ-9>는 장애인이 스스로 인지하는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의 정도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장애를 느낀다는 응답이 37.8%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2.2%임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로 인한 차별 인식 비율이 높으며, 중증장애인의 차별 인식 비율은 5.5%로 경증장애인의 차별 인식 비율인 26.2%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해 <표 Ⅱ-8>과 <표 Ⅱ-9>에서 주목해야하는 결과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의 차이인데,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결과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사회적 차별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정도를 물어 획득한 정보가 한국사회의 소수자 사회통합 정도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장애인이 경험하는 현실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한 비장애인의 장애인 사회적 차별에 대한 평가는 실제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의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 Ⅱ-9>의 장애 정도별 사회적 차별의 평가가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현실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데,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과 비장애인보다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훨씬 더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장애인에게 묻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 항목으로는 장애인 사회통합 수준을 적절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다 잘 포착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거나 장애인의 사회통합 수준을 적절히 보여줄 수 있는 지표체계의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포용은 사회경제적 이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회경제적 이동의 기회가 제한되고 이동이 정체되면 기존의 불평등이 지속, 고착되며 대물림되어 사회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 Ⅱ-10>과 <표 Ⅱ-11>은 △ 장애유형별 취업 시 사회적 차별정도 △ 장애유형별 직장생활-소득(임금)을 보여준다. 취업과 소득 분야에서 장애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장애가 사회경제적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장애인 집단 내부에서도 특히 더 취약한 집단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표 Ⅱ-10〉 장애유형별 사회적 차별정도: 취업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29.3	58.0	34.7	42.7	45.7	47.7	66.7	69.8	42.4	75.0	32.8	39.3	63.1	31.3	37.5	35.8
안받았다	70.7	42.0	65.3	57.3	54.3	52.3	33.3	30.2	57.6	25.0	67.2	60.7	36.9	68.7	62.5	6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81,576	60,774	144,245	128,287	9,306	59,412	2,064	37,726	19,903	2,275	6,066	3,786	2,232	3,385	4,052	1,165,089

출처: 2014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Ⅱ-11〉 장애유형별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소득(임금)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19.8	38.9	19.6	29.2	26.3	41.4	41.7	56.8	18.3	40.8	22.0	21.9	26.7	36.0	29.8	23.9
안받았다	80.2	61.1	80.4	70.8	73.7	58.6	58.3	43.2	81.7	59.2	78.0	78.1	73.3	64.0	70.2	7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90,453	62,630	158,849	148,369	9,057	58,236	1,002	31,909	23,020	3,299	5,728	5,883	2,068	5,943	3,760	1,310,206

출처: 2014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Ⅱ-10>은 취업 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전체의 35.8%임을 보여준다. 또한 <표 Ⅱ-11>에서는 장애인 중 직장생활에서 소득(임금)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9%인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유형별 소득 차별 경험 정도는 정신장애가 56.8%로 가장 심하고 다음이 자폐성장애(41.7%), 지적장애(41.4%), 심장장애(40.8%) 등의 순서이다. 이는 장애인 집단 중 정신장애인이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표 Ⅱ-12〉 취업장애인의 임금수준

(단위: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간질) 장애	전체
2014	167	112	156	120	130	57	45	56	183	327	110	190	160	78	-	153
2011	155	118	136	125	141	54	38	53	189	100	99	196	70	86	117	142
2008	121	104	136	88	92	41	23	23	147	97	86	235	124	84	66	115

출처: 2014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Ⅱ-12>에 의하면 취업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153만원으로 이는 한국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329만원(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2014.6,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의 46.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표 Ⅱ-11>에서 23.9%의 장애인만이 직장생활 중 소득측면에서 차별받았다고 응답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집단이 실제 인지하는 것보다 취업할 기회 및 소득측면에서 더 큰 차별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해당 집단 구성원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간 차이 또한 통계적 표준집단 사회통합 지표체계 외에 취약집단을 위한 독자적인 지표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다시 보여준다.

〈표 Ⅱ-13〉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한국 생활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 명)

	외로움	가족 간의 갈등	자녀 양육 및 교육	은행, 시군구청 등 기관 이용	경제적 어려움	언어 문제	생활방식, 관습, 음식 등 문화 차이	편견과 차별	기타	어려운 점 없음
전체	33.6 (102,327)	11.2 (34,099)	23.2 (70,612)	9.4 (28,674)	33.3 (101,514)	34.0 (103,553)	22.2 (67,672)	16.1 (48,915)	0.6 (1,956)	15.1 (45,904)
여성	36.5	12.7	25.2	8.6	31.9	36.7	23.7	14.8	0.5	13.3
남성	20.7	4.6	14.4	12.9	39.6	22.2	15.6	21.8	1.2	22.8

자료: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다음으로 포용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 집단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한국생활을 하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가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자가 15.1%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언어문제가 3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외로움(33.6%), 경제적 어려움(33.3%), 자녀 양육·교육 문제(23.2%), 문화차이(22.2%), 편견과 차별(16.1%), 가족 갈등(11.2%), 기관 이용(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14〉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사회적 차별 경험

(단위: %, 명)

		있었음	없었음	합계
전체		33.3 (101,305)	66.7 (203,211)	100.0 (304,516)
성별	여성	32.9	67.1	100.0
	남성	34.9	65.1	100.0
연령	29세 이하	35.1	64.9	100.0
	30~39세	35.5	64.5	100.0
	40~49세	34.2	65.8	100.0
	50~59세	30.4	69.6	100.0
	60세 이상	18.0	82.0	10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무학포함)	30.1	69.9	100.0
	중학교 졸업	33.7	66.3	100.0
	고등학교 졸업	32.5	67.5	100.0
	대학 졸업 이상	35.8	64.2	100.0
혼인상태	유배우	33.5	66.5	100.0
	이혼·별거	35.1	64.9	100.0
	사별	26.1	73.9	100.0
	미혼	29.7	70.3	100.0
국내 거주기간	2년 미만	25.6	74.4	100.0
	2~5년 미만	31.7	68.3	100.0
	5~10년 미만	38.0	62.0	100.0
	10년~15년 미만	32.7	67.3	100.0
	15년 이상	27.7	72.3	100.0
출신국적	중국	33.0	67.0	100.0
	중국(한국계)	30.5	69.5	100.0
	일본	26.9	73.1	100.0
	대만·홍콩	23.5	76.5	100.0
	베트남	36.2	63.8	100.0
	필리핀	36.2	63.8	100.0
	그 외 동남아시아	34.1	65.9	100.0
	남부아시아	47.2	52.8	100.0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	32.9	6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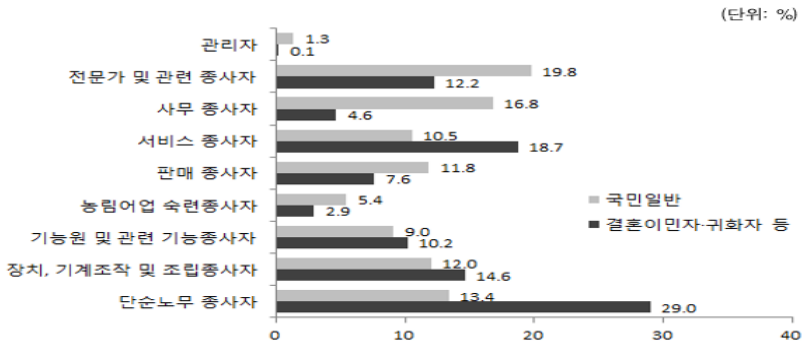
자료: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다음은 사회적 차별과 관련한 조사 문항이다. 최근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가운데 33.3%가 사회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남성(34.9%)이 여성(32.9%)에 비해 차별 경험이 많은 편이다. 그 외에도 출신국적, 국내거주기간 등에 의해 결혼이민자·귀화자 집단 내부에서도 특히 더 취약한 집단이 발견됐다. 국내 거주 기간별로는 5~10년 미만 거주자들의 차별 경험

이 38.0%로 가장 많은데 비해, 2년 미만 거주자(25.6%), 15년 이상 거주자들(27.7%)은 지난 1년간 사회 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집단의 사회경제적 이동과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집단의 직종별 분포와 임금수준을 활용하였다. 이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직종의 사회적 지위 및 임금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이동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Ⅱ-4>에서 나타난 취업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29.0%)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직(18.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4.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2%) 순이다. 이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 전체 취업자 직종별 분포와 비교해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은 국민 전체 취업자에 비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고(29% 대 13.4%),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중 현저히 높으나(18.7% 대 10.5%), 전문가 관련 종사자(12.2% 대 19.8%)와 사무 종사자(4.6% 대 16.8%)의 비중에 있어서는 월등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의 사회적 이동성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낮음을 의미한다. 통계적 표준집단과 비교해 통계적 취약집단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이동성이 낮다는 것은, 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 조사나 통계 작성 시 사회적 이동성과 관련된 항목들을 특히 더 고려해야 하며 이들 집단의 독자적인 사회통합 지표체계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 Ⅱ-4〉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직종별 분포



자료: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다음의 <표 Ⅱ-15>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지난 3개월 월평균 임금(보수)을 보여준다. 현재 이들의 임금수준은 경제적 측면에서 배제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월 평균 임금이 100-1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0.8%로 가장 많고, 150-200만 원 미만 19.2%, 50-100만 원 미만 18.8%의 순이다. 임금이 없거나(5.9%) 50만 원 미만(5.8%)인 경우는 11.7%임을 보여준다. 임금(보수)의 격차는 성별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여성은 50-100만 원 미만과 100-150만 원 미만의 비중이 각각 23.4%와 36.3%로 가장 높은 반면 남성에서는 150-200만 원 미만, 200-250만 원 미만의 비중이 각각 24.5%와 21%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집단 내부에서도 여성 집단이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내 남성과 여성 간 임금수준 차이는 다문화가족 조사 수행이나 지표체계 작성 시 성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Ⅱ-15〉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월평균 임금

(단위: %, 명)

		임금 없음	50 만 원 미만	50 ~ 100 만 원 미만	100 ~ 150 만 원 미만	150 ~ 200 만 원 미만	200 ~ 250 만 원 미만	250 ~ 300 만 원 미만	300 ~ 350 만 원 미만	350 ~ 400 만 원 미만	400 ~ 450 만 원 미만	450 ~ 500 만 원 미만	500 만 원 이상	합계
전체		5.9 (11,471)	5.8 (11,219)	18.8 (36,510)	30.8 (59,930)	19.2 (37,283)	8.5 (16,516)	4.6 (8,996)	2.3 (4,401)	1.2 (2,333)	0.9 (1,842)	0.5 (1,026)	1.6 (3,113)	100.0 (194,641)
성별	여성	7.5	7.1	23.4	36.3	17.4	4.5	1.6	0.7	0.4	0.3	0.2	0.5	100.0
	남성	0.8	1.5	4.2	13.4	24.5	21.0	14.1	7.1	3.8	2.8	1.6	5.0	100.0

자료: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나. 연대

연대는 사회 혹은 공동체 성원간의 관계의 유지와 성장이다. 연대는 때로는 사회적 응집이나 사회적 자본으로 불리기도 한다. 연대는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와 관계, 대인 신뢰로 측정된다. 이 때 사회적 참여는 소속감과 정체성, 사회단체 참여, 자원봉사와 기부경험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와 관계는 도움을 받을 사람 수와 연락하는 사람의 수, 대인 신뢰는 일반화된 신뢰와 대상별 사람의 신뢰 여부로 구체화된다.

현재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집단과 관련하여 연대에 관해 체계적으로

측정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이들은 참여의 주체라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탓에, 각종 통계자료의 생산과정에서 이들의 사회참여 현황은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부처 주도 통계자료들은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혹은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위주로 생산하여, 실제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집단의 연대 관련 부분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2016년 장애통계연보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라는 항목으로 장애인 공무원 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칭하는 사회참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집단의 연대 수준 파악은 온라인 사회활동 참여율이라는 항목만으로 추정하는 정도에 그친다.

<표 Ⅱ-16>에서는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26.4%로, 일반국민 (32.2%)보다 5.8%p 낮게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을 100%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일반국민의 82.0%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결혼이민자의 온라인 사회활동참여 활동률은 26.0%로 일반국민(32.2%)보다 6.2%p 낮게 나타난다. 일반국민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을 100%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결혼이민자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일반국민의 80.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 집단을 사회참여 취약집단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들 집단의 낮은 사회참여 수준과 더불어 이를 보여줄만한 적합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통계청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나 외국인 경제활동조사의 설계 시 연대의 핵심 변수인 소속감과 정체감, 자원봉사, 신뢰 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

〈표 Ⅱ-16〉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활동 참여율

구분	일반국민	장애인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32.2%	26.4%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2016 정보격차 실태조사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인터넷을 통한 표현적 및 행동적 사회참여 활동 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 표현적 사회참여: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
- 행동적 사회참여: 인터넷을 통한 기부 및 봉사 활동,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기 활동을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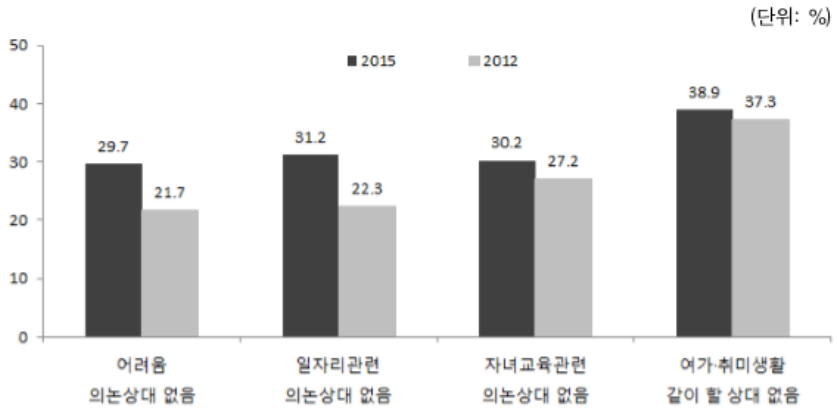
〈표 Ⅱ-17〉 결혼이민자의 온라인 사회활동 참여율

구분	일반국민	결혼이민자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32.2%	26.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2016 정보격차 실태조사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인터넷을 통한 표현적 및 행동적 사회참여 활동 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 표현적 사회참여 :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
- 행동적 사회참여 : 인터넷을 통한 기부 및 봉사 활동,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기 활동을 하는 것

다문화 가족에 대한 통계 작성은 장애인 집단과 비교해 나은 편이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2, 2015)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집단은 2012년에 비해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 의논 상대, 일자리 관련 의논 상대, 자녀교육 관련 의논 상대 등의 측면에서 의논하거나 같이 할 상대가 없는 이들이 지난 3년간 증가했다. 특히, 어려움 의논 상대, 일자리 관련 의논 상대가 없는 이들은 지난 3년간 각각 8.0%p, 8.9%p 증가했다.

〈그림 Ⅱ-5〉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중 '의논·같이 할 상대 없음' 비율(2012, 2015)



자료: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 집단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아래의 <표 Ⅱ-18>에서도 확인되는데, 향후 모임·활동 참여 의향에 있어서는 33.9%가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나 활동이 없다고 응답해 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요구 자체가 부재한 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18〉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모임·활동별 참여 의향(복수응답)

(단위: %, 명)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나 활동 없음	학부모 모임	모국인 친구 모임	지역 주민 모임	종교 활동	민간단체 활동(이주민 지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	정당, 노동 조합 등
전체	33.9 (103,147)	25.4 (77,356)	45.7 (139,052)	16.9 (51,540)	13.5 (41,100)	13.5 (41,235)	2.3 (6,858)

자료: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다. 시민성

시민성은 시민사회 참여, 법과 질서, 거버넌스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뜻한다. 시민사회 참여는 정치적 효능감, 선거 참여, 정치행위 참여 여부로, 법과 질서는 준법의식(납세, 국방 등)과 기초질서 준수 여부로 구체화된다. 거버넌스는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는 공적 영역을 이루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신뢰의 정도로 구체화된다.

〈표 Ⅱ-19〉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참여함	74.8	77.1	71.7	-	61.8	79.1	80.6	57.9	86.4
참여하지 않음	22.0	19.4	25.6	-	35.5	20.8	19.3	34.7	13.1
비해당 (투표권 없었음)	3.2	3.6	2.7	100.0	2.7	0.1	0.0	7.5	0.5

비해당: 만19세 미만, 금치산자 등
2014년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선거참여비율은 74.8%로 나타났다. 남성의 투표참여율(77.1%)이 여성의 투표참여율(71.7%)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장애인 집단의 투표참여율이 크게 낮은 것은 아니다. 장애, 비장애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여부에 대해 조사한 2014년 KGSS에서 투표참여집단이 71.8%, 투표미참여 집단이 28.2%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투표참여비율이 57.9%에 불과한 반면, 경증장애인의 투표참여율은 86.4%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장애인 집단 중에서도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정치참여 취약집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6 장애통계연보에 의하면 국내 장애인 관련 통계 체계는 1)장애인구 2)건강 및 보건 3)가족 4)주거 5)교육 6)노동과 직업재활 7)재정 8)소득과 소비 9)문화 및 사회참여 10)사회보장 11)인권보호 12)접근성 13)재난 및 안전 등으로 구분된다. 본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시민성의 하위영역인 법과 질서, 거버넌스, 제도신뢰 등에서는 장애인 집단을 따로 분류하여 생산되는 통계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실태조사 차원에서라도 장애인을 통계적 취약집단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사회통합 현황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투표경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한국에서의 투표경험'을 측정하였으나, 2015년 조사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Ⅱ-20>에서는 2012년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에게 한국에서 투표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귀화자가 아니거나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이 되지 않아 투표자격이 없는 응답자가 전체의 49.1%이고, 31.2%는 투표 경험이 있으며, 19.7%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즉 응답자의 약 2/3는 투표 경험이 없었다. 투표경험 외에도 시민성은 법과 질서, 거버넌스, 제도신뢰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관련 측정문항이 없다.

〈표 Ⅱ-20〉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에서의 투표경험

(단위: %, 명)

구분		투표 경험 있음	투표 경험 없음	해당 없음	합계
전체		31.2 (88,366)	19.7 (55,696)	49.1 (139,162)	100.0 (283,224)
성별	여성	31.7	19.0	49.3	100.0
	남성	29.1	22.3	48.6	100.0
거주지역	동부	32.0	21.0	47.1	100.0
	읍면부	28.4	14.9	56.6	100.0
연령	24세 이하	8.2	16.7	75.1	100.0
	25~29세	17.1	19.8	63.1	100.0
	30~34세	28.6	19.4	52.0	100.0
	35~39세	40.0	19.1	40.9	100.0
	40~49세	38.0	21.9	40.1	100.0
	50세 이상	44.1	19.0	36.9	100.0
혼인상태	미혼	41.6	58.4	0.0	100.0
	유배우	28.9	17.2	53.9	100.0
	사별	61.9	30.9	7.1	100.0
	이혼·별거	57.1	35.4	7.4	100.0
출신국적	중국	33.9	20.0	46.1	100.0
	중국(한국계)	45.5	25.1	29.4	100.0
	대만, 홍콩	43.1	25.0	31.8	100.0
	일본	22.9	19.6	57.5	100.0

자료: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3. 포용, 연대, 시민성의 지역 간 비교

사회통합의 정사회통합의 수준은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 지역별로 구성원들의 인구학적 속성,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 규모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역사적 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수준, 특히 포용, 연대, 시민성 수준도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지역 분권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해지면서 통계청도 지역사회지표 작성 매뉴얼('16년)을 작성하여 지역사회지표들을 표준화하여, 지역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한다. 여기에서는 지역단위에서 사회통합수준의 비교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조사,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살펴본다. 특히 포용, 연대, 시민성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자료를 통해 얼마나 잘 드러나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지역 간 비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먼저 지역 규모별 차이와 광역시도별 차이를 살펴본다.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라도 정보가 존재하는 수준에서 비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 포용

포용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이동성과 관련하여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과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19세 인구를 대상으로 본인 세대 내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전라남도(32.7%)와 세종특별자치시(32.0%)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매우 높다'+'비교적 높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히 높았으며, 경상남도(20.5%)와 충청북도(20.6%)가 상대적으로 낮아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21〉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전국	2.3	20.4	44.5	20.5	12.3
서울특별시	2.4	19.3	45.3	23.3	9.7
부산광역시	2.6	18.2	46.1	20.8	12.4
대구광역시	1.4	22.1	47.0	18.7	10.8
인천광역시	2.5	19.9	41.8	22.6	13.2
광주광역시	1.3	25.0	47.0	18.3	8.4
대전광역시	2.5	24.5	47.5	16.4	9.0
울산광역시	1.9	20.5	45.6	18.5	13.4
세종특별자치시	3.3	28.7	46.5	13.6	7.9
경기도	2.5	18.4	45.1	22.3	11.8
강원도	2.8	23.6	40.2	14.8	18.6
충청북도	1.3	19.3	45.5	21.5	12.4
충청남도	1.7	20.8	40.9	18.9	17.7
전라북도	2.2	22.5	39.1	17.9	18.3
전라남도	3.0	29.7	38.9	15.3	13.1
경상북도	2.5	23.5	41.4	17.7	14.9
경상남도	1.4	19.1	48.2	18.6	12.6
제주특별자치도	1.9	20.3	44.7	14.9	18.2

자료: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세대 간 계층 이동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되었다. 다음 세대에서의 계층 이동가능성을 높다(매우 높다'+'비교적 높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41.5%), 광주광역시(37.9%), 대전광역시(36.6%) 순이다. 반면 울산광역시에서는 26.1%만이 세대 간 계층이동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표 Ⅱ-22〉 다음세대에서의 계층이동 가능성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전국	3.0	26.5	38.8	16.2	15.5
서울특별시	2.6	24.1	41.3	20	12.1
부산광역시	4.3	23.1	39.6	16.1	17.0
대구광역시	2.2	26.8	40.7	15.0	15.3
인천광역시	3.5	25.8	36.9	17.4	16.3
광주광역시	2.3	35.6	41.2	11.0	10.0
대전광역시	3.4	33.2	39.7	12.9	10.9
울산광역시	2.0	24.1	38.5	20.1	15.3
세종특별자치시	4.2	28.9	44.1	12.6	10.1
경기도	2.9	25.3	37.8	17.7	16.3
강원도	5.3	30.3	33.3	10.6	20.5
충청북도	2.6	28.9	37.8	15.3	15.5
충청남도	2.5	29.3	36.1	12.1	19.9
전라북도	3.4	29.1	34.2	12.4	20.9
전라남도	6.2	35.3	32.9	8.7	16.8
경상북도	2.4	26.9	39.8	14.2	16.7
경상남도	2.0	24.7	41.9	16.0	15.3
제주특별자치도	1.8	25.5	39.3	12.2	21.2

나. 연대

연대에서는 우선 기부와 관련된 사회적 참여, 대인 신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망 등에 있어서 존재하는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기부 경험과 기부 의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기부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도시(동부)가 27.9%로 전국 평균

인 26.7%보다 약간 높았으나 농어촌의 경우 21.0%로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향후 기부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도시는 전국 평균인 41.2%보다 약간 높은 42.8%가 기부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농어촌의 경우, 33.8%만이 향후 기부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도시와 농어촌간 차이를 보인다. 광역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지역적 차이는 더욱 확연해진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33.2%에 달하지만 경상북도의 경우 19.5%에 그친다. 향후 기부 의사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49.7%로, 전국 평균 41.2%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경상북도의 경우 30.5%만이 향후 기부의사가 있다고 밝혀 지역간 차이가 크다.

〈표 II-23〉 기부경험 및 향후 기부의사

	기부함 (%)	향후 기부의사 있음 (%)
전국	26.7	41.2
도시(동부)	27.9	42.8
농어촌(읍면부)	21.0	33.8
서울특별시	33.2	49.7
부산광역시	21.6	37.5
대구광역시	26.1	36.7
인천광역시	28	41.3
광주광역시	29.6	41.9
대전광역시	28.1	41.2
울산광역시	24.8	40
세종특별자치시	33.2	48.5
경기도	26.4	41.6
강원도	27.8	42.5
충청북도	25	39.2
충청남도	22.9	33.4
전라북도	21	34.3
전라남도	24	39.7
경상북도	19.5	30.5
경상남도	23.7	39.8
제주특별자치도	27.1	40.7

자료: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다음으로 일반 신뢰의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 이웃 신뢰정도, 낯선 사람 신뢰 정도 모두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다소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웃을 약간 믿거나, 매우 믿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도시의 경우 59.9%에 불과하였으나 농어촌에서는 71.4%로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Ⅱ-24〉 일반적인 인간관계, 이웃,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단위: %)

		전혀 믿을 수 없다	별로 믿을 수 없다	약간 믿을 수 있다	매우 믿을 수 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	도시(동부)	2.2	32.1	61.5	4.2
	농어촌(읍면부)	2.5	28.5	63.5	5.5
이웃 신뢰 정도	도시(동부)	5.3	34.8	54.7	5.2
	농어촌(읍면부)	4.6	24	62.5	8.9
낯선 사람 신뢰 정도	도시(동부)	34.1	53.1	12.1	0.7
	농어촌(읍면부)	30.1	54	14.9	0.9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신뢰'의 지역 간 차이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지역 별 사회조사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사회조사만을 선별해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지역 사회조사는 각 지역별로 문항구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도 각 지역 별로 응답 척도가 다른 경우가 있어 직관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대전과 세종시의 경우 일반인에 대한 신뢰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경상남도의 경우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들은 현재 국가통계포털 상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조사 문항 중, '일반인에 대한 신뢰'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전과 세종에서 일반인에 대한 신뢰를 묻는 방식은 매우 다르며 그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대전에서는 '돈 20만원이 든 지갑을 분실했을 때 돈이 있는 상태로 돌아올 것이다'에 대한 평가로 일반 신뢰를 측정했는데,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매우

기대’+‘약간 기대’)는 16.1%에 불과하다. 반면, 5점 척도로 측정한 세종시의 경우 일반인을 신뢰한다(‘매우 신뢰’+‘약간 신뢰’)는 50.8%에 달하여 대전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인에 대한 신뢰를 4점 척도로 측정한 강원도와 경상남도의 경우, 각각 신뢰할 수 있다는 비율이 22.9%와 21.3%이다.

〈표 Ⅱ-25〉 일반인에 대한 신뢰(1)

대전	매우 기대	약간 기대	보통	기대하지 않는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2.4	13.7	25.1	38.8	20.0
세종시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보통	약간 불신	매우 불신
	10.2	40.6	44.0	4.7	0.5

출처: 대전광역시, 2016 대전광역시사회조사 / 세종특별자치시, 2016 세종특별자치시사회조사

〈표 Ⅱ-26〉 일반인에 대한 신뢰(2)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모르겠다
강원도	22.9	10.3	61.5	5.3
경상남도	21.3	8.5	62.5	7.7

출처: 강원도, 2015 강원도사회조사 / 경상남도, 2016 경상남도사회조사

다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망을 확보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질문은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각각 도움 받을 사람이 있는 없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는 도시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도움 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앞서 농어촌의 주민이 더 이웃을 신뢰하는 것과 달리,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망은 농어촌 주민보다 도시 주민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표 Ⅱ-27〉 사회적 지원망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사람있음	도움받을 사람없음	인원 (평균)	도움받을 사람있음	도움받을 사람없음	인원 (평균)	도움받을 사람있음	도움받을 사람없음	인원 (평균)
전국	78.4	21.6	2.4	51.9	48.1	2.3	83.6	16.4	3.1
도시(동부)	78.6	21.4	2.4	52.3	47.7	2.4	84.0	16.0	3.2
농어촌(읍면부)	77.5	22.5	2.3	50.3	49.7	2.3	81.6	18.4	2.9
서울특별시	78.4	21.6	2.4	51.9	48.1	2.3	83.6	16.4	3.1
부산광역시	77.3	22.7	2.5	54.9	45.1	2.4	83.9	16.1	3.4
대구광역시	80.5	19.5	2.2	54.5	45.5	2.1	86.6	13.4	2.9
인천광역시	79.8	20.2	2.3	54.1	45.9	2.3	84.0	16.0	2.9
광주광역시	77.0	23.0	2.4	49.7	50.3	2.6	81.1	18.9	3.3
대전광역시	81.0	19.0	2.2	47.4	52.6	2.1	89.2	10.8	3.0
울산광역시	81.5	18.5	2.4	52.2	47.8	2.4	86.9	13.1	3.3
세종특별자치시	76.5	23.5	2.4	51.9	48.1	2.3	77.7	22.3	2.9
경기도	75.2	24.8	2.4	52.9	47.1	2.4	85.4	14.6	3.2
강원도	77.5	22.5	2.4	49.5	50.5	2.4	83.8	16.2	3.2
충청북도	78.5	21.5	2.4	49.5	50.5	2.5	78.8	21.2	3.0
충청남도	71.2	28.8	2.5	47.7	52.3	2.6	78.5	21.5	3.3
전라북도	83.9	16.1	2.0	55.8	44.2	2.0	82.6	17.4	2.6
전라남도	77.2	22.8	2.2	56.2	43.8	2.2	84.5	15.5	2.8
경상북도	82.8	17.2	2.4	55.4	44.6	2.3	82.7	17.3	2.9
경상남도	77.2	22.8	2.5	48.7	51.3	2.3	83.2	16.8	2.9
제주특별자치도	79.4	20.6	2.4	49.9	50.1	2.4	84.3	15.7	3.1

자료: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다. 시민성

다음에서는 지역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참여율 차이와 단체참여, 정치적 효능감, 준법의식(납세) 등을 통해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본다.

먼저 2016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광주의 투표참여율이 81.5%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72.0%로 가장 낮았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대구의 참여율은 54.8%로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전라남도가 63.7%로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2014년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대구는 52.3%가 참여하여 선거참여율이 가장 낮았으며, 전라남도의 참여율이 66.3%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선거참여율의 정도와 참여율 순위가 매해 동일하지는 않으나, 각 선거에 따라 지역 간 상당한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II-28〉 선거참여율

	2016 대통령선거	2016 국회의원선거	2014지방의회의원선거
전체	77.2	58.0	56.8
서울특별시	77.8	59.8	58.6
부산광역시	76.1	55.4	55.8
대구광역시	77.1	54.8	52.3
인천광역시	75.1	55.6	53.1
광주광역시	81.5	61.6	57.3
대전광역시	77.1	58.6	54.2
울산광역시	79.0	59.2	56.4
세종특별자치시	80.0	63.5	62.5
경기도	76.8	57.5	53.3
강원도	74.5	57.7	62.6
충청북도	74.2	57.3	60.0
충청남도	72.1	55.5	56.4
전라북도	78.7	62.9	61.2
전라남도	78.6	63.7	66.3
경상북도	75.7	56.7	60.3
경상남도	77.8	57.0	60.6
제주특별자치도	72.0	57.2	63.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국회의원선거총람」, 「지방의원선거총람」 각 년도

단체참여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주된 단체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비율부터 주로 참여하는 단체의 종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단체참여자는 63.9%에 이르지만, 충청북도는 41.6%만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는 단체의 유형 역시 지역별로 다르다. 부산광역시 단체참여자의 71.1%는 친목 및

사교단체에 주로 참여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친목 및 사교단체 참여에 주로 참여한다는 응답은 44.4%에 불과하다.

〈표 II-29〉 지역별 단체참여 유형

	참여자	친목 및 사교 단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용 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	기타
전국	49.7	56.1	16.7	18.1	3.9	1.7	1.0	0.3	2.1	0.1
서울특별시	45.7	45.4	22.3	20.9	4.8	3	1.4	0.6	1.6	-
부산광역시	57.1	71.1	12.6	10.4	3.2	1.2	0.5	-	1.1	-
대구광역시	57.8	65.4	13.9	14.2	3.6	1.0	1.1	-	0.7	-
인천광역시	63.9	65.6	14.9	13.4	2.2	1.5	0.6	0.2	1.7	-
광주광역시	49.7	59.2	13.7	18.5	4.6	1.6	1.5	0.1	0.9	-
대전광역시	47.8	48.5	22.2	18.5	4.8	2.8	1.1	0.1	2.0	-
울산광역시	50.5	63.2	12.2	16.4	4.7	0.6	1.4	0.1	1.3	-
세종특별자치시	46.0	44.4	18.6	24.0	6.0	2.9	0.7	0.1	3.3	-
경기도	49.5	53.7	17.7	21.1	3.0	1.4	0.9	0.4	1.8	0.1
강원도	48.1	50.3	17.8	22.5	3.9	1.8	0.8	0.3	2.4	0.1
충청북도	41.6	50.5	16.2	21.4	4.2	1.6	2.2	0.4	3.6	-
충청남도	43.2	53.8	17	18.4	4.2	1.8	1.3	0.3	2.9	0.3
전라북도	46.3	63.8	14.1	15.7	2.7	1.4	0.9	0.2	1.2	-
전라남도	47.8	58.1	18.6	13.4	3.9	0.7	1.7	0.3	3.2	-
경상북도	49.7	59.4	13	15.5	3.9	0.8	0.5	0.5	6.4	0.1
경상남도	49.6	56.7	11.4	18.5	6.0	1.6	1.1	0.8	3.5	0.4
제주특별자치도	46.2	53.1	13.6	18.5	6.6	3.2	1.1	0.3	3.7	-

출처: 통계청, 2017 사회조사

다음은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통해서 본 준법수준에 대한 자기평가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자. 법을 아주 잘 지킨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가 1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라남도는 9.5%로 다소 낮다. 비교적 잘 지킨다는 응답의 지역별 격차는 더욱 크다. 서울특별시는 56.9%가 비교적 잘 지킨다고 답하였으나, 전라남도의 경우 47.6%가 비교적 잘 지킨다고 답하였다.

〈표 Ⅱ-30〉 준법수준(자기 평가)

	아주 잘 지킨다	비교적 잘 지킨다	보통	비교적 지키지 않는다	전혀 지키지 않는다
전국	11.9	52.9	32.3	2.8	0.1
서울특별시	13.6	56.9	27.5	2.0	0.1
부산광역시	11.2	51.0	35.3	2.4	0.0
대구광역시	8.7	50.2	38.2	2.8	0.2
인천광역시	12.2	52.1	33.4	2.3	0.0
광주광역시	11.6	49.3	35.2	3.8	0.1
대전광역시	10.4	51.9	33.3	4.4	-
울산광역시	15.2	50.2	32.1	2.1	0.4
세종특별자치시	11.8	53.5	31.4	3.2	0.1
경기도	14.3	49.6	33.9	2.1	0.1
강원도	11.6	51.4	34.1	2.8	0.0
충청북도	12.1	53.4	31.4	3.0	0.0
충청남도	10.1	53.1	34.3	2.5	-
전라북도	13.4	48.0	36.1	2.5	0.1
전라남도	9.5	47.6	39.0	3.7	0.2
경상북도	10.8	55.4	30.2	3.5	-
경상남도	14.3	48.6	34.3	2.7	0.1

자료: 통계청「사회조사」2010

〈표 Ⅱ-31〉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치 효능감

(단위: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4.9	18.5	34.0	32.3	10.4
도시(동부)	4.8	18.4	34.2	32.2	10.4
농어촌(읍면부)	5.5	19.1	32.8	32.4	10.2

자료: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2015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치 효능감은 본인이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자신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간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의 경우 도시는 23.2%, 농어촌은 24.6%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Ⅱ-32〉 부패에 대한 인식

사업경영에 있어서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기업, 개인의 비지니스)	매우 그렇다	21
	약간 그렇다	42.2
	보통이다	29.3
	별로 그렇지 않다	6.2
	전혀 그렇지 않다	1.4
지방정부 전반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시 및 기초자치단체, 시의회 및 기초자치단체의회, 교육기관 등)	매우 그렇다	22.3
	약간 그렇다	38.5
	보통이다	31.4
	별로 그렇지 않다	6.3
	전혀 그렇지 않다	1.5

출처: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사회조사 2017

〈표 Ⅱ-33〉 도민 정책 신뢰도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보통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1.1	12.7	60.3	23.0	2.9

출처: 전라북도, 전라북도 사회조사 2012

이 외에도 시민성과 관련하여, 각 지역별로 다양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대구광역시 사회조사에서는 ‘부패에 대한 인식’을, 전라북도 사회조사에서는 ‘도민의 정책 신뢰도’를 측정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사업경영에 있어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응답(‘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이 63.2%, 지방정부 전반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응답(‘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이 60.8%로 높게 나타났다.

전라북도 사회조사의 도민 정책 신뢰도의 경우, 신뢰한다(‘매우 신뢰’+ ‘약간 신뢰’)는 13.8%, 신뢰하지 않는다(‘별로 신뢰 안함’+‘전혀 신뢰 안함’)는 25.9%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사회조사는 각 지역별로 문항이 다르고, 매년 반복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비교평가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통계청이 사회통합과 관련된 통계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공통 항목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포용, 연대, 시민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사회통합 수준의 지역 간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문제는 포용, 연대, 시민성에 포함된 항목들이 정부를 평가하거나 정책에 대한 호오도, 그리고 정치참여의 수준 등과 관련되어 정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다루기에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계청에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게 하기 보다는 정치와 관련된 항목들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모듈화하여 포함시키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체계화하고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특히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서 사회통합 프레임워크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투표참여, 세금 납부, 법・규칙 준수와 같이 실천적 측면에서부터 지지 정당 유무, 이념적 성향과 같이 인식 측면에 이르기까지 조사항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정치 참여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이다. 전국단위 조사로서 유효사례수가 지역 간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만 70세 이상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5절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1.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해외 및 국내 사례 검토

가. 다차원적 접근: 라틴아메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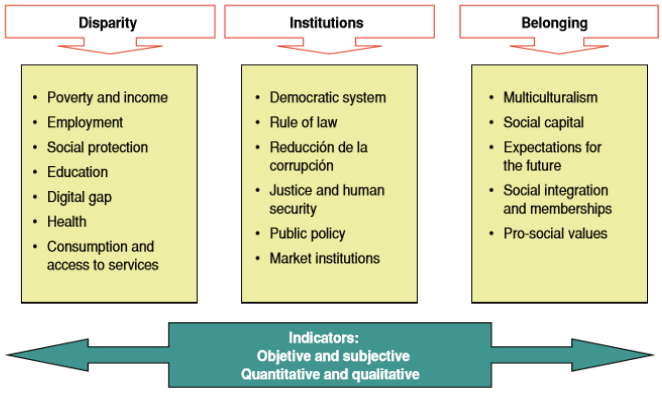
유엔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UN ECLAC)는「Social Cohesion in Latin America: Concepts, frames of reference and indicators」보고서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를 소개한 바 있다. ECLAC는 사회통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사회적 포용과 배제(instituted so-

cial inclusion and exclusion) 메커니즘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증법적 관계를 포착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입각한 사회통합의 촉진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통합의 측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권고하여 왔다. UN ECLAC(2007)는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정의와 더불어 사회 통합의 상태를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사회통합지표는 격차, 제도와 귀속감의 3가지 개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즉 이 위원회는 사회통합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며 사회적 포용과 배제의 매커니즘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사회통합 프레임워크는 사회적 수준에서 제도와 개인적 수준에서의 인식, 태도 등을 모두 포괄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때, 사회통합의 제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사회통합을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 공공 정책을 발견해내고, 정책적 차원에서의 투입·산출을 계산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지표는 국가 간, 국가 내 계층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적 특수성을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끔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영역의 중첩적 이슈에 대해 개념적, 현상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래의 <그림 Ⅱ-6>은 라틴아메리카 사회통합 프레임워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Ⅱ-6〉 UN ECLAC의 사회통합 개념틀



Source: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Social Cohesion: Inclusion and a Sense of Belonging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C/G.2335/Rev.1), Santiago, Chile, 2007.

나. 개인의 웰빙을 위한 사회통합 개념 접근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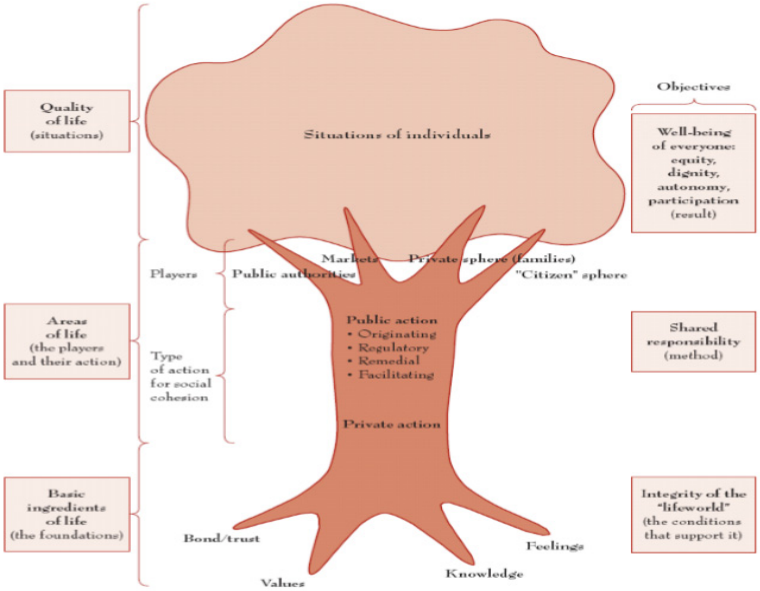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2005)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란 “격차를 최소화하고 양극화를 예방함으로써 장기인 측면에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웰빙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웰빙은 다음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용가능한 자원에 한 공평한 접근성, 다양성을 고려한 인간 존엄성 존중, 개인 및 집단의 자율성,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 참여 등이 그것이다.

유럽평의회에서 사용하는 사회통합 용어는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고, 사회전체의 민주주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사회가 선택하는 준거틀(reference framework)로 작동한다.

이 때, 사회통합의 최종적 목표는 삶의 질, 즉 모든 사람의 웰빙을 구현하는 것인데, 이는 결과로서 형평성, 존엄성, 자율성, 사회참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즉 유럽평의회의 사회통합 프레임워크는 사회통합을 개인의 삶의 질과 연결시킨 후, ‘누가 특히 더 웰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지’ 포착하기 위하여 6개의 통계적 취약집단을 설정한다. 여기에는 소수자, 이민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프레임워크는 <그림 Ⅱ-7>과 같다.

<그림 Ⅱ-7>이 나무에 비유하여 나타낸 사회통합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나무의 뿌리는 생활세계에 해당한다. 이 곳은 모든 사람을 위한 웰빙에 대한 견해를 합의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본질을 의미한다. 둘째, 나무 밑둥과 나뭇가지는 모든 사람의 복지를 위한 공동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각 구성원들과 그들의 행동을 의미한다. 공공 당국, 시장 및 시민 생활의 공적 및 사적 영역과 사회적 결속을 위한 일반적 관심사 활동의 4개 유형이 네 가지로 나뉘어져있다. 셋째, 나무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이자 나무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잎은 사람들의 안정된 생활 조건으로서의 웰빙을 나타낸다.

〈그림 Ⅱ-7〉 Tree of the key dimensions of social cohesion



자료: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p. 43

이처럼 사회통합을 나무라는 유기체에 비유하는 것은 사회통합이 각 요소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며, 특정 요소를 분리하거나 제외하고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 사회통합의 분야별 접근: 사회통합지표

사회통합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2011, 2012)은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여 사회통합을 평가하고, 사회통합의 위협요인 및 대처수단을 찾고자 사회통합지수를 개발하였다. 2010년, 2011년 연구에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적 검토 및 지표체계가 전반적으로 작성되었으며 2012년 연구는 실제적인 지수산출을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제시된 사회통합 체계는 사회통합 상태지표와 사회통합 조건지표 두 가지로 구성된다. 사회통합 상태지표가 주로 사회통합의 주관적 측면과 사회 참여를 표현하고 있다면 조건지표는 사회통합의 물질, 비물질 환경 요인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Ⅱ-34>와 <표 Ⅱ-35>는 각각 사회통합 상태지표, 조건지표체계를 의미한다.

〈표 Ⅱ-34〉 사회통합 상태지표

	주관적 요소 (사람의 마음 상태)	객관적 요소 (행동적 표출)
시민사회 통합	• 시민에 대한 일반 신뢰 • 다른 사회집단의 사람을 포함한, 동료시민과 협력 및 도움에 의지 • 소속감 혹은 정체성	• 사회참여와 시민사회의 활력 • 자원봉사 및 기부 • 주요 집단간 연합 및 괴리의 여부
시민사회-정부 통합	• 공적 인물에 대한 신뢰 • 정치 및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 • 소속감 혹은 정체성	• 정치참여(투표, 정당 등)

출처: 노대명 외(2010)

〈표 Ⅱ-35〉 사회통합 조건지표

구 분		절대적 박탈	상대적 격차
기본 지표	소 득	· 빈곤율 · 근로빈곤율(또는 취업빈곤율) · 박탈지수(*)	· 소득배율(5분위 소득격차) · 중산층 비중(*)
	고 용	· 실업률 · 저임금(저소득)근로자 비율	·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 성별/학력별/규모별 임금격차
	교 육	· 학교진학률/미진학률 · 중도탈락학생 비율	· 사교육비 격차(*) · 소득계층별 학업성취도 격차(*)
	건 강	· 의료소외층(*) · 의료비 과부담가구 비율(*)	· 소득계층별 질환발생율(*) ·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자부담금액(*)
	주 거	· 주거상실계층 비율(*) · 자산빈곤율(*)	·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 · 소득계층별 자산격차(*)
추가 검토 지표	가 족	· 이혼율 · 자살률	· 소득계층별 이혼율(*) · 소득계층별 자살률(*)
	금 융	·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 · 부채상환 연체율(*)	· 소득계층별 부채비율(*) · 소득계층별 부채상환 연체율(*)
	정 보	· 인터넷미활용인구 비율	· 소득계층별 인터넷미활용인구 비율(*)

주: *는 원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출 가능한 지표
자료: 노대명 외(2010)에서 인용

위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2012년 측정된 사회통합지수는 사회통합을 3개의 영역(사회 결속, 안정, 형평성)에 걸친 분야별 지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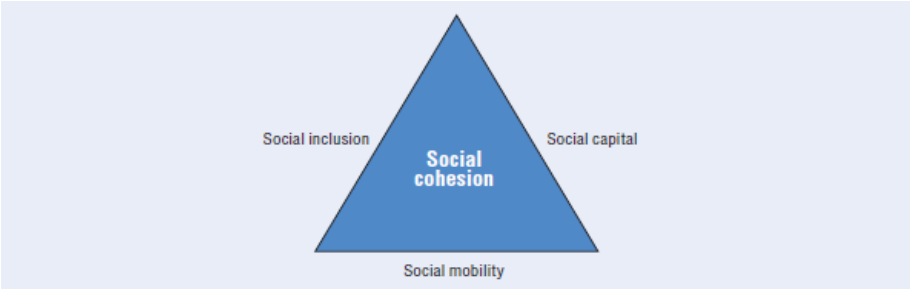
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야별 제시는 상호 이질적인 영역의 지표를 종합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를 줄여주면서, 사회통합의 동질적 측면의 정보는 종합하여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다차원 정보를 단일한 차원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존재하며, 지수 작성을 둘러싼 방법론 논란이 지수 작성·발표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라. 구체적인 사회문제 조정의 기준 : OECD

OECD는 사회통합이 규범적인 가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발전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동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문제를 조종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강조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의 시민들은 성장의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삶의 기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재분배와 관련한 정의의 감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기준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목적이면서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신뢰나 소속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구의 성격을 지닌다.

사회통합은 여러 차원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조정을 위한 개념적 준거틀(conceptual framework)을 제공한다.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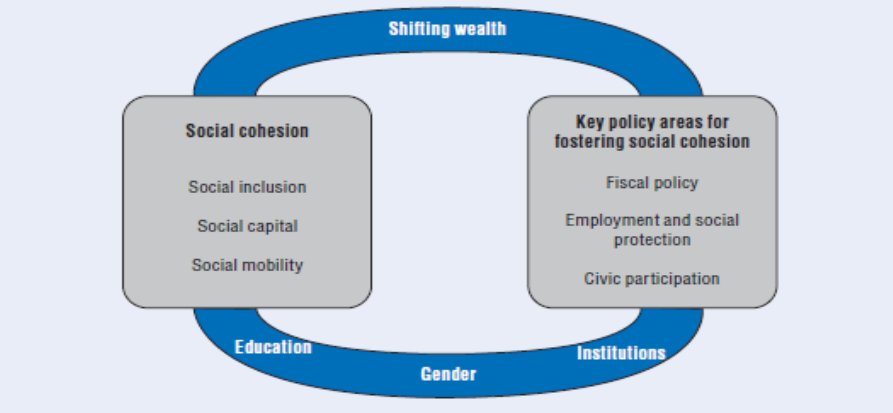
〈그림 Ⅱ-8〉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출처: OECD(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p54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이라는 세 가지 차원은 모두 중요하지만, 각 국가의 문화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어느 한 측면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더불어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 차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통합을 세 가지 차원으로 조망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의 정책이 각 차원에서 다른 효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혹은 서로 다른 정책들이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는 것은, 동시에 교육을 통한 양극화와 배제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OECD에서는 사회적 통합을 하나의 개별적인 가치나 지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차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9〉 변화하는 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대한 프레임워크



출처: OECD(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p60

사회통합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또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여러 차원이 연결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OECD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일국적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시스템에서의 연결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각 국가가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위협과 기회의 요인은 사회통

합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OECD는 사회통합 프레임워크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영역과 이슈를 짚고 있다. 위의 <그림 Ⅱ-9>는 글로벌 경제의 변화가 각국에 새로운 기회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교육, 젠더, 제도 등의 정책을 통해 개입함으로써 위기를 관리하고 발전과 사회통합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고 있다.

마. 주관적 차원의 강조: 스캔론-모나시 인덱스

호주의 스캔론 재단에서는 사회통합조사(Scanlon Foundation Mapping Social Cohesion national survey)를 실시하고 있는데(2007, 2009-2016), 이 중 사회통합과 관련된 항목을 정리하여 스캔론-모나시 인덱스(Scanlon-Monasch Index: SMI)를 제시하고 있다. 스캔론재단의 사회통합조사는 호주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이민을 통한 인구증가를 저해하는 사회적・문화적 장벽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절한 측정을 통해 사회통합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영역을 찾는다는 단계적 접근인 셈이다. 이를 통해 호주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상을 포착하고, 사회통합의 의미를 보다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SMI는 사회통합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18가지 항목으로 재구성 한 지표이다. SMI는 사회통합을 사회정의와 평등, 수용과 거부, 가치, 소속감, 참여라는 다섯 가지 차원을 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 다섯 가지 차원은 주관적 차원의 인식이나 감정, 가치규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호주의 SMI 조사가 주관적 차원을 강조하는 것은 호주가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라는 점과 맞닿아 있다. 이민자가 많은 사회에서는 믿음이나 민족적 차이에 따라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며, 개인수준이 아닌 커뮤니티 간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 차이가 완화될 수도 배제가 심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가 기반하고 있는 민족성, 문화적 정체성과 같이 각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가치체계 수준에서 사회적 균열지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SMI에서 제시하는 사회통합의 다섯 가지 차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표 Ⅱ-36〉 사회통합의 다섯 가지 차원

차원	내용
소속감	가치의 공유와 신뢰, 일체감
사회적 정의와 평등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참여	자원활동을 비롯한 정치, 지역활동 참여
수용과 거부, 정당성	이주민이나 소수자에 대한 태도, 차별경험
가치(worth)	재정적 만족, 행복감, 미래에 대한 기대

특히 이주민이 많고,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응답자의 출생국가와 거주지역을 인구학적 설문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조사설계에서부터 섬세하게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출신국가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의견과 사회 전체의 의견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는 이주민의 증가가 고립된 커뮤니티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호주사회의 필요를 반영한 설계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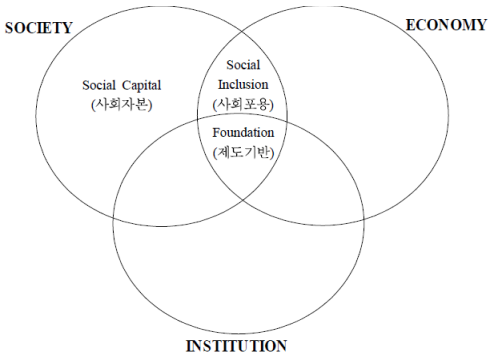
바. 정책효과의 구체적 측정과 국제적 비교 : 국민통합지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전신인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수행한 사회통합지표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국민통합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통합지표(2015)를 개발하였다. 국민통합지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주요 영역으로 삼되, 사회와 경제, 사회와 제도가 교차하는 부분들을 포함시킨다. 사회영역은 '사회자본'으로, 사회와 경제가 교차하는 '사회포용'으로, 사회, 경제와 제도가 만나는 곳은 '제도기반'으로 구분하여 지표체계의 대분류로 구성하고 있다.

국민통합지표는 궁극적으로 정책 효과를 파악하는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분류 차원에서는 정책변수를 설정하고 있으며 일회적인 측정이 아니라 지표수준의 변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계열적으로 축적되며,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국민통합지표 보고서가 다른 보고서들과 구별되는 점 중 하나는 국민통합에 대하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정도와 객관적인 지표를 연계하여 비교함으로써 객관적 지표와 체감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 차이가 큰 영역일수록 정책적 개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정도의 차이, 영역의 중요성들을 고려하여 정책적 우선순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Ⅱ-10〉 국민통합지표 지표체계의 구성



출처: 조병구 외(2015) p.61에서 인용

2.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외 자료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통계 프레임워크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먼저 구성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의 현황과 변화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통계는 상태와 변화의 측정을 포괄한다.

둘째, 사회통합에 대해 국제적 비교의 준거틀로서 활용 가능해야 한다.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려면 표준적 문항과 기준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능한 모든 사회통합 통계지표를 생산하는 대신 효용도가 높은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프레임워크를 간명하게 구성한다.

넷째, 통계의 효용도는 정책적 활용도와 연관되어야 한다. 정책적 활용을 통해서 현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정부 통계의 효용이 높아진다.

이러한 구성 원칙에 따라서 사회통합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프레임워크에는 객관적 실태와 주관적 의식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예컨대 객관적 실태에 속하는 것으로 포용 영역에 차별 경험이 있다면, 연대 영역에 사회집단 참여나 사회관계 등이 있고, 시민성 영역에는 정치적 참여가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통합 영역에는 주관적 의식에 대한 측정 또한 중요하다. 가치지향적인 속성을 갖는 사회통합 분야의 특성상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 및 그 결과들이 모두 통합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관적 의식에는 개인의 관용이나 준법정신과 같은 의식적 성향과 함께 신뢰나 투명성, 공정성 등 객관 현실에 대한 평가가 모두 포함된다.

둘째, 사회통합의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사회통합에 대한 각종 통계들과 비교 가능하도록 통계의 항목과 측정 방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통합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공통의 합의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 우선 용어와 개념 측면에서도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구성 영역에서도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통계와 관련해서도 절대적으로 따라야할 국제적 기준이나 표준적 프레임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해외 프레임워크를 비교하여 공통된 것들을 추출하고 한국 현실에 적합한 것들을 추려서 한국 현실에도 맞고 국제비교도 가능하도록 프레임워크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해외에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누락된 것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위의 세 번째 원칙에 따라서 모든 관련 내용이나 요소들을 포괄하기보다는 효용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회통합은 전체 사회 혹은 지역사회 등 거시적 수준에서의 현상이지만 직접적으로 사회통합을 거시적 수준에서 측정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에 대한 대부분의 통계 자료는 개인 수준에서 수집하고 이를 거시적 수준에서 평균과 분산 등의 통계수치로 요약해서 사회통합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거시적 수준에서의 사회통합의 평가는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할 경우도 있고 사회의 하위집단 예컨대 사회적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도 있으며, 사회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회통합의 평가 대상에 따라 정책활용도가 높게 통계를 작성하려면 개인 차원에서 통계가 수집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원칙과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해외 및 국내 선행사례들을 종합하여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면, 그 하위영역으로는 포용(inclusion)과 연대(cohesion) 그리고 시민성(citizenship)이 포함된다.

포용과 연대, 그리고 시민성의 세 영역의 관계를 보면 포용이 가장 선행적 조건이다. 어떤 사회에 속한 일부 성원들이 어떤 이유로든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으면 그 사회는 갈등의 가능성이 만연하고 통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의 성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 성원들 간에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이 없거나, 사회성원들이 시민으로서의 자각이나 책임을 잊고 규칙이나 규범을 위반한다면 사회는 통합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해외 및 국내 선행 사례들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들 세 하위 영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표 Ⅱ-37〉 국내외 사례 및 본 연구 프레임워크 비교

프레임워크	포용	연대	시민성	
UN ECLA	격차	귀속감	제도	
유럽 평의회	공평한 접근성, 존엄성	자율성, 참여		
보사연/ 사회통합위	형평성	결속		안정
OECD	사회적 포용, 사회적 이동	사회적 자본		
SMI	수용과 거부, 정당성	소속감, 참여		정의와 평등, 가치
국민통합지표	사회포용	사회자본	제도기반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사회통합의 세 하위영역들 중에서 포용과 연대는 주로 사회의 공동체(성)와 관련된 측면이 강하고 시민성

은 사회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연대는 다른 통계 프레임워크나 지표체계에서 사회자본으로 이름 붙인 것과 관련이 깊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 포용(inclusion): 사회 성원 자격의 배제 없이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 연대(cohesion): 사회성원들 간의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통해 협력 가능한 것
- 시민성(citizenship): 공적영역에 신뢰와 효능감 있게 참여하며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것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의 내용 및 하위영역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세 가지 쟁점이 있다. 사회통합을 포용과 연대, 시민성의 세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사회보장과 주관적 웰빙, 그리고 가치와 규범, 의식을 포함할 것인가의 쟁점이다. 사회보장과 주관적 웰빙은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나, 「국가주요지표」 및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에서는 사회통합의 하위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가치와 의식은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탈물질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가치와 규범, 의식의 경우 사회통합이 앞서 가치지향적인 면이 있다고 하였는데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가치와 규범에 대한 고려가 빠지기 힘들다. 예컨대 국민들의 가치관이 물질주의적인지 아니면 탈물질주의적인지, 집단주의적인지 개인주의적인지 등의 문제는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또한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사회통합의 시민성 영역에 포함되는데 어떤 정의의 기준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즉 기회의 정의와 결과의 정의, 노력과 능력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는지 등은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사회에 대한 가치와 규범은 사회통합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포괄적으로 관련을 갖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한정해서 포함시키기는 무리이다. 따라서 가치와 규범, 혹은 가치와 의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웰빙의 경우, 사회통계의 중요한 지향 가치이기도 하다. 사회통계를 이루는 많은 분야들이 모두 삶의 질과 주관적 웰빙을 지향해서 경험적 측정과 현실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동안 주관적 웰빙은 사회적 통합과 관련해서 취급되어온 적이 많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웰빙이 사회통합에만 관련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적 분야로 독립해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통합에 주관적 웰빙을 포함하지 않았다. 주관적 웰빙은 건강, 교육, 일과 일자리, 여가, 사회통합 등 여러 사회통계 영역의 종합적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복지의 문제이다. 사회복지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사회적 분배의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높여 사회의 질 또한 높인다. 결국 사회복지를 통해 국민들은 기본적 삶의 기회를 부여받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경우 현대의 복지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통합만이 아니라 소득, 건강, 가족, 교육 등 사회통계의 여러 영역들에 동시에 관련을 맺고 있어 사회통합 영역에 한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복지라는 문제는 영역간 교차 통합영역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를 사회통합 분야의 하위 영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에는 사회통합을 포착해낼 수 있는 포용, 연대, 시민성이라는 3개의 하위영역이 있으며, 각 영역별로는 그 영역을 가늠할 수 있는 중영역의 지표와 그 지표생산과 연관된 부차적인 준거적 통계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중영역은 해당 영역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요소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제 각 영역별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포용

사회통합을 포용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중심축은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관용, 그리고 사회적 이동 기회의 보장이다. 사회적 포

용이 약해지면 신분과 같은 구별이 등장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하위의 신분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져서 사회통합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인정과 배경이나 특성에 상관없이 포용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기본적 전제라고 할 수 있다.

포용은 배제 및 차별의 반대 개념이다. 포용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법 앞에서의 평등과 관련된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별과 배제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어느 사회에서나 성 평등은 원칙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불평등과 차별이 자행되어 왔으며 그밖에도 사회마다 제각기 다양한 형태로 차별과 배제가 존재한다. 하나의 예로 한국에서는 지역간 불평등과 차별이 민감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존재해온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거대 사회 혹은 역사적 이유로 다민족이 공존하는 많은 사회들에서는 인종과 종족집단 간의 차별과 배제도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화에 따라 인종과 종족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점점 더 많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자 등 다양한 경로로 유입된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이들에 대한 태도가 포용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포용은 사회경제적 이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회경제적 이동의 기회가 제한되고 이동이 정체되면 기존의 불평등이 지속, 고착되며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제약되면 사회적으로 효율성과 혁신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진다. 자신의 인종이나 성별 혹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노력을 통해 자신의 가진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이나 불안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불평등은 사회통계에서 어느 특정 분야에 해당되기 보다는 통합영역의 쟁점으로 여러 분야에 관련되지만 이동성은 사회통합의 분야에서 포용 영역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포용 영역의 첫 번째 중 영역은 소수자에 대한 보호이다. 소수자 보호의 1차 준거에서는 차별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아울러 소수자에 대한 관

용 여부를 파악한다. 차별 경험의 유무에 대한 2차 준거에서는 1차 기준에 따른 차별 경험의 유무를 교육이나 취업, 사법 등 다양한 영역별로 구분해서 파악하고, 3차 준거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빈번한 차별의 기준이 되는 성별과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 경험의 유무를 파악한다. 차별 경험 유무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관용 여부는 일반 시민들이 소수자들을 차별적으로 여기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관용 여부의 1차 준거에 덧붙여 대상이 되는 집단 즉 장애인, 외국인 등의 구분이 2차 준거가 되며, 이들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는 이웃, 가족, 친구, 동료 등의 관계특성이 3차 준거가 된다.

두 번째 중영역은 사회 이동성이다. 사회이동성의 1차 준거는 이동 가능성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즉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구분한다.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2차 준거는 세대간 이동인지 아니면 세대내 이동인지를 구분해서 파악한다.

〈표 II-38〉 포용 영역 통계 생산 프레임워크

중영역	1차 준거	2차 준거	3차 준거	측정변수 /추가 필요변수
소수자 보호	차별 경험 유무	영역별 (교육, 취업, 사법 등)	성별, 출신지역별	배경별 영역별 차별 경험자 비율
	관용 여부	소수자 대상 (장애인, 외국인 등)	관계별 (이웃, 가족, 친구, 동료 등)	대상별 관계별 관용 비율
사회 이동성	이동 가능성 인식	세대간/세대내		세대간/세대내 이동 가능성 긍정 비율

나. 연대

포용이 사회 혹은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지위와 기회에 대한 인정이라면, 연대는 사회 혹은 공동체 성원간의 관계 유지와 성장이다. 연대는 때로는 사회적 응집이나 사회적 자본으로 불리기도 한다. 성원들 간에 건전한 관계가 유지, 발전되지 못하면 공동체는 모래알처럼 서로 겉도는 사람들의 집단이 된다. 그 결과는 서로 믿지 못하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연대는 근대적 개념인 시민권(citizenship)의 현대적 확장과 관련이 있다. 근대적 기준으로 시민권은 한 사회의 성원으로써 누리는 법적, 제도적 권리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즉 포용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민권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비시민의 경계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성숙과 더불어 정보화, 세계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시민권 개념도 확장되었는데, 이제 시민이라 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정치관심 및 효능감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사회적 이슈와 정치 현안에 참여하는 주체를 일컫는다. 즉 국가가 제도적으로 부여한 권리를 누리고 이에 따르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수동적 국민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인 정치적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지키고 이를 공동체의 구성원과 함께 누리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능동적 시민으로 시민의 의미가 변모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가족과 친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된다. 한편, 능동적 시민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나 공적영역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과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사회자본과 사회 지원망을 구축해 도움을 교환하는 체계를 시민사회에 구축한다. 여기서 사회적 지원이란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웰빙을 촉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는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과 질이 중요해진다.

연대 영역의 중영역은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와 관계, 대인 신뢰이다. 사회적 참여의 1차 준거는 소속감과 정체성, 사회단체 참여, 자원봉사와 기부이다. 소속감과 정체성의 2차 준거는 지역사회 수준(국가, 광역, 기초 등)이며, 사회단체 참여의 2차 준거는 사회단체의 종류(이익단체, 친교단체 등)이다. 사회적 지지와 관계의 1차 준거는 도움을 받을 사람 수와 연락하는 사람의 수이다. 도움을 받을 사람의 수에 대한 2차 준거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별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와 몸이 아플 때, 그리고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할 때 등으로 나뉘며, 연락하는 사람의 수에 대한 2차 준거는 친척, 친구 등 대상별로 그리고 연락하는 방법과 빈도로 구분된다. 대인 신뢰의 1차 준거는 일반화된 신뢰와 대상별 사람의 신뢰 여부이다. 일반화된 신뢰는 대상의 구분이 없이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라면

대상별 신뢰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가장 먼 낯선 사람까지 신뢰 여부를 묻고 이로부터 본인을 중심에 둔 동심원적 구조에서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반경범위를 파악한다.

〈표 Ⅱ-39〉 연대 영역 통계 생산 프레임워크

중영역	1차 준거	2차 준거	측정변수/추가 필요변수
사회적 참여	소속감과 정체성	대상별(지역사회 수준)별	지역사회 수준별 소속감 및 정체성 비율
	사회단체 참여	사회단체 종류별	사회단체 참여율, 단체별 참여율
	자원봉사/기부 경험		자원봉사 비율, 기부 비율
사회적 지지와 관계	도움을 받을 사람	필요(물질적, 정서적 등)별	도움 필요시 고립의 비율
	연락하는 사람 수	방식/빈도/대상 (친구, 친척 등)별	대상별 평균 사회적 관계의 수
대인 신뢰	일반화된 신뢰		일반화된 신뢰의 수준
	사람의 신뢰 여부	대상(가족, 친구, 동료)별	신뢰의 반경범위

다. 시민성

앞서 연대가 주로 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시민성은 시민사회라는 공적 영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이때 시민성은 거버넌스라는 주제를 사회통계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즉 시민들이 시민사회라는 공적 영역에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며 거버넌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그에 따라 공적 제도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이다. 시민성의 중영역은 시민사회 참여, 법과 질서, 거버넌스,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이다.[4] 시민사

4) OECD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도 이와 유사하다. OECD는 거버넌스를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관점에서 정치참여(투표율 등), 민주주의 질(선거의 공정성과 자유, 정보의 이용가능성, 직접 참여), 대표성(국회의 구성), 정치 효능감, 공적 제도 신뢰, 공적 제도 부패 등의 차원을 포함한다(OECD, 2017).

회 참여의 1차 준거는 정치적 효능감, 선거 참여, 정치행위 참여이다. 선거 참여와 정치행위 참여의 차이는 전자가 소극적인 유권자의 입장이라면 후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법과 질서의 1차 준거는 준법의식과 기초질서 준수 여부이다. 준법의식이 납세, 국방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법에 대한 태도라면, 기초질서 준수는 그보다 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질서의 준수 여부이다. 거버넌스의 1차 준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거버넌스 자체는 행정이나 정치 등 통계의 다른 영역에 해당하지만 시민들이 거버넌스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보는가는 현대 거버넌스의 일반적 평가기준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는 공적 영역을 이루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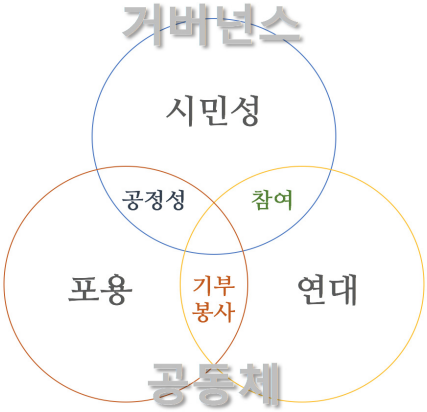
〈표 II-40〉 시민성 영역 통계 생산 프레임워크

영역	1차 준거	2차 준거	측정변수/추가 필요변수
시민사회 참여	정치적 효능감		정치와 행정에 대한 영향력 인식
	선거 참여		투표율
	정치행위 참여	정치 활동 종류별	투표외 정치행위별 경험 유무
법과 질서	준법 의식		준법행위의 경험 및 의향
	기초 질서 준수	종류별	종류별 기초질서 준수 여부
거버넌스	투명성		부패 정도 인지
	공정성		기관별 공정성 인지
제도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여부	대상별	기관별 신뢰 정도

라. 하위 영역간 관계

앞서 살펴본 세 하위영역 각각은 사회통합에 필요불가결한 구성요소들이다. 또한 이들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중첩되는 영역이나 내용이 존재한다. 아래 그림은 사회통합의 세 하위영역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Ⅱ-11〉 사회통합 프레임워크



이 그림에서 특징적인 것은 하위영역들 간에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포용과 연대에는 기부와 봉사라는 중첩 영역이 존재한다. 기부와 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포용이 되며, 이를 주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속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시민성과 연대 간에는 사회, 정치적 참여가 중첩된다. 정치적으로 활발한 참여는 거버넌스를 민주적으로 만들어 시민성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으로 활발한 참여는 사회자본 증진을 가져와 연대를 높이기 때문이다.

시민성과 포용 사이에는 공정성이 중첩되어 공정성이 높아지면 거버넌스가 개선되며, 공정한 사회에서는 기회가 고르게 부여되어 포용이 높아진다.

제3장

사회통합 통계 작성현황 분석

제1절 사회통합 통계 작성현황

1. 사회통합 현황과 사회통합 통계

사회통합의 세 가지 영역으로서 포용과 연대, 시민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국내외 통계지표들을 살펴본다. 통계지표들의 출처는 사회통합과 관련성이 높은 조사들이며, 국내적으로는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및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성균관대학교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 국외적으로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Social Cohesion Radar(BS) 등을 고려하였다.

가. 포용

먼저 포용에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이동성 관련 통계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가능성을 묻는다. 이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함께 측정한다. 둘째, 소수자 포용성 관련 통계이다. 가난한 사람, 노인, 장애인, 전과자, 탈북민,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 등의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를 척도로 활용하기도 하고, 추가 세금 지불 의사를 묻기도 한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나와 다른 집단(국가, 인종, 종교 등)에 소속된 사람에 대한 포용성을 묻기도 한다. 셋째, 사회갈등 관련 통계이다.

사회갈등의 수준, 원인,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사회갈등 해결에서의 주요 행위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표 Ⅲ-1〉 포용 관련 통계

측정내용	문항	출처
사회적 이동성 (본인, 자녀)	5-3.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5-4. 나는 내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2 (2012)
사회적 이동성 (자녀)	25. 귀하의 자녀들이 귀하의 현재 나이가 될 때 자녀들의 생활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없더라도 있다고 가정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KGSS (2014)
소수자 포용성 (가난한 사람)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소수자 포용성 (노인)	44. 다음은 여러 가지 정부지출 분야들입니다. 각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더 늘려야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귀하가 “훨씬 더 늘려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금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6) 노인연금	KGSS (2014)
소수자 포용성	41. 귀하는 다음의 구성원들을 어떤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1) 장애인 (2) 결손가정의 자녀(조손가정/한부모가정 등) (3)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4) 전과자 (5) 동성애자 (6) 북한이탈주민(탈북자/새터민)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측정내용	문항	출처
소수자 포용성	On this list are various groups of people. Could you please mention any that you would not like to have as neighbors? V36. Drug addicts V37. People of a different race V38. People who have AIDS V39. Immigrants/foreign workers V40. Homosexuals V41. People of a different religion V42. Heavy drinkers V43. Unmarried couples living together V44. People who speak a different language	WVS(Wave 6) (2012)
	(p.624) 다음의 대상 집단 구성원들과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탈북자 (2) 중국 동포(조선족) 이민자 (3) 외국인 이민자 (4)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2 (2012)
타집단 포용성 소수자 포용성	1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회집단에 대하여 얼마나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타 정치집단에 대한 포용 (2) 타 종교집단에 대한 포용 (3) 타 지역출신에 대한 포용 (4) 소득의 차이가 큰 집단에 대한 포용 (5) 장애인에 대한 포용 (6) 새터민(탈북자)에 대한 포용 (7) 전과자에 대한 포용 (8) 고아에 대한 포용 (9) 결손가정에 대한 포용 (10) 미혼모에 대한 포용 (11) 서구 유럽인에 대한 포용 (12) 결혼이주자에 대한 포용 (13) 산업인력 이주자에 대한 포용	사회갈등·사회통합에 관한 실태조사 (2012)

측정내용	문항	출처
타국인 포용성 소수자 포용성	117. 귀하는 이주자들과 아래와 같은 형태의 관계를 맺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내용들을 읽고 찬성 또는 반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관계맺기 종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내는 것,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나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1)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동남아시아인 (2) 중국 동포(조선족) (6) 미국인 (3) 중국인(한족) (7) 유럽인 (4) 일본인	KGSS (2010)
사회갈등	42.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개인 간, 집단 간, 개인-집단 간) (2)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 (3)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개인 간, 집단 간, 개인-집단 간) (4) 빈부격차 (5) 권력 집중 (6) 기회의 불평등(교육, 취업 등) (7) 갈등 조정 기구 및 제도의 미비 (8) 기타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43. 귀하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빈곤층과 중·상층 간의 갈등 (2)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간의 갈등 (3)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 (4)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 (5) 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갈등 (6) 고령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7)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 (8)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94.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 집단 간에는 차이나 갈등이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2) 노동자층과 중산층 (3) 경영자와 노동자 (4) 최상층과 최하층	KGSS (2014)

측정내용	문항	출처
사회갈등	(p.625)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 무엇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역갈등 (2) 계층갈등 (3) 세대갈등 (4) 이념갈등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2 (영역체계보고서) (2012)
사회갈등 (해소 주체의 노력)	44.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다음 집단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육계 (2) 국회 (3) 기업 (4) 노동조합단체 (5) 법조계 (6) 시민단체 (7) 언론(신문, 방송) (8) 정부 (9) 종교단체(교회, 성당, 사찰 등)	사회통합실태 조사 (2016)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중심 집단)	45. 귀하는 우리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교육계 (2) 국회 (3) 기업 (4) 노동조합단체 (5) 법조계 (6) 시민단체 (7) 언론(신문, 방송) (8) 정부 (9) 종교단체(교회, 성당, 사찰 등)	사회통합실태 조사 (2016)

나. 연대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이나 연대, 공동체와 관련된 설문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타성 관련 설문이다. 상대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한

지, 문제 해결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되는지 등을 측정한다. ISSP에서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동일하게 내야 할지, 더 적게 내야 할지를 묻는다. 둘째, 사회 참여 설문이다. 정당이나 노조, 종교단체와 같은 사회단체 활동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다. 셋째, 소통 관련 설문이다. 집단 간 소통과 개인적 소통의 정도를 묻는다. 넷째, 연결성 설문이다. 필요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외로움이나 자살충동, 고립감 등을 느끼는지에 대하여 질문한다. 다섯째, 대인 신뢰 관련 설문이다. 일반적인 신뢰나 가족이나 이웃, 외국인 등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는다.

〈표 Ⅲ-2〉 연대 관련 통계

측정내용	문항	출처
이타성 (고소득자 세금 납부)	7. Do you think people with high incomes should pay a larger share of their income in taxes than those with low incomes, the same share, or a smaller share?	ISSP Social Inequality Ⅳ (2009)
이타성	16.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2)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3)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p.610) 다음의 주장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타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2)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통계청 사회조사 신규문항)	2012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2 (영역체계 보고서) (2012)
	91. 다음과 같은 의견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 사람들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2)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KGSS (2011)

측정내용	문항	출처
이타성	E037. Now I'd like you to tell me your views on various issues. How would you place your views on this scale? People views on this scale? People should take more responsibility to provide for themselves vs The government should take mor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everyone is provided for (1) People (Individuals) should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for themselves (2) The government (state) should take everyone is provided for Missing (don't know, refusal, not answered)	베르텔스만 재단 Social Cohesion Rader: WVS(1987-2008, E037) (2013)
사회 참여 (사회단체 활동)	17. 귀하는 다음 사회단체에 대하여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 활동 정도: 소속된 적이 없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 정당 (2)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3) 종교단체 (4) 동호회(스포츠, 여가, 문화 포함) (5) 시민운동단체 (6)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상회, 주민조직) (7) 동창회, 향우회 (8)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9)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측정내용	문항	출처
사회 참여 (사회단체 활동)	E11. 다음의 각 단체나 조직과 관련해 가입 및 활동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스포츠, 레저동호회 (2) 문화활동 동호회 (3) 노동조합 (4) 기업인, 상인, 농민, 전문직업인 단체 (5) 소비자단체 (6) 인권, 구호단체 (7) 환경, 동물보호단체 (8) 종교단체((교회, 사찰 등) (9) 정당 (10) 교육・교사, 학부모단체 (11) 청소년, 퇴직자, 노인, 여성 관련 봉사단체 (12) 아파트 자치회 등 주민단체 (13) 재향군인회 등 퇴역군인단체 (14) 자선, 사회봉사단체 (15) 동창회 (16) 향우회 (17) 종친회 (18) 순수친목단체 (19) 사이버커뮤니티(포털사이트・카페・SNS 등) (20) 기타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 (2016)
	2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2014. 5 14 ~ 2015. 5. 13)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있다, 없다, 3순위까지 기입) (1) 친목 및 사교단체 (2) 종교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 (3)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 (4) 시민 사회단체(환경 단체, 봉사 단체 등) (5) 학술 단체 (6) 이익 단체(노조, 의사회, 약사회 등) (7) 정치 단체 (8)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9) 기타	2015 사회조사 (2015)

측정내용	문항	출처
사회 참여 (사회단체 활동)	Q. 25-35 Now I am going to read off a list of voluntary organizations. For each organization, could you tell me whether you are an active member, an inactive member or not a member of that type of organization? (1) Church or religious organization (2) Sport or recreational organization (3) Art, Music or educational organization (4) Labor Union (5) Political Party (6) Environmental organization (7) Professional association (8) Humanitarian or charitable organization (9) Consumer organization (10) Self-help group, mutual aid group (11) Other organization	WVS (Wave 6) (2012)
	Q. 23-27 People sometimes belong to different kinds of groups or associations. For each type of group, please indicate whether you, belong and actively participate, belonging but don't actively participate, used to belong but do not any more, or have never belonged to it. (1) A political party (2) A trade union, business, or professional association (3) A church or other religious organization (4) A sports, leisure or cultural group (5) Another voluntary association	ISSP Citizenship (2014)
집단 간 소통	26.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다음 집단 간에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 가족 간 소통 (2) 직장 구성원 간 소통 (3) 이웃 간 소통 (4) 세대 간 소통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측정내용	문항	출처
집단 간 소통	27. 귀하는 다음 집단 간에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 중앙정부와 국민 간 소통 (2) 국회와 국민 간 소통 (3)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국민 간 소통 (4)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의회)와 국민 간 소통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개인적 소통	28. 귀하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전화, 우편, 인터넷, 대면 등의 방식으로 접촉하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 사람 수: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28-1. 그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십니까?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판매원/택배기사 등 업무상 접촉은 제외) * 사람 수: 없다, 1~2명, 3~4명, 5~9명, 10~19명, 20~49명, 50명 이상 28-2. 그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십니까?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22. On average, about how many people do you have contract with in a typical week day, including people you live with. We are interested in contact on a one-to-one basis, including everyone with whom you chat, talk, or discuss matters. This can be face-to-face, by telephone, by mail, or on the internet. Please include only people you know. Please select one from the following categories that best matches your estimate.	ISSP (2014)
개인적 소통	c2. Using this card, how often do you meet socially with friends, relatives or work colleagues?	베텔스만 재단 Social Cohesion Rader (2013): ESS 2002

측정내용	문항	출처
연결성	29.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연결성 (필요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2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이 있습니까? 23-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23-2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23-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사회조사 (2015)
	If you were in trouble, do you have relatives or friends you can count on to help you whenever you need them, or not?	베텔스만 재단 Social Cohesion Rader (2013) : EQLS 2011 (q46b), EQLS 2003 (q36b), GWP (27), ESS 2006 (e12)
연결성 (외로움, 자살충동, 고립감)	30. 귀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1) 나는 외롭다 (2)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3)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측정내용	문항	출처
연결성 (자살충동 경험)	18.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5.5.18 ~ 2016.5.17)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조사 (2016)
연결성 (자살충동 이유)	28-1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2) 이성 문제가 원만치 않아서(실연, 파혼 등) (3)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 때문에 (4) 직장 문제 때문에(실직, 미취업 등) (5) 외로움, 고독 때문에 (6) 가정불화로 인해 (7) 학교 성적, 진학 문제 때문에 (8) 친구나 동료들과의 불화 및 따돌림 때문에 (9) 기타	
일반적 신뢰	31. 귀하는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일반적 신뢰	E7.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 (2) 사람들을 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 (2016)
대인 신뢰	15.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KGSS (2014)
	24. 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need to be very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 (1) Most people can be trusted (2) Need to be very careful	WVS (Wave 6) (2012)
	32.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1) 가족(친척 포함) (2) 이웃 (3)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친구, 직장동료 등)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5) 국내 거주 외국인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다. 시민성

마지막으로 시민성이나 거버넌스 관련 설문문항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효능감 관련 설문이다. 자신의 정부에 대한 영향력, 자신의 의견에 대한 정부의 관심, 자신의 정치현안에 대한 지식 정도, 다른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지식 정도 등을 질문한다. 둘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관련 설문이다. ISSP에서는 민주주의에서의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 시민이 아닌 장기 거주자의 경우 투표권을 주는 것, 시민이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 것, 건강보험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선거시 투표 참여, 세금 납부, 법규 준수, 정부에 대한 관심, 사회 및 정치적 단체 활동, 타인의 의견 존중, 윤리적 소비, 국가 위기시 군복무 등을 질문한다. 셋째, 정치 참여 관련 설문이다.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토론, 온라인 상 의견 개진,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시위 참여 등, 다양한 정치 참여적 활동 정도, 정치에 대한 관심, 투표 참여, 지지 정당 여부, 이념 성향 등을 질문한다. 넷째, 자긍심이나 소속감 같은 정체성 관련 설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사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정도 등을 질문한다. 다섯째, 청렴성 관련 설문이다. 정부부처, 국회, 법원, 경찰, 신문사, 교육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등, 여러 공적/사적 기관의 청렴성 인식을 질문한다. 여섯째, 공정성 관련 설문이다. 정부부처나 법원 등, 정부 관련 공정성, 교육기회나 취업기회 등, 사회 전반의 공정성, 형평성 등을 질문한다. 일곱째, 제도 신뢰 관련 설문이다. 정부부처나 국회, 법원, 시민단체, 대기업, 금융기관 등, 여러 공적/사적 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를 질문한다.

〈표 Ⅲ-3〉 시민성 관련 통계

측정내용	문항	출처
정치 효능감	19.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2)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 (3)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4)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현안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71. 귀하는 다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1)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영향도 주기 어렵다 (2) 정부는 나 같은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 (3)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4)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정치나 행정에 대해 나보다 잘 알고 있다	KGSS (2014)
정치 효능감	11-4.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정치효능감(p.603) 귀하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떠한 발언권도 없다 (2) 일반 시민들은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3)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4)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나 정부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2 (2012)

측정내용	문항	출처
시민성 (시민으로서의 권리)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about people's right in a democracy. On as scale of 1 to 7, where 1 is not at all important and 7 is very important, how important is it : Q33. That people convicted of serious crimes lose their citizen rights Q34. That long-term residents of a country, who are not citizens, have the right to vote in that country's national elections Q35. That citizens have the right not to vote Q36. That health care be provided for everyone	ISSP Citizenship Ⅱ (2014)
시민성 (투표)	11-7.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시민적 의무인식(p.605) 사람마다 투표에 관한 의견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표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나 정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투표는 꼭 해야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투표하는 것이 만주시민의 선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본인의 의견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얼마나 확고하게 투표가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2 (2012)
시민성 (시민으로서의 의무)	18.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2)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3)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4)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5) 사회 또는 정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6)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7)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이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한다 (8) 국가 위기 시 기꺼이 군복무한다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측정내용	문항	출처
시민성 (시민으로서의 의무)	62. 사람들은 좋은 국민이 되는데 무엇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 각각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점을 주고 “매우 중요하다”에 7점을 준다면 귀하는 1점부터 7점 사이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해당 점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 때 항상 투표한다 (2) 결코 탈세하려고 하지 않는다 (3) 법과 규칙을 항상 잘 지킨다 (4)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본다 (5)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6)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조금 비싸더라도 정치, 윤리 또는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한다 (8) 나보다 못 사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9) 나보다 못 사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KGSS (2014)
	There are different opinion as to what it take to be a good citizen, As far as you are concerned personally on a scale of 1 to 7, where 1 is not at all important and 7 is very important, how important is it: Q1. Always to vote in elections Q2. Never to try to evade traces Q3. Always to obey laws and regulations Q4. To keep watch on the actions of government Q5. To be active in social or political associations Q6. To try active in social or political associations Q7. To choose products for political, ethical or environmental reasons, even if they cost a bit more	ISSP Citizenship Ⅱ (2014)

측정내용	문항	출처
정치 참여 (활동 정도)	20. 귀하는 정치・사회 현안에 관한 다음의 활동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2)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3)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4)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5)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하기 (6)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7)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8) 불매운동 참여하기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정치 참여 (민원 해결)	B1. 귀하는 지난 1년(2015년 8월・2016년 7월) 동안 개인 민원이나 집단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사람들을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의 접촉 대면, 전화, 편지, 인터넷 등을 통한 접촉 모두를 포함 합니다. (1) 고위 행정공무원들 (2) 하위 행정공무원들 (3) 단체장・지방의원・국회의원들 (4) 정당의 당원이나 대의원들 (5) 시민・사회단체(농민・노조・종교・인권・이익단체) 활동가들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2016)
정치 참여 (활동 정도)	B2. 다음의 사람들이 가끔 시민으로서의 취하는 행동입니다. 지난 1년(2015년 8월・2016년 7월)동안 다음 각각의 행동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1)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 거부 (2)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단 민원제기 (3) 진정서 서명 (4) 시위나 농성 참가 (5) 민원제기(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포함)	

측정내용	문항	출처
정치 참여 (활동 정도)	Here are some different forms of political and social action that people can take. Please indicate, for each one, whether you have done any of these things is the past year, whether you have done it in the more distant past, whether you have not done it but might do it or have not done it and would never, under any circumstances, do it 13. signed a petition 14. Boycotted, or deliberately bought, certain products for political, ethical or environmental reasons 15. Took part in a demonstration 16. Attended a political meeting or rally 17. Contacted, or attempted to contact, a politician or a civil servant to express your views 18. Donated money or raised funds for a social or political activity 19. Contacted or appeared in the media to express your views 20. Expressed political views on the internet	ISSP Citizenship Ⅱ (2014)
정치 참여 (관심 정도)	V84. How interested would you say you are in politics? Are you (read out and code one answer): v84-1. Very interested V84-2. Somewhat interested v84-3. Not very interested v84-4. Not at all interested	베르텔스만 재단 Social Cohesion Rader (2013) : WVS, EQLS 2011 (q23c), EQLS 2003 (q24_b), GWP(111)
정치 참여 (활동 정도)	Tell me for each of these activities how often you have done it the last year!(read out and code one answer for each action): V90. Signing a petition V91. Joining in boycotts V92. Attending peaceful demonstrations V93. Joining strikes V94. Any other act of protest?	
	Q. Over the last 12 months, have you signed a petition, including an e-mail or on-line petition?	

측정내용	문항	출처
정치 참여 (활동 정도)	Now I'd like you look at this card. I'm going to read out some forms of political action that people can take, and I'd like you to tell me, for each one, whether you have done any of these things, whether you might do it or would never under any circumstances do it(read out and code one answer for each action): V85. Signing a petition V86. Joining in boycotts V87. Attending peaceful demonstrations V88. Joining strikes V89. Any other act of protest?	WVS (Wave 6) (2012)
정치 참여 (정치적 토론)	Q39. How often do you discuss politics with your friends?	SSP Social network Ⅱ (2001)
	88.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의 이슈와 관련한 집단토론(3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식·비공식 토론)에 귀하는 지난 1년간 얼마나 자주 참여하셨습니까? (1) 환경 문제(대기, 수질, 소음공해, 쓰레기, 황사 등) (2) 교육 문제(촌지, 사교육, 청소년일탈 등) (3) 안전 문제(자연재해, 범죄예방 등) (4) 소비자 문제(식품안전, 상품의 질, 물가변동 등)	KGSS (2012)
정치 참여 (활동 정도)	11-3.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도(p.601)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행동을 합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지난 1년 동안 혹은 그 이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실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전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1) 진정서에 서명하기 (2) 정치적, 윤리적 또는 환경적 이유로 어떤 상품을 불매하거나 사주기 (3) 시위에 참여하기 (4) 정치 모임이나 집회에 참가하기 (5) 나의 의견을 아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기 (6)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위해 기부하거나 모금하기 (7) 나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기관에 접촉하거나 출연하기 (8) 인터넷의 정치공개토론이나 토론 모임에 참여하기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2 (영역체계 보고서) (2012)

측정내용	문항	출처
투표 참여	21. 귀하는 지난 2012년 12월에 있었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12. 귀하는 지난 2012년 12월 19일에 있었던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12-1 (투표했다면) 그 당시 어느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	KGSS (2013)
	11-1. 성, 연령 및 지역별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선거 투표율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2 (영역체계 보고서) (2012)
	22. 귀하는 지난 2014년 6월에 있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선출)에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12. 귀하는 올해 6월 4일(2014. 6. 4)에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12-1. (투표했다면) 올해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으로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	KGSS (2014)
투표 참여	23. 귀하는 지난 2016년 4월에 있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13. 귀하는 지난 2012년 4월 11일에 있었던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13-1. (투표했다면) 그 당시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	KGSS (2012)
	11-1. 성, 연령 및 지역별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선거 투표율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2 (2012)

측정내용	문항	출처
지지 정당	24. 귀하는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11-6.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지지정당 존재여부 귀하는 평소 지지하거나 가깝게 느끼시는 정당이 있습니까?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2 (2012)
이념 성향	25.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21.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복지 패널조사 부가조사 (유형5) (2016)
	In politics people sometimes talk of left and right. Where would you place yourself on a scale from 0 to 10 where means the left and 10 means the right? (Left: 0, Right: 10)	ISSP Citizenship Ⅱ(2014)
	14.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KGSS (2014)
	75.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좌파 혹은 우파가 되기도 합니다. 좌파에 0점을 주고 우파에 10점을 준다면 귀하 자신에게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V95. In political matters, people talk of "the left" and "the right" How would you place your views on this scale, generally speaking? (1: Left, 10: Right)	WVS (Wave 6) (2012)
자긍심 소속감	5.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5-2.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도)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1)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구)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2)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읍・면・동)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측정내용	문항	출처
소속감	Q1. How close do you feel to... 1-A. your town or city 1-B. your [country] 1-C. [COUNTRY]	ISSP National Identity Ⅲ (2013)
자긍심	34.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KGSS (2014)
	11-12.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귀하께서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2 (영역체계 보고서) (2012)
	13. 귀하께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십니까?	공정성에 관한 실태조사 (2012)
	12. 귀하께서는 스스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사회갈등·사회통합에 관한 실태조사 (2012)
자긍심	V211. How proud are you to be [French]	WVS (Wave 6) (2012)
소속감	V213. I see myself as part of my local community	

측정내용	문항	출처
청렴성	34.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앙정부 부처 (2) 국회 (3) 법원 (4) 검찰 (5) 경찰 (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7) 공기업 (8) 군대 (9) 노동조합단체 (10) 시민단체 (11) TV방송사 (12) 신문사 (13) 교육기관 (14) 의료기관 (15) 대기업 (16) 종교기관 (17) 금융기관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11-26. 공공기관 유형별 청렴도 인식 (p.623)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2 (영역체계 보고서) (2012)
정부 공정성	37. 귀하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관(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한다 (2) 법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 (3) 검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4) 경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11. 귀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성에 관한 실태조사 (2011)

측정내용	문항	출처
정부 공정성	C20. 귀하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1) 법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 (2)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공저하게 대변한다 (3) 일선행정기관은 행정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4) 중앙정부는 정부정책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5)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행정을 공정하게 관리한다 (6) 검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7) 경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 (2016)
사회 공정성	38. 귀하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육 기회 (2) 취업 기회 (3) 과세 및 납세 (4)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5) 지역균형발전 (6) 법 집행 (7) 정치 활동 (8) 성별에 따른 대우 (9) 언론 보도 (1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11)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12) 병역 의무 이행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2. 귀하는 우리사회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2) 취업할 수 있는 기회 (3) 소득수준에 따른 과세 및 납세 (4) 복지혜택으로 인한 공정성의 실현정도 (5) 지역개발 안배 (6) 법집행 (7) 정치인의 활동 (8) 성별에 따른 대우 (9) 언론 보도 (1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공정성에 관한 실태조사 (2012)

측정내용	문항	출처
공정성 (공정한 사회를 위한 대안)	39. 귀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음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공공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3)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4) 공직청렴도를 강화해야 한다 (5)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6)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7)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8)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 (9) 상류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10)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공정성 (공정성 확보 정책)	16. 다음은 우리 정부가 사회전반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다음 각 정책이 공정성 확보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발전 촉진 정책 (2)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 등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 (3) 장애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4) 미소금융, 햇살론 등 금융소외자 지원 정책 (5)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든든학자금 대출 정책 (6) 서민의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7)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 정책 (8)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핵심도시 추진 정책 (9) 부유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 (10) 신문사의 방송산업 진출을 통한 언론의 다양성 및 경쟁력 확보 정책 (11)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다양한 고용촉진 정책 (12)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 정책 (13) 여성채용 목표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기반 마련 (14)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정책	공정성에 관한 실태조사 (2011)

측정내용	문항	출처
형평성	96.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 교육 기회 (2) 취업 기회 (3) 승진·승급기회 (4) 법의 집행 (5) 여성의 대우 (6) 소득과 재산 (7) 지역 간	KGSS (2014)
제도 신뢰	33.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1) 중앙정부 부처 (2) 국회 (3) 법원 (4) 검찰 (5) 경찰 (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7) 공기업 (8) 군대 (9) 노동조합단체 (10) 시민단체 (11) TV방송사 (12) 신문사 (13) 교육기관 (14) 의료기관 (15) 대기업 (16) 종교기관 (17) 금융기관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

측정내용	문항	출처
	E9. 귀하는 다음의 각 기관 혹은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국회 (4) 법원 (5) 청와대 (6) 정당 (7) 언론기관 (8) 노동조합 (9) 학교 (10) 군대 (11) 경찰 (12) 대기업 (13) 종교단체 (14) 시민단체 (15) 병원 (16) 은행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 (2016)
제도 신뢰	3.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입니다. 귀하는 이 기관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 대기업 (2) 종교계 (3) 교육계 (4) 노동조합 (5) 신문사 (6) TV 방송국 (7) 의료계 (8) 중앙 정부 부처 (9) 지방 자치 정부 (10) 국회 (11) 대법원 (12) 학계 (13) 군대 (14) 금융기관 (15) 청와대 (16) 시민운동단체 (17) 여론조사기관	KGSS (2014)

측정내용	문항	출처
제도 신뢰	I am going to name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108. The churches 109. The armed forces 110. The press 111. Television 112. Labor unions 113. The police 114. The courts 115. The government (in your nation's capital) 116. Political parties 117. Parliament 118. The Civil service 119. Universities 120. Major Companies 121. Banks 122. Environmental organizations 123. Women's organizations 124. Charitable or humanitarian organization	WVS (Wave 6) (2012)
	11-24.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입니다. 이 기관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p.622). (1) 대기업 (2) 종교계 (3) 교육계 (4) 노동조합 (5) 신문사 (6) TV방송국 (7) 의료계 (8) 중앙 정부 부처 (9) 지방 자치 정부 (10) 국회 (11) 대법원 (12) 학계 (13) 군대 (14) 금융기관 (15) 청와대 (16) 시민운동단체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2 (영역체계 보고서) (2012)

2. 주요 사회통합관련 조사현황

가. 사회조사

사회조사는 사회 일반에 관한 조사로서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구성을 위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사회조사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등의 10개 부문을 5개 부문씩 격년별로 조사한다. 사회조사의 목적과 방법 등은 <표 Ⅲ-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Ⅲ-4〉 사회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및 연혁	- 1977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구성을 위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소득/소비, 교육, 보건, 주택, 환경, 사회 등에 관한 조사 최초 실시. 1979년부터 매년 조사 -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부문별 4년 주기,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3년 주기, 2008년부터 지금까지 2년 주기 조사
조사내용	2015년: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 2016년: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부문
조사대상	전국 만 13세 이상 가구원
표본설계	- 목표모집단: 조사시점 기준 전국 만 13세 이상 모든 가구원 - 층화: 27개 지역(7대 도시, 세종시와 9개 도지역은 동부/읍면부 구분) - 부차층화: 주택유형, 농가 비율, 응답성향 최고 영향 변수(아파트 비율, 자가비율, 유배우비율, 1인가구비율, 대졸비율 등) - 표본추출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의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 2014년 10월까지의 신축 아파트조사구, 세종시 특별센서스 조사구 - 표본추출방법: 층별 가구수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 통한 조사구 추출, 표본가구는 시작가구 단순임의 추출 후 연속된 16~17가구 선정

출처: 통계청(2015, 2016) 참조

사회조사의 각 부문별 세부 조사항목은 <표 Ⅲ-5>와 같다. 2015년과 2016년 조사를 종합하면 총 135개 지표에 달한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3세 이상 가구원이며, 표본추출은 27개 지역 층화에 확률비례계통추출 방법이 활용된다.

〈표 Ⅲ-5〉 사회조사 세부 조사항목

구분	내용
복지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사회의 장애인 차별 정도, 장애인에 대한 견해,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성, 우선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본인의 노후준비 방법,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생활비 마련방법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망, 단체참여, 기부 여부 및 기부하지 않은 이유, 기부 내용, 기부의 정기성, 기부 희망분야, 기부대상 인지 경로, 향후 기부 의사, 유산 기부 의사, 기부 문화 확산,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의 정기성, 자원봉사활동 인지 경로,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 계층의식, 본인세대의 계층이동, 다음세대의 계층이동
안전	다른 사람들의 준법 수준, 자신의 준법 수준, 공공질서 준수 수준

출처: 통계청(2015, 2016) 참조

통계청 사회조사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여러 설문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포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인식, 계층이동 가능성, 연대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계망, 단체참여 경험, 기부 의향 및 경험, 자원봉사활동 참여 현황, 시민성과 관련하여 공공질서 수준 등이 사회조사의 설문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표 Ⅲ-6〉 사회조사에서 사회통합 관련 구체적 설문문항

구분	설문문항
법규준수	- 귀하는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자신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질서 수준	우리 국민들의 공공질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사회경제적 지위와 계층이동 가능성	-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사회에서 본인 세대 보다 자신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설문문항
기부 의사 및 경험	- 귀하는 향후 1년 이내에 현금 또는 물품에 기부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 귀하는 향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유산의 일부라도 사회에 기부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2014. 5. 14 ~ 2015. 5. 13)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2014. 5. 14 ~ 2015. 5. 13) 기부하신 현금(후원금) 또는 물품(음식, 옷, 장난감, 책 등)을 보기의 후원 경로별로 '횟수'와 '금액'을 모두 써주십시오. -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2014. 5. 14 ~ 2015. 5. 13) 주기적으로 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되는 현금 기부 또는 물품 기부의 주기를 하나 선택하여 ○표를 하여 주십시오.
자원봉사 의사 및 경험	- 귀하는 향후 1년 이내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2014. 5. 14 ~ 2015. 5. 13)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참여 횟수 및 1회 평균 활동 시간을 모두 써주십시오. -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2014. 5. 14 ~ 2015. 5. 13) 본인의 직업, 자격증, 전공 또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야와 관련하여 봉사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된 봉사 활동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참여 경험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2014. 5. 14 ~ 2015. 5. 13)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단체에 참여 하셨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당 동료 등)이 몇 명 있습니까?
장애인 차별	- 우리 사회의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의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 시설(생활시설, 재활시설 등)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통계청(2015, 2016) 참조

통계청 사회조사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다양하고 보다 구체적인 문항들을 포함한다. 사회적 지위나 그러한 지위의 이동가능성, 사회단체 참여 경험과 같은 일부 항목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와 동일 혹은 유사하고, 기부나 봉사 활동, 장애인 차별과 같은 일부 항목은 보다

구체적이다. 동일 혹은 유사한 항목의 경우 조사 시점에 차이(사회조사는 상반기,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하반기)가 있으므로 일정한 반기별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항목들은 그 자체로 사회통합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제417001호)로서 한국행정연구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1년 최초 시행 이후 2013년 통계청 승인을 받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주관적 웰빙과 역능성,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 사회보장 등의 9개 부문에 대하여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표 Ⅲ-7〉 사회통합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연 혁	-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국제사회 가치관 조사와 비교하여 정책점 시사점 제공 - 2011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사회갈등 실태조사', '공정성 실태조사' 최초 실시 - 201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통계청 승인 및 총 7개 부문으로 조사내용 개편 - 이후 공정성 부문 추가, 주관적 안녕감 및 역능성(권리부여) 부문 보완, 거버넌스 추가 등으로 2016년 현재 총 9개 부문 매년 조사 실시
조사내용	-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 사회보장 등의 9개 부문과 기본사항으로 구성
조사대상	-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8,000명
표본설계	- 목표 모집단: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만 19~69세에 해당하는 전체 국민으로 정의함 -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2013년 세종시 특별센서스, 2015년 신축아파트 조사구 결과를 이용 - 모집단 층화는 1차적으로 시/도를 기준으로 층화 - 시/도 권역 내에서도 2, 3차 층화를 거쳐 총 52개 층으로 구분됨 - 확률비례계통추출을 통한 조사구 추출, 계통추출을 통한 가구 추출, 적격가구원 전수조사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6) 참조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세부 조사내용과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Ⅲ-8>, <표 Ⅲ-9>와 같다.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부문은 행복감, 걱정, 우울, 삶의 만족도, 일의 가치성과 같은 주관적 웰빙 관련 문항들과 자긍심, 사회적 이동성, 계층의식, 정치·경제상황만족도와 같은 사회적 역능성 관련 문항들, 사회참여 부문은 이타성, 단체 활동 정도 관련 문항들, 정치참여 부문은 정치활동 정도를 중심으로 효능감, 지지 정당 존재, 정치적 이념과 같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문항들, 사회적 소통 부문은 집단간 상호 소통 정도, 정부의 대국민 소통 정도 등의 문항들, 신뢰 부문은 일반신뢰, 대인신뢰, 제도신뢰, 청렴성 등의 문항들, 거버넌스 부분은 정부의 협력성과 대응성 관련 문항들, 공정성은 제도의 공정성과 공정 사회 방안 관련 문항들, 관용성 부문은 소수자 포용성, 사회갈등,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 주체 관련 문항들, 사회보장 부문은 연금이나 보험 가입 여부, 경제적 안정성 관련 문항들로 구성된다.

〈표 Ⅲ-8〉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행복감, 걱정, 우울, 삶에 대한 만족도, 일의 가치성, 사회의 안전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본인 및 자녀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 정치상황 만족 및 기대, 경제상황 만족 및 기대, 북한과의 관계, 성장과 분배 상대적 중요성, 공동체 이익과 개인 이익 상대적 중요성,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국가목표
사회참여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한 생각, 사회단체 활동 정도
정치참여	시민성 요소 중요도, 정치 현안에 대한 활동 경험 여부, 투표 참여(3), 지지정당, 이념적 성향
사회적 소통	집단 간 소통 수준,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 수, 위기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 고립감
신뢰	일반 신뢰, 집단 신뢰, 기관 신뢰, 기관 청렴도
거버넌스	집단 간 협력 정도, 행정서비스 경험 및 만족도
공정성	기관 공정성,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 공정 사회를 위한 방안
관용성 부문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정도,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사회갈등의 원인, 우리 사회 갈등 정도(빈곤층과 중·상층, 보수와 진보,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개발과 환경보존, 노인층과 젊은 층,

구 분	내 용
	남자와 여자, 종교 간),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별 노력 정도에 대한 인식(교육계, 국회, 기업, 노동조합단체,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 정부, 종교단체),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
사회보장 부문	연금 및 보험 가입 여부(연금, 개인연금, 국민건강보험, 개인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후에 대한 준비정도, 중병 발생 시 대처 가능 경제력 정도, 본인의 현재 경제 상황 안정 정도,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6) 참조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연도별 조사항목의 변화를 보면 2014년에는 갈등관리 주체 관련 문항들이 추가되었고, 2015년에는 안전성, 정부의 협력성 관련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2016년에는 정부의 대응성 관련 문항들이 추가되었고, 2017년에는 정부의 협력성과 대응성의 일부 항목을 추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존 조사항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회통합에서의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일부 항목들의 추가가 이루어졌다.

〈표 Ⅲ-9〉 사회통합실태조사 연도별 조사항목 변경사항

부문	조사항목	2017	2016	2015	2014	2013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행복감	○	○	○	○	○
	걱정	○	○	○	○	○
	우울감	○	○	○	○	○
	삶에 대한 만족도	○	○	○	○	○
	하는 일의 가치성 정도	○	○	○	○	○
	살고 있는 동네의 안정성 정도	○	○	X	X	X
	살고 있는 지역(시・군・구)의 안전성 정도	○	○	X	X	X
	우리 사회의 안전성 정도	○	○	○	X	X
	삶을 결정함에 있어 자유로운 정도	○	○	○	X	X
	현재 사회적 지위 인식	○	○	○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	○	○	○	○
	살고 있는 지역(시/도) 소속감	○	○	○	○	○
	살고 있는 지역(시/군/구) 소속감	○	○	○	X	X
	살고 있는 지역(읍/면/동) 소속감	○	○	○	X	X

부문	조사항목		2017	2016	2015	2014	2013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		○	○	○	○	○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		○	○	○	○	○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 만족도		○	○	○	○	○
	5년 후 우리나라 정치 상황 변화 정도		○	○	○	○	○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 만족도		○	○	○	○	○
	5년 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 변화 정도		○	○	○	○	○
	북한과의 관계		○	○	○	○	○
	성장-분배 중요도		○	○	○	○	○
	공동체 이익-개인 이익 중요도		○	○	○	○	○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국가목표		○	○	○	○	○
사회참여	이타성	(1) 힘든 처지 사람 도움 필요	○	○	○	○	○
		(2) 어려운 처지 사람 도움 중요성	○	○	○	○	○
		(3)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 중요성	○	○	○	○	○
	사회단체 활동 정도	(1) 정당	○	○	○	○	○
		(2) 노동조합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	○	○	○	○
		(3) 종교단체	○	○	○	○	○
		(4) 동호회(스포츠, 여가, 문화 포함)	○	○	○	○	○
		(5) 시민운동단체	○	○	○	○	○
		(6)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상회, 주민조직)	○	○	○	○	○
		(7) 동창회, 향우회	○	○	○	○	○
		(8)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	○	○	X	X
		(9)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	○	X	X
정치참여	각 항목의 중요성	(1) 선거시 투표참여	○	○	○	○	○
		(2) 정직한 세금 납부	○	○	○	○	○
		(3) 법규칙 준수	○	○	○	○	○
		(4) 정부에 대한 관심	○	○	○	○	○
		(5) 사회 혹은 정치 단체 활동	○	○	○	○	○
		(6) 타인 의견 존중	○	○	○	○	○
		(7) 윤리적 상품 구매	○	○	○	○	○
		(8) 국가 위기시 군복무	○	○	○	○	○
	정치 효능감	(1) 한 개인의 정부 영향력	○	○	○	○	○
		(2) 국민 인식에 대한 정부의 관심	○	○	○	○	○
		(3) 정치현안 인지도	○	○	○	○	○
		(4) 정부에 대한 관심	○	○	○	○	○

부문	조사항목		2017	2016	2015	2014	2013
	각 항목의 중요성	(1)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 없음	○	○	○	○	○
		(2)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	○	○	○	○
		(3)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	○	○	○	○	○
		(4) 서명운동 참여	○	○	○	○	○
		(5) 탄원서 등 제출	○	○	○	○	○
		(6) 시위 및 집회 참여	○	○	○	○	○
		(7) 공무원 혹은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 전달	○	○	○	○	○
		(8) 불매운동 참여	○	○	○	○	○
	대선, 총선, 지방 선거 투표 참여		○	○	○	○	○
	지지정당 여부		○	○	○	○	○
	이념 성향		○	○	○	○	○
사회적 소통	집단 간 소통	(1) 가족 간 소통	○	○	○	○	○
		(2) 직장 구성원 간 소통	○	○	○	○	○
		(3) 이웃 간 소통	○	○	○	○	○
		(4) 세대 간 소통	○	○	○	○	○
	집단 간 소통	(1) 중앙정부-국민 간 소통	○	○	○	○	○
		(2) 국회-국민 간 소통	○	○	○	○	○
		(3) 지방정부와 국민 간 소통	○	○	○	○	○
		(4) 지방의회와 국민 간 소통	○	○	○	○	○
	평일 하루 접촉 하는 사람 수	(1) 가족 또는 친척	○	○	○	○	○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	○	○	○	○	○
	위기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1) 목돈이 필요한 경우	○	○	○	○	○
		(2) 몸이 아픈 경우	○	○	○	○	○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경우	○	○	○	○	○
	개인적 소통 인식	(1) 외로움	○	○	○	○	○
		(2) 자살충동	○	○	○	○	○
		(3) 고립감	○	○	○	○	○
신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정도		○	○	○	○	○
	집단 신뢰	(1) 가족	○	○	○	○	○
		(2) 이웃	○	○	○	○	○
		(3)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	○	○	○	○	○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	○	○	○	○
		(5) 국내 거주 외국인	○	○	○	○	○
	기관별	(1) 중앙정부 부처	○	○	○	○	○

부문	조사항목		2017	2016	2015	2014	2013
	신뢰도 . 기관별 청렴도	(2) 국회	○	○	○	○	○
		(3) 법원	○	○	○	○	○
		(4) 검찰	○	○	○	○	○
		(5) 경찰	○	○	○	○	○
		(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	○	○	○	○
		(7) 공기업	○	○	X	X	X
		(8) 군대	○	○	○	○	○
		(9) 노동조합단체	○	○	○	○	○
		(10) 시민단체	○	○	○	○	○
		(11) TV방송사	○	○	○	○	○
		(12) 신문사	○	○	○	○	○
		(13) 교육기관	○	○	○	○	○
		(14) 의료기관	○	○	○	○	○
		(15) 대기업	○	○	○	○	○
		(16) 종교기관	○	○	○	○	○
		(17) 금융기관	○	○	○	○	○
거버넌스	집단 간 협력 정도	(1) 중앙정부 부처 상호 간	○	○	○	X	X
		(2) 중앙정부와 국회	○	○	○	X	X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 자체단체)	○	○	○	X	X
		(4)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	○	○	X	X
		(5) 지방정부 상호 간	○	○	X	X	X
		(6) 여당과 야당	○	○	○	X	X
		(7) 정부와 시민단체	○	○	○	X	X
		(8) 정부와 전문가집단	○	○	X	X	X
		(9) 정부와 기업	○	○	X	X	X
	지난 1년간 공공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및 이용 만족도	(1) 공청회/청문회 참여 활동	○	○	X	X	X
		(2) 주민참여예산 활동	○	○	X	X	X
		(3)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서비스	○	○	X	X	X
		(4) 인허가 서비스	○	○	X	X	X
		(5)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	○	X	X	X
		(6) 세무 서비스	○	○	X	X	X
		(7) 경찰 서비스	○	○	X	X	X
		(8) 소방 서비스	○	X	X	X	X
공정성	공적 기관 공정성	(1) 행정기관	○	○	○	○	○
		(2) 국회	○	○	○	○	○

부문	조사항목		2017	2016	2015	2014	2013
		(3) 법원	○	○	○	○	○
		(4) 검찰	○	○	○	○	○
		(5) 경찰	○	○	○	○	○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1) 교육 기회	○	○	○	○	○
		(2) 취업 기회	○	○	○	○	○
		(3) 과세 및 납세	○	○	○	○	○
		(4)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	○	○	○	○
		(5) 지역균형발전	○	○	○	○	○
		(6) 법 집행	○	○	○	○	○
		(7) 정치 활동	○	○	○	○	○
		(8) 성별에 따른 대우	○	○	○	○	○
		(9) 언론 보도	○	○	○	○	○
		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	○	○	○	○
		⑾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	○	○	○	X
		⑿ 병역 의무 이행	○	○	○	X	X
	공정한 사회 방안	(1) 공공정보 공개	○	○	○	○	○
		(2) 국민참여 확대	○	○	○	○	○
		(3) 행정절차 투명성 강화	○	○	○	○	○
		(4) 공직청렴도 강화	○	○	○	○	○
		(5) 고등교육 기회 확대	○	○	○	○	○
		(6) 취업기회 보장	○	○	○	○	○
		(7)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	○	○	○	○
		(8) 기득권 양보	○	○	○	○	○
		(9) 상류층의 솔선수범	○	○	○	○	○
		⑽ 중산층 확대	○	○	○	○	○
관용성	세금이 가난한 사람의 복지에 쓰이는 경우 더 낼 의향		○	○	○	○	○
	포용성	(1) 장애인	○	○	○	○	○
		(2) 결손가정 자녀	○	○	○	○	○
		(3)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	○	○	○	○
		(4) 전과자	○	○	○	○	○
		(5) 동성애자	○	○	○	○	○
		(6) 북한이탈주민(탈북자/새터민)	○	○	○	○	○
	갈등의 원인		○	○	○	○	○
	갈등의 정도	(1)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	○	○	○	○	○
		(2)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간 갈등	○	○	○	○	○

부문	조사항목		2017	2016	2015	2014	2013
		(3)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	○	○	○	○	○
		(4)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	○	○	○	○	○
		(5) 개발과 환경보존 간 갈등	○	○	○	○	○
		(6) 고령층과 젊은층 간 갈등	○	○	○	○	○
		(7) 남자와 여자 간 갈등	○	○	○	X	X
		(8) 서로 다른 종교 간 갈등	○	○	○	○	○
	갈등해소를 위한 집단별 노력	(1) 교육계	○	○	○	○	X
		(2) 국회	○	○	○	○	X
		(3) 기업	○	○	○	○	X
		(4) 노동조합단체	○	○	○	○	X
		(5) 법조계	○	○	○	○	X
		(6) 시민단체	○	○	○	○	X
		(7) 언론(신문, 방송)	○	○	○	○	X
		(8) 정부	○	○	○	○	X
		(9) 종교단체(교회, 성당, 사찰 등)	○	○	○	○	X
	사회통합을 위한 중심적 역할 집단		○	○	○	○	○
사회보장	가입되어 있는 사회보험	(1) 공적연금	○	○	○	○	○
		(2) 개인연금	○	○	○	○	○
		(3) 국민건강보험	○	○	○	○	○
		(4) 개인의료보험	○	○	○	○	○
		(5) 고용보험	○	○	○	○	X
		(6)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X
	공적연금의 종류		○	○	○	○	X
	노후 준비 정도		○	○	○	○	○
	중병 발생 대처 가능한 경제력 정도		○	○	○	○	○
	현재 경제 상황 안정성		○	○	○	○	○
	지난 1년 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1) 식비	○	○	○	○	X
		(2) 병원비	○	○	○	○	X
		(3) 학비	○	○	○	○	X
		(4) 실업	○	○	○	○	○
		(5) 공과금	○	○	○	○	○
		(6) 집세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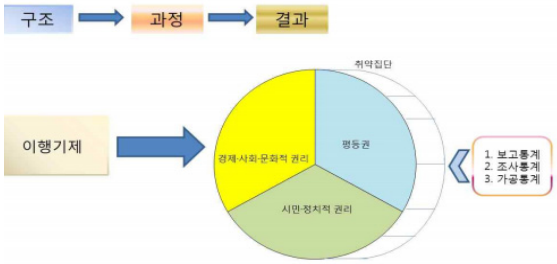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사회통합 부문의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청의 관리 하에 2013년 이후 일부 추가 문항을 제외하고는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오고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 사회통합실태조

사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계열 자료 축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검토를 통해 지표의 건강성을 확보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연성 자료가 많아 경성 자료에 의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 비교 문항을 지속적으로 검토 발굴하고 부문별 구체화를 위해 격년 주기의 모듈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인권위원회 통계 및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형 인권통계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2015년에 연구를 수행하여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인권통계는 인권현상을 계량화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인권현상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및 정책의 도입과 운영, 그리고 인권실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인권통계에는 보편적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의 작동, 권리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이 취하는 정책적 개입, 인권개선을 위해 인권의 담지자 개인 및 집단이 취하는 개선 노력, 인권보장 현황에 대한 각종 보고행위, 개인 혹은 집단의 보편적 권리가 존중되거나 제약되는 정도 등이 포함된다.

〈그림 Ⅲ-1〉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구조



위의 그림은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도식화하고 있다. 이행기제, 평등권,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네 가지 대분류를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축에서는 구조-과정-결과의 논리적 흐름이 제시되어 있다. 평등권,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 인권의 주요 영역에는 소수자의 권리 내용이 포괄되어 있다. 프레임워크 구축 이후 이루어질 인권지표풀 구축 과정에는 보고, 조사, 가공통계와 같은 통계자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표 Ⅲ-10〉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이행기제	1.1. 국제규범	1.1.1. 국제인권법 준수
		1.1.2. 국제인권기구 참여
	1.2. 국내법	1.2.1.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
		1.2.2.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3. 인권교육	1.3.1. 공공기관 인권교육 활동
		1.3.2. 기업·시민사회 인권교육 활동
	1.4. 시민사회	1.4.1. 인권 NGO 활동
		1.4.2. 인권 NGO거버넌스 구축
2. 평등권	2.1. 차별 현황	2.1.1. 인권상황 평가
		2.1.2. 침해 및 차별발생 원인
		2.1.3. 차별의 심각성 평가
		2.1.4. 차별경험 유무
	2.2. 차별 요인	2.2.1. 인종·피부색·출신국가
		2.2.2. 성별
		2.2.3. 경제적 지위
		2.2.4. 나이
		2.2.5. 용모
		2.2.6. 종교
		2.2.7. 학력·학벌
		2.2.8. 성적 지향성
		2.2.9. 상애
		2.2.10. 병력
3. 시민·정치적 권리	3.1. 신체권	3.1.1. 생명권
		3.1.2. 사형의 제한
		3.1.3.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3.1.4. 구금 환경
		3.1.5. 인신매매 금지
		3.1.6. 안전할 권리
		3.1.7. 실종
		3.1.8. 자의적 체포 및 구금
	3.2. 기본적 자유	3.2.1. 이동의 자유
		3.2.2.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3.2.3. 의견과 표현의 자유
		3.2.4. 집회의 자유
		3.2.5. 결사의 자유
		3.2.6. 사생활 보호권
	3.3. 행정·사법적 정의	3.3.1.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3.3.2. 사법적 구제
		3.3.3. 피해배상 청구권
	3.4. 참정권	3.4.1. 투표할 권리
		3.4.2. 선출될 권리
		3.4.3.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3.5. 정보인권	3.5.1. 정보접근권
		3.5.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4.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4.1.1. 식량권
		4.1.2. 주거권
		4.1.3.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4.2. 사회보장권	4.2.1. 소득보장(공공부조)
		4.2.2. 빈곤양극화
		4.2.3. 사회복지
		4.2.4. 사회보험
	4.3. 노동권	4.3.1. 일할 권리
		4.3.2.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4.3.3. 노동조합권
	4.4. 건강권	4.4.1. 건강 서비스 접근
		4.4.2. 아동 및 모성 건강
		4.4.3. 육체적 건강
		4.4.4. 정신적 건강
		4.4.5.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
	4.5. 교육권	4.5.1.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4.5.2. 교육선택권
		4.5.3. 교육의 질
		4.5.4. 교육 차별 및 불평등
	4.6. 문화적 권리	4.6.1.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4.6.2.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4.6.3. 창작물에 대한 보호
		4.6.4.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4.7. 기업과 인권	4.7.1. 국가의 보호
		4.7.2. 기업의 존중
		4.7.3. 구제
		4.7.4. 환경보존 책임
	4.8. 환경권	4.8.1.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4.8.2. 자연환경을 보호할 권리
		4.8.3. 환경사고 및 재해에 대응할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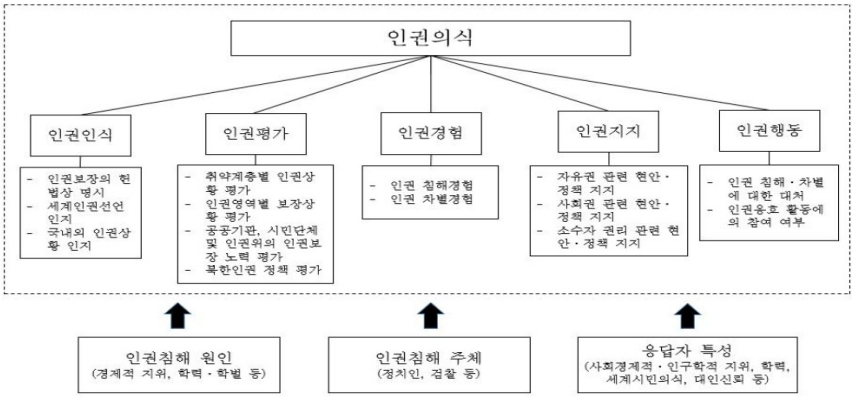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되며, 대분류에는 이행기제, 평등권,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이 포함된다. 각 대분류 내에는 중분류가 존재하는데 이행기제에는 국제규범, 국내법, 인권교육, 시민사회가, 평등권에는 차별현황과 차별요인이, 시민・정치적 권리에는 신체권, 기본적 자유, 행정・사법적 정의, 참정권, 정보인권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는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기업과 인권, 환경권 등이 포함된다.

인권통계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실태조사를 5~6년 주기로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2005년, 2011년, 2016년). 조사목적은 인권통계에서 필요한 주관적 지표를 제공하고 과거(2011년)연구와 시계열적 비교 및 국가 간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것이다. 국민인권의식조사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포괄

적 수준에서 인권의식 전반을 측정하는 것이다. 둘째, 인권의식을 형성하는 데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요인들을 측정하는 것이다. 양방향적 접근을 통해 인권의식 관련 실태 파악과 더불어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은 일반국민, 전문가집단, 초중학교학생이며, 인권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병행한다.

〈그림 Ⅲ-2〉 국민인권의식조사의 이론적 프레임워크



〈표 Ⅲ-11〉 국민인권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연혁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후, 2005년도 최초의 국민인권의식 조사 실시 - 201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두번째 국민인권의식 조사 실시 - 2016년도 국민인권의식조사는 2011년 조사의 주요 원칙과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지난 5년 간 변화된 국내외 인권상황과 환경, 그리고 새로운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새롭게 구성되었음
조사구성	국민 인권의식조사, 전문가 인권의식조사, 학생 인권의식조사, 인권 전문가델파이조사

구분	내용
표본설계	[국민인권조사] - 모집단 및 표본 추출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다단계 지역표본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함 - 국민들의 전체적인 인권에 대한 의식을 확인하고, 부가적으로는 시도별로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지역으로 층화하였고, 각 층별로는 시군구, 읍면동 등의 행정구역들을 이용하여 표본지역을 추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가구들을 추출하였음 -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 만15세 이상(만15~만87세)의 총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음 [전문가인권의식조사] - '교수, 법조인, 언론인, NGO 활동가, 교사, 사회복지사, 의료인, 공무원, 종교인, 기업경영인'의 총 10개 직업군을 선정 - 전체 목표 표본수는 500명이며, 전문가 직군별 목표 표본수는 50명임 [학생인권의식조사] - 조사모집단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중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이며,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별 가구 수를 기준으로 비복원확률비례추출법을 사용하여 확률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최종적으로 542명의 학생들이 응답하였음 [인권 전문가 델파이조사] - 인권전문가는 인권전문 대학교수 3명, 인권 변호사 2명, 인권단체 활동가 3명, 인권 관계부처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었음

조사내용으로는 2011년의 경우, 인권의식/평가, 인권침해와 차별, 현안과 정책, 인권증진 방안, 인권교육, 청소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배경질문의 총 8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6년 조사에서는 2015년 인권통계프레임워크에 맞춰 문항을 재구성(설문 문항 및 응답지 재구성)하거나 일부 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응답지에서 인권차별유형, 인권침해주체 등을 더 상세하게 확대하기도 하였다. 구체적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Ⅲ-12〉 국민인권실태조사 조사대상별 조사주제

조사대상	조사주제
대국민 인권의식조사	인권의식과 평가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현안과 정책 평가(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소수자 권리, 북한 인권 관련정책)
	인권증진 방안
	인권교육 경험 및 필요성
	국가인권위원회 평가
전문가 인권의식조사	전문가의 일반적인 인권 감수성 및 한국의 인권상황 인지도
	인권 침해 및 차별받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식 및 평가
	현재 당면한 인권 현안과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소수자 권리 그리고 점차 주목해야 할 북한 인권에 대한 의견
	인권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노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효과적인 인권 증진 방안 및 인권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참여의 현황
	인권교육 및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
초중생 인권의식조사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 확인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실태
	가정에서의 인권 침해 실태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및 인권교육을 받은 정도 확인
	최근 인권관련 주제에 관한 의견
	사회인구학적 정보
델파이조사	최근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의견
	인권상황을 개선시켜 나가는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
	인권 개선 및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최근 우리나라의 인권이슈인 가습기 살균제와 북한인권법에 대한 평가
	전문가조사 결과 인권침해 집단으로 지목된 상하위 5개 집단에 대한 평가와 검증
	전문가조사 결과 인권침해 집단으로 지목된 상·하위 5개 영역에 대한 평가와 검증
	향후 바람직한 인권교육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언

국민인권의식조사는 조사의 골격이 '의식조사(2011년)'에서 '의식조사 및 실태조사(2016년)'로 변경되면서 설문지 내용이 수정, 변경되었다. 따라서 아직 설문내용이 안정화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델파이조사에서 활용된 '가습기 살균제 이슈 관련 의견'과 같이 시의성이 강한 문항은 시계열적인 비교가 부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조사 주기도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인 탓에 사회통합 프레임워크에서 활용되기 어렵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선거가 치러지는 시기마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 의뢰하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본 조사는 선거 관심 및 투표참여 행태, 선거 분위기 평가, 선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위상, 선거 관련 정보획득 수준 등에 대한 유권자 의식과 태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이 조사의 목적은 선거투표행태 및 유권자 의식수준을 평가하여, 향후 공명선거 실현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있다. 조사는 선거기간 전, 선거기간 중, 선거기간 후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본 조사의 개요 및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Ⅲ-13〉 중앙선거권리위원회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연 혁	- 제 17대 대통령선거(2007.12.19.)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이후, 각 선거별로 조사
조사내용	- 선거의 관심 및 투표참여 행태, 선거 분위기 등에 대한 유권자 의식과 태도를 조사
조사대상	-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표본설계	- 성・연령・지역 인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Quota Sampling) - 유효표본 총 1,500명 - 통계 보정: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조사시기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구 분	내 용
조사주기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선거 중, 선거 후 3차례에 걸쳐 조사

〈표 Ⅲ-14〉 중앙선거권리위원회조사 조사분야별 조사항목

조사분야		조사항목
대통령 선거	대통령선거 관심 및 투표참여 행태	대선 관심도
		대선 투표 참여의햐
		투표할 생각이 없는 이유
		대선 후보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
	선거의 공명성, 정책선거 등 분위기 평가	대선의 공명성 평가
		공명하게 치러지지 않는 이유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도
		투표시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반영 여부
		정책선거에 대한 이해
		정책선거가 되귀 위한 필요 요인
	선거 관련 제도 인지도 및 견해	선거법 위반 관련 포상금/과태료 제도 인지 여부
		포상금/과태료 제도가 돈 안쓰는 선거 정착에 도움 정도
		금품기부 상시제한 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정치후원금 기부 의향
	선거 관련 정보채널	대선 후보자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보도의 공정성 평가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홍보	선관위의 선거활동 단속에 대한 신뢰도
		선관위의 선거활동 단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선관위의 공명성거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중점과제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관심 및 투표참여 행태	총선 관심도
		총선 투표 참여의향
		투표할 생각이 없는 이유
		총선 후보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
	선거의 공명성 등 분위기 평가	총선의 공명성 평가
		공명하게 치러지지 않는 이유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도
		투표시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반영 여부

조사분야		조사항목
		금품향응 제공 경험 여부
		선거법 위반행위 인지시 신고 여부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
		선관위의 선거활동 단속에 대한 신뢰도
	선거 관련 제도 인지도 및 견해	1인 2표제 인지 여부
		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대한 견해
		금품기부 상시제한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정치후원금 기부 의향
		정치후원금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위상	선관위의 역할 및 활동 평가
		선관위의 공명선거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중점과제
	선거 관련 정보획득 채널	총선 후보자 관련 정보 획득 경로
지방선거	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 행태	동시지방선거 관심도
		사전투표제 인지도
		투표참여 의향
		사전투표제가 없을 경우 투표 가능여부
		투표 참여시기
		사전투표 참여 일자
		사전투표 참여 시간
		사전투표 참여 장소
		지지후보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
		비례대표의원선거 정당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
		투표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
	지방선거 분위기 평가	동시시지방선거의 공명성 평가
		공명하게 치러지지 않는 이유
		예비후보자의 선거법 준수도
	선거제도 인지도	1인 7표제 인지 여부
		교육감선거의 정당 무관성 인지 여부
		정치후원금 기부 의향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과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평가
		지방선거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역점 과제

사회통합 지표체계에 유권자의식 조사자료를 직접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먼저, 유권자의식조사는 매 선거마다 세 번씩 조사가 실시되는데 각 시점마다 응답수치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 19대 대통령선거(2017.5.9.)에 관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투표참여 의사' 문항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반드시 투표할 것(투표했다)의 응답이 82.8%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78.3%로 감소하였으며, 비투표 항목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4.2%에 불과했으나 3차 조사에서는 21.7%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조사 시점 별로 존재하는 응답수치 차이로 인해 사회통합 지표체계에 어느 시점의 자료를 써야 할 것인지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 효능감' 문항에서도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선거 효능감은 단시일 내에 변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 1, 2, 3차 조사 간 응답자 비율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유권자 의식 조사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표 Ⅲ-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

구분	선거가 국가 미래를 결정			선거가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		
	비동의	보통	동의	비동의	보통	동의	비동의	보통	동의
1차 조사 (4/10~11)	11.8	23.3	64.9	23.3	32.2	44.6	7.5	16.7	75.8
2차 조사 (4/28~29)	14.5	25.0	60.5	27.6	30.5	41.9	10.1	15.0	74.9
3차 조사 (5/15~6/2)	7.4	19.4	73.2	16.9	36.2	46.8	7.8	21.2	71.0

마. 지역사회조사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조사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지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역 수준에서의 사회지표 작성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지표가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지표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지표와 지역사회조사의 시작 시점이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난다. 지역사회조사는 대부분 매년 이루어지며, 사회

조사와 유사하게 영역별 2년 주기 조사가 일반적이다.

〈표 Ⅲ-16〉 지역사회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연 혁	-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조사는 지역사회지표 작성을 위해 실시됨 - 1992년 경상남도가 가장 먼저 시작, 이후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경북은 90년대 말에, 서울은 2003년, 나머지 지역은 2010년 이후에 작성
조사내용	-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경제),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 등으로 구성됨 - 지역에 따라 2년 주기로 공통항목과 특수항목을 조사하기도 함
조사대상	- 약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중심으로 연구
표본설계	- 표본추출, 조사인원 등과 관련한 사항 역시 지역별 편차가 있음
조사주기	- 모든 광역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함 - 경기도와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영역별로 2년 주기로 조사 중(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서는 영역을 나누어 2~3년 주기로 조사, 충북・전북・전남・경남에서는 모든 영역을 한 번에 조사하지만, 조사 항목을 나누어 2~3년 주기로 조사)

출처: 통계청(2013) 참조

조사 항목은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만 사회조사의 큰 틀이 유지된다. 안전과 사회참여 영역의 지역 간 차이가 특히 많이 나타난다. 시도별로 비교하여 7개 이상 시도에서 동일하게 조사하는 공통항목과 7개 미만의 특성항목을 제시하면 <표 Ⅲ-17>과 같다.

〈표 Ⅲ-17〉 지역사회조사 사회통합 관련 항목 및 질문

부문	항목	질문
안전	다른 사람들의 준법수준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준법수준	귀하는 자기 자신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평소에 법을 지키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문	항목	질문
	공공질서수준	우리 국민들의 공공질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가족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에 있어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다문화가구원을 위한 지원 사항	다문화 가구원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	본인의 노후 준비방법	만 18세 이상인 분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귀하는 노후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 중 가장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귀하가 매월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가 있습니까? 있다면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 기입하여 주십시오.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향후 필요하거나 늘여햐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장애인 차별 정도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은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에 대한 견해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시각이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관련 시설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 시설(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을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이 현재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	현재 귀하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부문	항목	질문
	생활비 마련방법	본인의 생활비는 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망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몇 명 있습니까?
	단체참여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단체에 참여하셨습니까?
	기부여부	귀하는 지난 1년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금기부	귀하는 지난 1년동안 후원금(돈)을 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후원경로별로 '횟수'와 '금액'을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품기부	귀하는 지난 1년동안 음식, 옷, 장난감 등의 물품을 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보기의 후원경로별로 횟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귀하는 지난 1년동안 주기적으로 물품을 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부이유	귀하가 기부를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부희망분야	귀하가 기부하신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쓰이기를 희망하십니까?
	기부대상인지경로	귀하가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셨던 단체나 개인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
	향후기부의사	귀하는 향후 1년 이내에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유산기부의사	귀하는 향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유산의 일부라도 사회에 기부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기부문화 확산	귀하는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활동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참여회수 및 1회 평균 활동 시간을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문	항목	질문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	귀하가 자원봉사활동을 하셨던 단체 등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귀하는 지난 1년동안 본인의 직업, 자격증, 전공 또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야와 관련하여 봉사활동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된 봉사활동 내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	귀하는 향후 2년 이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사회의 공정에 대한 인식도	귀하는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곳에 O표하여 주십시오
	공정사회를 위한 개선분야	귀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느 분야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층의식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층이동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조사는 통계청 사회조사의 형식과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와 같이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사회통합 프레임워크에의 활용성이 높다. 특히 지역 수준에서의 사회통합 수준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할 때 지역사회조사의 활용 가능성은 높다. 사회통합 부문의 문항을 개발하고 보완하여 적용한다면 지역 수준의 사회통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역사회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어 가능한 수준에서 표준화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조사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국내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 수집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조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이에 의거해 2013년, 2014년에는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변경된 유엔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폭력 및 학대 영역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표 Ⅲ-18〉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연혁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된 제1기(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추진된 제2기(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로 구성 - 2009년: 통계청 승인통계 지정(제402001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2009년~2012년 : 제주도 제외 전국조사, 고등학교 분석 구분(일반계, 전문계), 인권영역을 크게 4개로 구분하여 2개 영역씩 격년조사 - 2013년~2016년 : 제주도 포함 전국조사, 고등학교 분석 구분(일반고, 자율고, 외고 등 특목고 일부를 포함하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열 일부 특목고를 포함하는 '특성화계고'로 구분), 매년 인권 전체 영역을 종합 조사
조사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개발된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개 인권영역별 실태 조사
조사대상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9,000명
표본설계	- 표본추출틀: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표본추출방식: 층화다단계집락표집(지역구분과 학교구분 층화변수로 고려) - 표본배분방식: 변형비례배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데이터아카이브 홈페이지 소개자료 (2017) 참조

전체 인권지표체계 중 설문조사로 결과를 생산하는 지표는 <표 Ⅲ-19>와 같다. 이 조사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인권실태 파악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체계적인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사회통합 지표체계에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표 Ⅲ-19〉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세부 조사항목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인권지표체계 중분류	조사내용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인권 협약 및 관련기관 인지도, 인권의 존중정도(가정, 학교, 지역, 사이버공간), 인권의식 및 태도,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 받은 기관,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일반원칙	차별 피해 경험, 차별 가해 경험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견 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학급회의 운영 여부,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참여권 보장 수준, 참여 장애 이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보장정도,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집회 경험률,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사생활의 보호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정보 접근권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인권지표체계 중분류	조사내용
폭력 및 확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폭력피해 경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체벌 경험률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방임유형 및 정도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가출 경험 여부, 가출 이유,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및 이용 만족도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생존 및 발달	사고 및 급식 안전 등에 대한 인식률(교통사고, 범죄, 먹거리, 학교급식)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운동 실천율, 아침식사 결식률, 아침식사 결식이유, 수면시간, 수면부족 여부, 수면부족 이유,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생각 이유, 우울감,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인지율, 행복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삶의 만족도, 고민거리 대화상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학업포기 생각여부, 학업포기 생각 이유,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교육의 목표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동아리활동 참가율,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하루 평균 학습시간, 여가활동 및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 정도
특별보호조치	경제적 착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성적 착취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성적 피해시 도움제공자

제2절 사회통합 프레임워크와 작성통계의 비교분석

1. 포용

가. 사회적 이동 가능성

사회적 이동 가능성은 포용에서 특히 사회경제적 기회의 개방 정도를 측정한다. 이때 사회적 이동 가능성의 측정은 노력 여하에 의해 본인이나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현재보다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이루어진다.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3-4년마다 사용되는 다음 문항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세대내 이동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비교적 높다 ③ 비교적 낮다 ④ 매우 낮다 ⑤ 모르겠다

세대간 이동
우리 사회에서 현재 본인 세대보다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비교적 높다 ③ 비교적 낮다 ④ 매우 낮다 ⑤ 모르겠다

현재 사회통합 영역의 통계조사에서 주로 조사되는 것은 이동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전부이지만 인식과 현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포용성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동의 현실은 사회학의 사회이동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연구된 바와 같이 과거와 현재의 지위(세대내 이동)를 비교하거나 부모의 지위와 자녀의 지위(세대간 이동)를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점점 더 사회적 이동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객관적 이동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인의 과거 10년 전 지위(직업, 소득수준)와 더불어 부모의 지위(직업, 교육, 소득수준)를 사회조사에 포함하여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차별 경험

차별 경험은 포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포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가를 측정한다. 요컨대 차별은 포용의 반대 개념이다. 직접적으로 포용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포용의 반대인 차별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차별 경험의 측정은 한국종합사회조사 2011년도에 사용된 다음 문항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다음의 차별이나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사회적 지위로 인한 차별 2) 학력으로 인한 차별 3) 성별로 인한 차별 4) 나이로 인한 차별 5) 종교로 인한 차별 6) 출신지나 거주지로 인한 차별 7) 외모로 인한 차별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2011

그런데 차별이 이루어지는 배경 즉 차별의 이유와 아울러 어떤 경우에 차별을 경험했는지도 함께 질문하면 좋을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진학, 취업, 결혼 등 생애과정의 중요한 전환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고, 공공장소, 식당, 대중교통 등 일상적 생활 속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다.

다. 관용 여부

관용 여부는 소수자 집단 혹은 자신과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이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타고난 배경이나 지닌 성향에 의해 배척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것은 포용을 생활에서 실천에 옮기는 행동이다. 소수자 혹은 다른 집단에 대한 관용과 개방을 조사할 때에

는 어떤 성격의 관계에 기꺼이 허용할 것인지를 물어서 그 거리를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의 대상 집단 구성원들이 귀하의 (1) 배우자 (2) 가족 (3) 절친한 친구 (4) 직장 동료 (5)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외국인 이민자 2)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3) 장애인 4) 종교가 다른 사람 5) 이념이 다른 사람

출처: KGSS 및 사회통합실태조사

2. 연대

가. 사회적 참여

사회적 참여는 소속감과 정체성, 사회단체참여, 자원봉사/기부경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주제는 사회통합의 핵심적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 사회조사, ISSP, 한국종합사회조사, 세계가치관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조사 등 국내외 주요 조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다루고 있다.

1) 소속감과 정체성

소속감과 정체성은 주로 ISSP와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자주 다루어진다. 국가정체성은 국가 내 구성원들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기반이다. 소속감은 그 범위가 질문에서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국가 단위를 넘어서기도 지역 수준에 머무르기도 한다. 즉 한 국가를 넘어 세계 공동체 또는 동아시아 소속감도 가능하고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도 가능하다. 그리고 소속감은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기도 하는데, 가치나 신념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사회조사에서는 국가정체성, 국가자긍심, 소속감을 따로 측정한다. 가령 ISSP는 매 10년마다(2003, 2013) 국가자긍심, 지역공동체 소속감, 국가정체성을 따로 측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제시한 예는 ISSP에서 꾸준히 질문하고 있는 국가자긍심과 지역 소속감 항목이다. 아래에서는 국가자긍심을 한 문항의 전반적 국가자긍심으로 묻고 있지만, ISSP는 이와 별도로 일반적 국가 자긍심 5개 문항과 특정 영역 국가자긍심 10개(민주주의, 국가영향력, 경제적 성취, 사회적 안전, 과학기술의 성취, 스포츠의 성취, 문학과 예술의 성취, 군사력, 역사, 모든 사회집단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문항을 질문하고 있다.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2)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도)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3)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구)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ISSP Citizenship Ⅱ, KGSS,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Ⅱ

2) 사회단체참여

사회통합과 관련된 모든 서베이에서 사회단체참여는 항상 포함된다.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단체 또는 자발적 결사체는 국가와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감시하고 이들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의 촉진과 성숙에 매우 중요하다. 사회과학에서 사회단체참여 질문은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인데 이는 사회단체참여가 과거 서구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사회단체를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s)로 명명하면서, 이 같은 가치, 신념, 종교, 취미, 지역, 인종, 정치적 지향 등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자발적 결사체로의 활발한 참여가 미국 민주주의의 기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단체참여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취급되곤 하는데, 사회자본은 보통 신뢰, 사회단체 참여, 상호호혜의 규범 등 세 가지 요소로 측정된다. 통계청 사회조사나 ISSP 등 대부분의 국내외 주요조사에서 사회단체참여를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문

제는 우선 국제비교의 어려움이다. 각 사회마다 정치사회적으로 사회단체의 역사적 배경과 역할이 서로 달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사회단체참여 문항 선택지를 구성하기가 까다롭다. 한편,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체들을 모두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처럼 시민사회 영역별 단체들을 하나의 범주 안에 묶어서 질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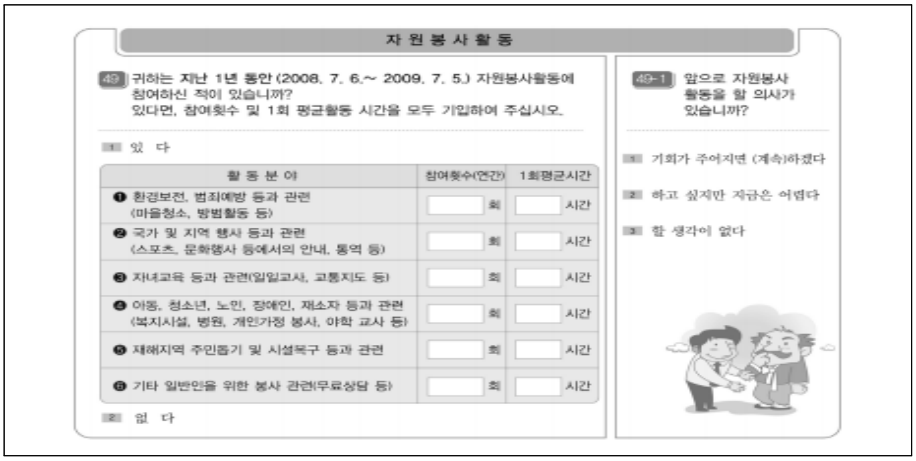
귀하는 다음 사회단체에 대하여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1) 정당 2)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3) 종교단체 4) 동호회(스포츠, 여가, 문화 포함) 5) 시민운동단체 6)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상회, 주민조직) 7) 동창회, 향우회 8)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9)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ISSP Citizenship Ⅱ, KGSS,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Ⅱ

3) 자원봉사경험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물리적, 신체적 자원을 공익을 위해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정부가 직면한 재화와 서비스 공급의 한계를 보완한다. 또한 자발적인 나눔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신뢰라는 사회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신경희, 2010). 즉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 창조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권 행사 행위이기도 하다(홍승수, 2011).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측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자원봉사나 기부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가를 질문한다. 이 경우 사회단체참여의 측정과 중복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원봉사활동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통계

청의 사회조사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조사는 자원봉사행위를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사회통념상 보수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점심값, 교통비 등 실비만 받고 봉사하는 경우도 포함'으로 정의하고 제시한 질문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자 수, 자원봉사 시간, 자원봉사 활동형태(직업), 자원봉사기관 관련성(공식자원봉사), 자원봉사기관 형태(산업) 등을 통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원 봉 사 활 동

49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2008. 7. 6.~ 2009. 7. 5.)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참여횟수 및 1회 평균활동 시간을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 있 다

활 동 분 야	참여횟수(연간)	1회평균시간
❶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 (마을청소, 방범활동 등)	회	시간
❷ 국가 및 지역 행사 등과 관련 (스포츠, 문화행사 등에서의 안내, 통역 등)	회	시간
❸ 자녀교육 등과 관련(입일교사, 교통지도 등)	회	시간
❹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 (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 봉사, 야학 교사 등)	회	시간
❺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과 관련	회	시간
❻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무료상담 등)	회	시간

□ 없 다

49-1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하겠다
□ 하고 싶지만 자금은 어렵다
□ 할 생각이 없다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나. 사회적 관계와 지지

사회통합에서 사회적 관계와 지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한 중요성만큼 사회적 관계와 지지는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측정은 무척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적 연결망은 그 속성을 관계의 유형, 접촉빈도, 범위, 크기, 밀도, 기간 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양적으로 완벽하게 측정하고자 한다면 설문지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도 그 정도는 덜하지만 양상의 복잡성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지지의 원천과 유형, 상황, 이용가능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와 지

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고 이 선택은 한국사회와 구성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사회통합 지표체계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경우 현대인의 고립과 소외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사회적 관계의 양을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원천과 유형을 열거하기 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가를 질문하면 될 것이다.

1) 도움을 받을 사람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ISSP Citizenship Ⅱ, KGSS,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Ⅱ

2) 연락하는 사람 수

귀하는 하루에 보통 몇 사람과 접촉 하십니까? 여기서 접촉이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인터넷 등으로 귀하와 일대 일로 인사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1) 0-4명
(2) 5-9명
(3) 10-19명
(4) 20-49명
(5) 50-99명
(6) 100명 이상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ISSP Citizenship Ⅱ, KGSS,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Ⅱ

다. 대인신뢰

신뢰는 진술의 진리나 사물이나 사람의 속성을 믿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사람들 간의 관계에 적용해보면 상대방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관계를 지속시켜나가는 심리적 의지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신뢰는 나의 이해와 상대방의 이해가 구조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서로 얽혀 있음을 충분

히 인지하기 때문에 기회주의적 행위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상태로 해석되기도 한다. 최근 사회통합 논의에서 신뢰가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사회자본 개념의 인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퍼트남은 신뢰를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신뢰는 개인신뢰, 사회신뢰, 제도신뢰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신뢰라고 했을 때 사회신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처럼 사적신뢰의 과잉과 공적신뢰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곳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의 수준이 친근한 주변 사람들과 다른 집단 사람들에 대해 상당히 차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뢰의 반경범위를 측정하기도 한다. 아래의 예는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에서 느끼는 신뢰와 신뢰의 반경범위에 대한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 방식이 사회조사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그 결과 또한 가장 일관적이기 때문에 사회통합 지표체계에서 신뢰의 측정방식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1) 일반화된 신뢰

문 1. 신뢰에 대한 일반적 질문을 드립니다. 0에서 10까지 생각할 때, 0은 전혀 그리고 10은 완전히를 의미한다면, 일반적으로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 안한다										완전히 신뢰한다	모름
0	1	2	3	4	5	6	7	8	9	10	88

문 2. 신뢰에 대한 일반적 질문을 드립니다. 0에서 10까지 생각할 때, 0은 전혀 그리고 10은 완전히를 의미한다면, 일반적으로 귀하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 안한다										완전히 신뢰한다	모름
0	1	2	3	4	5	6	7	8	9	10	88

출처: OECD (2017),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rust.

2) 사람의 신뢰여부(신뢰의 반경범위)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1) 가족(친척 포함)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2) 이웃 5) 국내 거주 외국인
3)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친구, 직장동료 등)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ISSP Citizenship Ⅱ, KGSS,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Ⅱ

3. 시민성

가. 효능감

1) 국민참여에 대한 정부의 태도 인식, 국민의 정보 수준

기본적으로 효능감은 개별 국민이 정치나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먼저 국민이 실제 정치나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의 의견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민참여에 대한 정부의 태도 인식뿐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실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의 충분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이 정치 현안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절대적/상대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내의 측정은 ISSP Citizenship Ⅱ에서 국민참여에 대한 정부의 태도 인식과 국민의 정보 수준에 대한 네 가지 설문항목을 활용하고 있다.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2)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
3)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4)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현안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ISSP Citizenship Ⅱ, KGSS,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Ⅱ

2) 정치관심도

정치관심도란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적극적인 정보 활동의 원인이 되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는 효능감 논의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역능성 중 정치 현안 인지도와 관련하여 정치관심도를 직접적으로 묻는 WVS의 방식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귀하는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약간 관심이 있다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출처: WVS, SCR(BS)

3) 현재와 미래 정치 상황 만족도

정치 상황 만족도란 일반 국민이 현재나 미래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것이다. 정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다른 한편으로 정치 만족도 인식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두 개념 간 관계가 밀접하고, 따라서 현재와 향후의 정치 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설문문항은 효능감 측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상황 만족은 정치적 효능감의 결과 요인이자 이를 인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⑤ 보통이다 … ⑩ 매우 만족한다 귀하는 5년 후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⓪ 매우 나빠질 것이다 … ⑤ 보통이다 … ⑩ 매우 좋아질 것이다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4) 지지 정당 존재 여부

정치에 대한 관심은 특정 정당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정당 지지가 없는 사람일수록 정치에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지 정당 존재 여부를 역능성 측정에 포함 가능하다. 또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효능감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귀하는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나. 정치참여

1) 정치・사회 현안 관련 활동 정도

정치참여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내의 측정은 정치・사회 현안 관련 활동 정도를 묻는 ISSP, WVS 등의 설문문항을 활용할 수 있다. 정치적 참여 활동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 작게는 주변 사람들과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거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서명운동이나 탄원서 제출에 참여하거나 시위나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하는 정치・사회 현안에 관한 다음의 활동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2)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3)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4)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5)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하기 6)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7)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8) 불매운동 참여하기 척도: ①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②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③ 활동한 적은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④ 활동한 적은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ISSP, WVS, SCR,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Ⅱ

2) 투표율

투표는 정치참여의 대표적 방식이자 가장 기본적인 정치참여의 수단이다. 투표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한 개인의 기본적 정치참여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투표에 참여한 정도로서의 투표율은 경성자료를 활용하지만, 투표 참여 여부를 직접 묻는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 가능하다.

성, 연령 및 지역별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선거 투표율

출처: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Ⅱ

귀하는 지난 2012년 12월에 있었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① 참여했다 ② 참여하지 않았다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다. 준법정신

준법정신은 개별 국민이 공적 제도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의지나 태도를 의미한다. 준법정신은 기본적인 시민적 의무로서 사회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기본 바탕이 된다. 투표에 참여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관심이나 정치사회적 단체에의 활동과 같은 보다 적극적 수단이나, 타인의 의견에 대한 존중, 윤리적 소비와 같은 도덕적 행태, 위기시 군복무와 같은 필수적 요소들 역시 광의의 준법정신에 포함된다. 이러한 준

법정신에 대한 국내의 측정은 ISSP에 근거하고 있고, 투표참여, 세금납부, 법규칙 준수, 정책관심, 단체활동, 의견존중, 윤리구매, 위기시 군복무 등을 측정한다.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2)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3)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4)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5) 사회 또는 정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6)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7)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이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한다
8) 국가 위기 시 기꺼이 군복무한다
척도: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⑤ 매우 중요하다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KGSS, ISSP

라. 투명성

1) 기관 청렴성

투명성은 공적 제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개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의 기본 목적은 청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청렴성은 공적 제도가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정도를 의미한다.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명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로서의 청렴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렴성에 대한 국내의 측정은 기본적으로 기관별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각 기관이 어느 정도 청렴하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질문한다.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앙정부 부처	10) 시민단체
2) 국회	11) TV방송사
3) 법원	12) 신문사

4) 검찰	13) 교육기관
5) 경찰	14) 의료기관
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15) 대기업
7) 공기업	16) 종교기관
8) 군대	17) 금융기관
9) 노동조합단체	

척도: ① 전혀 청렴하지 않다 ② 별로 청렴하지 않다 ③ 약간 청렴하다 ④ 매우 청렴하다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Ⅱ

2) 정보 접근성 및 공개성

투명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정보를 일반국민이 손쉽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정보가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정보 접근성은 국민이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어느 정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보 공개성은 정부가 정책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어느 정도 외부에 개방하는가 하는 것이다. 정보의 적극적 공개는 국민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정보 접근성과 공개성이 높으면 국민의 정보 획득이 용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정치참여가 실질화된다.

귀하는 일반국민이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면서 생산하는 정보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접근 가능성이 매우 낮다 … ⑥ 접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처: Governance Ratings 2013(AFDB)

귀하는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출처: Nations in Transit 2014(FH) 수정

3) 반부패제도의 효과성

투명성을 측정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반부패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대한 인식을 측정할 수 있다. 반부패제도는 정부의 부패를 방지하여 청렴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제도를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이해충돌과 같은 반부패제도들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효과를 발휘되면 부패가 감소하고 청렴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귀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공무원이 어느 정도 처벌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⑩ 처벌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Transformation Index(BF)

귀하는 정부가 반부패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출처: Transformation Index(BF), Nations in Transit 2014(FH) 수정

마. 공정성

1) 정부 공정성

공정성은 공적 제도가 차별이 없이 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공정성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 제도의 차별성은 차별받는 개인이나 집단의 반발을 일으키고 이는 지속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 정부 공정성은 정부가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얼마나 차별적이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는가 하는 것이다. 정부 공정성은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기본 토대가 된다.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순응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정부 공정성에 대한 국내의 측정은 여러 공적 제도가 실제 공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문항을 활용할 수 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행정기관(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2) 행정기관은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3)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한다
4) 법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
5) 검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6) 경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2) 사회 공정성

사회 공정성은 사회 전반에 있어 다양한 요소들이 얼마나 공정한가 하는 것으로 공적 제도들의 구체적 활동이나 그것의 결과적 측면에서 측정 가능하다. 사회의 다양한 구체적 상황이나 분야에서 공정성이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교육이나 취업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세금의 납부나, 법 집행 과정, 병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는 어떠한지, 지역이나 성별, 기업의 크기, 소득이 많고 적음의 차이에 따라 불공정한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하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육 기회
2) 취업 기회
3) 과세 및 납세
4)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5) 지역균형발전
6) 법 집행
7) 정치 활동
8) 성별에 따른 대우
9) 언론 보도
1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11)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12) 병역 의무 이행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KGSS

바. 제도신뢰

1) 기관 신뢰

제도신뢰는 제도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제도신뢰는 제도의 효과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제도가 그것이 부여받은 임무와 기능을 충실히 시행하고 실제 그것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신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신뢰가 잃게 되면 제도는 더 이상 그 존재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측정은 개별 공적 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 믿는 정도에 대한 설문문항이 활용된다.

다음 질문들은 귀하가 한국의 다양한 기관들을 신뢰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비록 귀하께서 이들 기관들과 거의 혹은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이들 기관에 대한 일반적 인상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10점 구간에서 다음의 기관들을 귀하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신뢰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0은 이 기관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을, 10은 이 기관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신뢰 안한다										완전히 신뢰한다	모름
0	1	2	3	4	5	6	7	8	9	10	88

1) 중앙정부 부처
2) 국회
3) 법원
4) 검찰
5) 경찰
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7) 공기업
8) 군대
9) 노동조합단체
10) 시민단체
11) TV방송사
12) 신문사
13) 교육기관
14) 의료기관
15) 대기업
16) 종교기관
17) 금융기관

척도: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④ 매우 신뢰한다

출처: OECD (2017b),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rust.

2) 제도 행위자 신뢰

다른 한편 제도 내 행위자에 대한 신뢰는 제도신뢰의 일부로서 제도 자체의 신뢰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제도 행위자는 제도의 운영과 수행을 직접적으로 담당한다. 제도 자체의 신뢰는 제도 행위자 신뢰의 영향을 받는다. 제도 행위자에 대한 믿음은 제도 신뢰를 강화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인식에 비해 제도 행위자에 대한 인식은 보다 구체적이며 가시적이다. 따라서 제도 신뢰와는 별도로 제도 행위자 신뢰를 보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하는 다음의 직업인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중앙정부 부처 공무원	10) 시민단체 종사자
2) 국회의원	11) 방송사 기자/아나운서
3) 판사	12) 신문사 기자
4) 검사	13) 교육자
5) 경찰관	14) 의사
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5) 대기업 종사자
7) 공기업 종사자	16) 종교인
8) 군인	17) 금융기관 종사자
9) 노조원	
척도: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④ 매우 신뢰한다	

출처: 2016년 <전문가 권위의 붕괴와 사회적 신뢰의 위기> 연구단, '전문가 권위와 신뢰에 관한 설문조사'

4. 지표별 국제비교/고유특성 구분

사회통합지표는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지표와 고유특성 지표로 구분된다. 많은 지표들이 ISSP나 WVS와 같은 국제조사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 이동 가능성, 차별 경험, 지지 정당 존재 여부, 기관 청렴성, 공정성, 제도 행위자 신뢰 등

은 내부 지표로서 고유특성 지표로 분류된다. <표 Ⅲ-20>에서는 세부 지표별로 국제비교지표와 고유특성지표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Ⅲ-20〉 지표별 국제비교/고유특성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제비교/고유특성	출처
포용	사회적 이동 가능성	세대내 이동	고유특성	사회조사
		세대간 이동	고유특성	사회조사
	차별 경험		고유특성	2011 사회통합실태조사
연대	사회적 참여	소속감과 정체성	국제비교	- 2013 ISSP National Identity Ⅲ 1-A, 1-B, 1-C, 12번 문항 - 2012 WVS (Wave 6) 211, 213번 문항
		사회단체참여	국제비교	- 2012 WVS (Wave 6) 25~35번 문항 - 2014 ISSP Citizenship 23~27번 문항
		자원봉사경험	국제비교	- 2012 WVS (Wave 6) 32번 문항 - 2014 ISSP Citizenship 27번 문항
	사회적 관계와 지지	도움 받을 사람	국제비교	- 2001 ISSP 2001 Social network Ⅱ 22-27번 문항
		연락하는 사람 수	국제비교	- 2014 ISSP CitizenshipⅡ 22번 문항
	대인신뢰	일반화된 신뢰	국제비교	- 2012 WVS (Wave 6) 24번 문항 - 2008 ISSP Religion Ⅲ 7번 문항
		사람의 신뢰여부	국제비교	- 2012 WVS (Wave 6) 102~105, 107번 문항
시민성	효능감	국민참여에 대한 정부의 태도 인식, 국민의 정보 수준	국제비교	- 2014 ISSP CitizenshipⅡ 33~36번 문항
		정치관심도	국제비교	- Social Cohesion Rader (2013) 84번 문항
		현재와 미래 정치 상황 만족도	국제비교	- 2014 ISSP CitizenshipⅡ 58, 60번 문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제비교/고유특성	출처
		지지 정당 존재 여부	고유특성	- 사회통합실태조사
	정치참여	정치·사회 현안 관련 활동 정도	국제비교	- 2014 ISSP CitizenshipⅡ 13~20번 문항 - 2012 WVS (Wave 6) 85~89번 문항
		투표율	고유특성	- 사회통합실태조사
	준법정신		국제비교	- 2014 ISSP CitizenshipⅡ 1-7 문항
	투명성	기관 청렴성	고유특성	- 사회통합실태조사
		정보 접근성 및 공개성	국제비교	- 2013 Governance Ratings - 2014 Nations in Transit
		반부패제도의 효과성	국제비교	- Transformation Index
	공정성	정부 공정성	고유특성	-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 공정성	고유특성	- 사회통합실태조사
		기관 신뢰	국제비교	- 2012 WVS (Wave 6) 108~124번 문항
		제도 행위자 신뢰	고유특성	- 전문가 권위와 신뢰에 관한 설문조사

제4장

사회통합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제1절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사회통합 관련 통계조사의 외연 확장

현재 사회통합 영역에 해당되는 정부 승인 통계조사는 사회통합실태조사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가 전부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그 밖의 대부분의 통계조사들은 정부 승인 통계조사가 아니다. 사회통합 영역에서의 정부 승인 통계조사가 이처럼 적은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통합이 사회통계의 전반적 총괄 프레임워크 안에서 위치 및 개념에 대한 합의 정도가 높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앞서 수행된 사회통계 총괄 프레임워크에서도 “사회통합” 대신 “공동체, 시민참여, 거버넌스”로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주요 지표인 국가주요지표와 사회지표에서는 “사회통합”으로 표현하지만 “국민 삶의 질 지표” 에서도 “사회참여”로 표시된다. 이러한 표현상의 다양성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응집 혹은 결속(cohesion) 등 다양한 용어들이 동원되고 있다.

둘째, 개념과 위치, 내용에 대한 합의 수준이 낮은 것은 사회통합이 직접적인 경험적 현실(reality)에서의 현상이나 대상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이상적(ideal) 상태 혹은 지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족이나 교육, 건강, 일, 소득과 소비, 부 등은 모두 일상적 삶의 영역들로서 개인들이 접하는 현실의 주요 측면에 대한 측정을 중심으로 한다. 반면 사회통합은 사회와 개인의 관계 혹은 개인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공공적 측

면에 대한 측정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통계조사를 통해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다른 영역들에 비해 쉽지 않다.

셋째, 다른 영역들이 정부의 부처 혹은 기관들과 대부분 일대일로 대응이 되는 반면 사회통합 영역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통합의 문제는 과거의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위원회 혹은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위원회가 주로 다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들이 실효성 있게 활동을 하며 사회통합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만들지도 못하였고, 또한 위원회 조직의 특성상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통계조사들을 제도화하는 것도 어려웠다. 현재의 사회통합 영역의 정부 승인 통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 역시 통계청에서 “한국의 사회지표”를 작성하면서 사회통합 분야의 정부 승인 통계가 부족하여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출발하게 된 것이다.

넷째, 사회통합을 고유 업무로 직접 담당하는 부처나 기관이 부재한 상황은 한국처럼 분산형 통계 생산체계를 갖춘 사회에서 사회통합과 관련한 통계조사가 체계적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장애를 가져온다. 사회통합 영역 통계조사의 물적, 제도적 지원도 어렵지만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도 어렵다.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정책 실시를 통해 사회통합 현실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처럼 사회통합 영역이 지닌 내적 특성과 외적 조건을 고려할 때 사회통합 영역이 사회통계에서 제대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또한 사회통계 전체 프레임워크의 균형을 갖추고자 한다면 사회통합 영역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통계조사들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사회통합 영역에서 보완되고 추가 혹은 정부 승인 통계로 생산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사회통계들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2. 취약집단 관련 통계조사의 개선과 정비

사회통합 영역에서 취약집단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 인구통계적으로는 남녀차별의 문제적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여성, 그리고 연령적으로는 사회적 발언권이나 사회경제적 여건

면에서 취약한 청소년과 노인 등이 중요하다. 그밖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어서 정상적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나 낯선 사회적 환경에서 차별과 배제를 당하기 쉬운 상태에 놓인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중요하다.

현재 사회통합 영역과 관련하여 취약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들과 관련하여 사회통합 영역의 정부 승인 통계조사로 실시되는 것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가 유일하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사회통합의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조사를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이외에 인구통계적으로 여성과 노인 관련해서는 사회조사나 사회통합실태조사 등 사회통합 영역에 속하는 통계조사 결과를 인구통계적 배경변수별로 분석하여 취약집단의 사회통합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이나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인구통계적 취약집단과 사정이 다르다. 이들 집단은 관련 지원 법률들이 존재하고 또한 담당하는 정부 기관들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통계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통계 조사들에서는 주로 이들의 실태에 관련한 내용들이 조사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조사내용들은 이들을 담당한 부처나 기관들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태 파악을 위한 내용 이외에 이들 집단의 사회통합 관련 실태나 의식을 조사하는 것도 여전히 필요한 과제이다.

위에 서술한대로 사회통합 영역에서 관련 통계조사를 보다 확충하고 확대해 가고자 할 때 취약집단별 사회통합 관련 내용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체계화 및 정비 필요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현재 한국에서 사회통합 영역의 통계조사로서 정부 승인을 받은 일반 국민 대상 조사로 유일하다. 따라서 사회통합실태조사가 사회통합 영역의 근간이 되는 통계조사로서 잘 유지되고 발전

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주로 사회통합 영역과 관련된 의식과 태도를 조사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조사 설계 및 문항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되 실사 관련 업무는 조사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외주 형태로 진행된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해서 매년 실시되는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조사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안정적 시계열을 구축해서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의 현황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려면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조사 내용 및 문항 개발 면에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고 이론적 근거가 명확한 문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다른 통계 조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를 신뢰성 검토 등을 위해 비교해볼 근거가 별로 많지 않다. 사회통합 영역에서 조사되는 내용들의 상당수가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까다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집과 실사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현재의 조사방식인 면접조사 방식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현재의 표집방식인 가구단위 표집과 전체 가구원 조사를 계속 유지할지는 그 타당성과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구 단위로 표집해서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이점이 있고 또한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실태조사에서는 유리한 점도 있다. 하지만 가구 단위에서의 집단 자기상관(group auto-correlation)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4. 인권 관련 통계조사 부족

인권은 사회통계 총괄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범영역(cross-cutting) 쟁점으로 제시되었으며,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인권 실태의 파악 및 인권의식 수준에 대한 측정은 사회통합 영역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사회적 다양성이 높아지고 사회의 전

반적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도 더욱 높아진다.

그런데 이처럼 인권이 사회통합 영역과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현실적으로 인권에 대한 통계조사는 상당히 저발전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인권 관련 통계의 저발전은 사회통합 영역의 통계 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과 관련하여 앞서 지적한대로 관련 부처나 기관의 부재와 관련이 깊다. 인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권위원회가 있지만 한동안 정치적 상황 때문에 활동이 저조하고 침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에 자체적으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역량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를 도와서 인권 관련 통계조사를 기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인권위원회와 유사하면서 조금씩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존재하는 것도 인권 관련 통계조사를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더한다. 대체로 인권위원회가 차별이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약자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과 부정부패 등 공공적 차원에서의 권익의 침해를 해결하는데 주력한다. 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모두 자신들이 담당하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실태와 의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조사를 기획하고 실시할 여건을 갖추지 못해 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권 및 기본권 관련된 실태와 의식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하려면 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통계청이 통계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서로 협조하여 인권 관련 통계조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정치 참여 관련 특별 조사의 필요

사회 및 정치적 참여는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인 사회적 연대와 시민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특히 활발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 사회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정치적 참여가 일부 제약되었지만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는 활발했다. 반면 민주화 이후 다양한 정치적 참여의 통로와 기회는 개방이 되었지만 반대로 선거 참여는 오히려 저조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사회 및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담당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대부분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 영역의 통계조사들이 저발전된 상태에서 이처럼 중요한 정치적 참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사가 사회통합의 문제의식이나 개념적 틀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특별 모듈 등을 통해서 정치적 참여에 대한 다양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가치관 및 의식 관련 통계조사의 미흡

사회통합은 사회통계의 다른 영역들과 달리 가치지향적이며 구체적 현실 뿐 아니라 가치와 의식 및 태도, 평가와 판단 및 의견을 많이 다룬다. 사회통계 총괄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한 범영역(cross-cutting) 쟁점들 중에서 가치 및 의식과 관련된 조사들의 상당수가 사회통합과 관련된다. 그런데 이처럼 사회통합 영역에서 가치와 의식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가치와 의식에 관련된 통계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정부의 승인 통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치와 의식에 대한 통계조사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 영역에서 중요시하는 내용들 중에서 관용성, 신뢰, 효능감 등은 모두 가치 및 의식의 성향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한 주관적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도 가치와 의식은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가치와 의식은 그밖에도 삶의 만족과 웰빙 등 사회통합 영역을 벗어난 중요 내용들에 대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본적 가치와 의식—예컨대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등—을 학술 연구자들만이 아니라 정부의 승인 통계로서도 개

발하고 발전시켜 다양한 통계조사에서 의식 및 가치 관련된 내용들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1. 단기과제의 실행계획

사회통합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통합 영역의 통계조사들이 다른 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통합 영역의 통계조사들을 확충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절실하다. 하지만 분산형 통계생산 체계를 지닌 우리의 현실에서 각 주체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조사를 설계하고 있어 조사의 주기는 물론 규모와 문항의 중첩과 내용적 차이가 동시에 발견된다. 더욱이 사회통합을 고유 업무로 갖는 부처나 기관의 부재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통합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통계자료의 생산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통합 통계 생산기관과 업무협의체 구성

우선적으로 사회통합 영역의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들과의 업무조정 및 협의,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 및 조사결과의 집계 및 분류와 가공에 관한 한 공공적인 책임과 노하우가 집적된 통계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 우리의 분산형 통계생산 체계의 조건을 고려하고, 사회통합을 고유 업무로 삼는 부처나 기관이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계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현재 사회통합 영역의 정부 승인 통계가 부족한 현실에서는 협의체의 주된 과제는 부족하거나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 승인 통계를 확대해

서 신설하거나 기존 조사의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 정부 승인 통계조사의 품질과 적절성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통계 업무를 주관하는 곳에서 사회통합 관련 조사 가운데 승인통계를 중심으로 각 조사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그러한 결과에 준해 관련 조사들을 계층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통합 영역에 속한 조사들의 특징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특징화하여 각개의 사회통합조사 및 통계가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써 제한된 규모와 문항수로 기획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조사하고자 하는 특징적인 질문만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신뢰할만하고 안정적으로 자료생산이 이루어지는 유관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표준화된 사회통합 통계 생산 매뉴얼의 구성 및 공유

사회통합 영역의 통계 생산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통계 생산의 기본매뉴얼의 사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 통계 생산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각 자료생산과정에서 쉽게 참조할 수 있는 매뉴얼의 제작은 사회통합 통계 생산과정을 체계화할 뿐만 아니라 각 조사의 목적을 보다 특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들을 일치시키거나 표준화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일종의 공유된 질문문항과 조사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적어도 사회통합 영역에서의 통계 생산에서 조사의 주체와 실사기관마다 각기 다른 접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표준화되지 못한 측정(unstandardized measurement)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통계 전문인력의 교류와 의사결정과정의 컨트롤 타워 선정

사회통합 관련 통계는 통계청과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생산, 분석하고 있어 비교적 상호간의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식통계의 관리 및 승인의 주관기관으로서 통계청과 해당 연구기관의 긴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통계조사가 정례화되어 비교적 빈번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에는 통계청의 통계전문가나 연구기관 전문인력 파견의 형식으로 관련 통계 생산과정의 조직화에 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의 경우 기본문항의 설계와 변경으로부터 특정시기마다의 부가적 문항에 이르기까지 나름 조사들의 체계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조사문항의 승인과 공표과정에서 관리된 누적적 기록들을 모아 사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부처로 송부하고 차년도 조사과정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사회통합 통계조사 개선계획 수립

전국단위의 사회통합 관련 조사통계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거나 미흡한 조사 및 통계가 적지 않고 또한 일관성을 갖지 못한 조사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재집계나 분류의 문제로부터 신규문항 검토에 이르기까지 사회통합 통계의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중단기과제로 구분하는 개선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회통합 프레임워크의 적용에 의한 필요통계 생산 계획의 수립과 사회통합 관련 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필요통계 구축계획을 마련하는 일이다.

먼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과 현주소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에 따라 새롭게 생산되거나 기 생산된 자료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통계들을 찾아 이를 적절하게 구비하고, 공표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중장기과제의 실행계획

가.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의 적용과 개선과제 로드맵 작성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를 작성하고 활용을 장려하는 이유는 사회통합에 관련된 통계조사들의 일관성과 보완성을 높임으로써 사회통합을

담당하는 각 부처나 기관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사회통합 영역의 통계조사가 저발전 된 상황에서는 이상적인 사회통합 영역 통계조사에서 이루어져야 할 조사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통합 영역의 조사를 확충하고 늘려가는 과정에서 중복과 비일관성을 줄이고 보완적이며 일관된 통계조사들이 늘어날 수 있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신설 혹은 승인을 통해 필요 통계조사를 늘려가는 것 외에도 프레임워크는 기존 통계조사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됨으로써 현행 조사들의 취약점이나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프레임워크와 비교하고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서 통계조사들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생겨나서 서로 비교하고 조정하며 보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나. 사회통합 통계 조사의 층화와 특성화의 기획・조정

현재 사회통합 영역에서의 정부 승인 조사통계는 전국 단위에서 2종이 생산되는 전부이다. 사회통합의 현실을 포착하기 위한 위・아래로부터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전혀 충분치 않다. 따라서 새로운 통계조사를 사회통합 영역의 필요에 따라 신설하거나 기존 통계조사를 변경하고 수정하려 할 때에도 각 기관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 따른 각 조사의 목적에 따른 내용의 조정과 조정 후 세부 내용의 전문화 과정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연구결과에서 제안된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각 조사통계마다 조사통계가 포괄하고 있거나 강조하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포괄하는 부분에 관한 문항들은 보다 간편하게 혹은 중분류 이상의 범주로 측정하고 본조사의 특성화 문항에는 세분류 수준에서 측정하는 등의 역할을 자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문항수의 조정과 중복을 피하면서도 상호 조사결과의 공유와 연계를 보다 순조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회통합 통계의 프레임워크의 실행과 피드백

사회통합 통계에 대한 체계화의 밑그림으로서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그 활용여부 및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통합 영역으로 규정된 정부 승인 통계조사 외에도 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전국단위의 국가승인통계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에 준해 자료생산의 방식과 결과를 주목하면서, 이들 통계들이 각각의 주기와 고유한 목적 이외에도 사회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사회통합 개선을 위해 각 측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생산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및 결과가 통계승인과정에 포함됨으로써 충분한 실효성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주요지표 개선방안

1. 국가주요지표 개선방안

가. 현황

통계청에서는 2014년부터 국민 삶의 질 수준과 국가 발전의 정도를 측정하는 '국가주요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해오고 있다. 이는 기존 제공통계들을 부처 예산체계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721종에 이르던 제공통계 중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5]. 2014년부터 제공된 국가주요지표 분류체계 중 2016년 개정된 사회통합 영역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5) 통계청 보도자료 「국가주요지표 체계」서비스(검색일 2015. 11. 21).

〈표 Ⅳ-1〉 국가주요지표 분류체계 중 사회통합 통계

영역	하위 영역	지표통계명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사회 통합	사회참여	● 선거투표율		
		● 여성국회의원비율		
		● 사회단체참여율		
	신뢰	● 대인신뢰도		
		● 기관신뢰도		
		● 부패인식지수		
	관계와 웰빙	● 사회적 고립		
		● 삶의 만족도		
		● 자살률	● 고령자 자살률	
	사회보장	● 공공복지지출비율		
		● 공적연금수급률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통합’ 영역은 몇 가지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마다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사회통합 영역을 살펴보면, 크게 ‘사회참여’, ‘신뢰’, ‘관계와 웰빙’, ‘사회보장’의 네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참여’ 하위영역은 ‘선거투표율’과 ‘여성국회의원 비율’, 그리고 ‘사회단체참여율’을 주요지표로 선정하고 있다. 별도의 보조지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주요지표로 제시된 선거투표율은 주요 투표 즉 국회의원, 대통령, 그리고 지방자치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참여율이란 투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이다.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얼마나 활발한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전체 국회의원들 중에서 여성의 비율을 계산한다. 사회단체참여율은 성인들 중에서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사회단체는 일하는 직장을 제외한 자발적 결사로서 직능, 이익, 취미 및 동호, 연고 등 다양한 이유로 모인 단체들을 의미한다. 지표는 각종 단체별로 성인들 중에서 참여하는 비율을 제시한다.

‘신뢰’ 영역의 주요지표로는 ‘대인신뢰도’와 ‘기관신뢰도’ 그리고 ‘부패인식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대인신뢰도는 낯선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이 지표는 사회 일반적으로 일반화된 신뢰 즉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측정한다. 기관신뢰도는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을 제시하고 이들 기관 각각에 대해 신뢰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여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한다. 부패인식지수는 기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 사회에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이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공익위원회에서도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관계와 웰빙’ 영역에서는 주요지표로 ‘사회적 고립’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살률’이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외롭고 말상대가 필요할 때 함께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여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한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의 비율로 측정하는 일반적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보조지표로 노인들의 자살 정도를 측정하는 고령자 자살률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하위 영역에서는 ‘공공복지 지출비율’과 ‘공적연금 수급률’이 주요지표로 제시되어 있다. 공공복지 지출비율은 국가 전체 GDP 중에서 공공복지를 위해 정부가 지출한 비율을 의미한다. 공적 연금 수급률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연금을 받아서 노후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과거에 사회보장 하위 영역의 주요 지표로 포함되었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지표의 변동이 별로 없고 의미가 모호하여 2016년 개편에서 제외되었다.

나. 사회통합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국가의 주요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기성의 ‘사회통합’ 영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참여’와 ‘신뢰’, ‘관계와 웰빙’ 및 ‘사회보장’의 영역

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국가통계의 지표로 발표된 사회통합 영역 구분 내용을 본 연구의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2>와 같다.

이들 중에서 사회보장 하위 영역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에서는 범영역(cross-cutting)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참여'는 크게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참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 둘은 참여의 형태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정치적 참여의 경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인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민성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면, 사회적 참여의 경우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경험을 쌓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면에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한 사회적 유대와 결속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성 국회의원 비율의 경우 여성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정치적 참여 일반과 맺는 관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지표로서 중요성과 의미가 다소 의문시된다. 위의 논의에 근거해서 볼 때 현재 국가주요지표의 사회통합 영역의 하위 영역인 사회참여는 사회적 결속과 유대, 그리고 시민성으로 나뉘어 재편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표 Ⅳ-2〉 국가주요지표 영역과 프레임워크 영역의 비교

	주요 지표	프레임워크 해당 하위 영역
사회참여	● 선거투표율	시민성
	● 여성국회의원비율	
	● 사회단체참여율	결속과 유대
신뢰	● 대인 신뢰도	
	● 기관신뢰도	시민성
	● 부패인식지수	
관계와 웰빙	● 사회적 고립	결속과 유대
	● 삶의 만족도	해당 없음
	● 자살률	
사회보장	● 공공복지지출비율	해당 없음
	● 공적연금수급률	

다음으로 ‘신뢰’는 사회적 관계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협력을 가져올 수 있는 대인 신뢰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관에 대한 신뢰로 주로 구성된다. 그런데 사회적 협력을 위한 기반으로서 대인 신뢰가 주로 사회적 결속과 유대를 강화한다면, 기관에 대한 신뢰는 시민들이 정부를 포함한 공공영역의 활동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면에서 시민성과 더 관련이 깊다. 또한 부패인식지수 역시 국민들이 정부 및 구성원들의 청렴하고 정의로운 활동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기관신뢰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면에서 시민성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상이 사회의 개인인가 아니면 국가의 기관 및 그 운영자인가에 따라서 신뢰 하위영역 또한 결속과 유대 혹은 시민성으로 나뉠 수 있다.

관계와 웰빙은 사회적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지지관계의 유무를 따지는 ‘사회적 고립’과 웰빙의 차원을 측정하는 삶의 만족도 및 웰빙의 극단적 반대 상태를 나타내는 자살률로 구성된다.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은 결속과 유대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지지관계의 유무는 마땅히 결속과 유대에 해당되겠지만 결속과 유대가 지지관계만이 아니라 친교와 교류의 관계 또한 포함한다고 할 때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의 여부 및 수 또한 이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한편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삶의 만족도와 자살률의 경우에는 앞서 사회통합 프레임워크의 영역구성에서 웰빙을 사회통합 영역이 아닌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회통합이 아닌 별도의 영역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웰빙이 국가주요지표의 중요 지향가치라면 특정 영역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별도의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 더 맞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하위 영역에는 공공복지지출비율과 공적연금 수급률이 주요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앞서 본 연구의 사회통합 프레임워크 설명에서 제시되었듯이 사회보장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사회통합의 조건에 가깝고 그 자체가 사회통합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일종의 범영역(cross-cutting) 쟁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개선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주요지표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통합 프레임워크와 세부적 지표 차원에서는 차이가 많지 않지만 하위영역 구성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주요지표가 참여, 신뢰, 관계 등 주요지표 수준의 개념들을 하위영역 차원으로 격상시킨 것처럼 보이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또한 시민사회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공공영역의 거버넌스를 구분하는 동시에 아우르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주요지표'는 특정 국가의 복지와 사회발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각 영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요 영역과 하위영역별로 웰빙과 사회발전이라는 두 가지의 핵심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표로서의 효용성을 염두에 둔다면 해당 지표가 갖는 개념적 적실성과 함께 개인 및 사회차원의 성과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주요지표는 시계열적,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함께 현재의 삶의 질과 국가 발전의 수준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지표가 우선시될 때에 각종 정책 수립의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집행했을 때 변화가 발생할 있는 가변성과 함께 성과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더욱이 지표가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과 부합되는 측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수치화된 자료가 존재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자료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3: 57-59).

앞서 설명한 국가지표의 요건에 비춰보면 위의 <표 Ⅳ-2>에 제시된 사회통합 지표는 개념적 포괄성 측면에서 또한 체계적 일관성 측면에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 사회통합 통계의 체계성과 일관성, 포괄성의 측면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보완되어야 할 지표들을 적시하면 아래 <표 Ⅳ-3>과 같다.

〈표 Ⅳ-3〉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와 국가주요지표 체계개선안

영역	국가주요지표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포용	● 차별 경험 유무** ●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 ● 사회경제적 이동 비율**	● 이동 가능성 인식	
연대	● 지역사회 소속감** ● 사회단체 참여 비율* ● 자원봉사 참여 비율** ● 사회적지지 정도* ● 일반화된 신뢰*	● 지역사회 정체성 ● 기부 참여 비율 ● 사회적 관계 수준 ● 신뢰의 반경범위	
시민성	● 선거 참여* ● 정치행위 참여** ● 준법의식** ● 투명성 인식* ● 공정성 인식** ● 제도 및 기관 신뢰*	● 정치적 효능감	● 선거 참여 ● 투명성 인식 ● 제도 및 기관신뢰

* 기존 국가주요지표로 관리되어왔던 지표들 가운데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의 완결성을 위해 사회통합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표
** 신규로 포함되어야 할 지표

라. 하위영역별 필요지표

새롭게 개편하고자 하는 사회통합 영역의 국가주요지표에 포함될 신규 지표들은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하위영역들인 포용과 연대, 시민성의 핵심 내용들을 반영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그에 따른 사회통합의 과제를 잘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한국의 사회통합이 다양성의 증가에 따라서 서로 이질적인 집단들이 서로를 포용할 것과 다양한 소수자 집단들에 대한 관용과 개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존 국가주요지표의 사회통합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차별 경험의 유무와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은 모두 중요한 지표이다. 다만 차별 경험 유무의 경우 현재 정부 승인 통계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통계에 반영되어 조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 관련 통

계가 발전하게 되면 이러한 수요가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차별과 관련하여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 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한편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은 현재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조사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장기 시계열을 염두에 두고 조사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소수자 집단을 보다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포용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이동 비율의 경우 2016년 국가주요지표 개편 이전에는 주관적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통합 지표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개편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이동의 실태와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포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식과 현실에 대한 지표가 모두 갖추어질 경우 현실과 인식의 괴리 혹은 격차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익하다. 그런데 이동 가능성의 인식은 현재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조사되고 있지만, 이동의 현실은 아직 조사되고 있지 않다. 향후 부모와 자녀의 직업지위와 교육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추어지면 가용하게 될 것이다.

연대 영역에서 신규 지표로 추가된 지역사회 소속감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인식을 묻는 질문을 활용해서 측정 가능하다. 지역적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간 이동의 증가와 글로벌 정체성의 강화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사회단체 참여와 함께 사회적 참여를 통해 결속과 유대를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 지표 역시 국가주요지표 개편 작업을 거치면서 포함되어 있던 것이 삭제되었지만 사회통합 영역의 하위영역 재편과 함께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시민성 하위영역에서 추가될 신규 지표는 정치행위 참여와 준법의식 그리고 공정성 인식이다. 준법의식의 보조지표로는 기초질서 준수가 추가적으로 포함된다. 정치행위 참여는 지표체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선거 투표율 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또한 준법의식은 시민성의 중요한 척도로서 본인과 타인에 대한 평가를 모두 포함한다. 준법의식과 함께 보조지표로 추가된 기초질서 준수는 사회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 중요한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인식은 투명성 인식과 더불어 사회의 기본

적 공공가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4〉 하위영역별 개선·개발 필요 지표

영역	추가 및 보완 지표	사유
포용	• 차별 경험 유무 •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 • 사회경제적 이동 비율	- 다양성 증가로 차별과 배제 증가 - 사회경제적 이동의 감소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우려 증가
연대	• 지역사회 소속감 • 자원봉사 참여 비율	- 글로벌화와 이동의 증가로 지역사회 소속감 감소 - 사회적 참여를 통한 결속의 정도 측정 필요
시민성	• 정치행위 참여 • 준법의식 • 공정성 인식	- 투표 이외의 정치적 참여의 중요성 증가 - 준법의식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 측정 필요 - 공공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실태 조사 필요

2. 국민 삶의 질 지표 개선방안

가. 현황

통계청에서는 2011년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구축하였으며, 분석틀에 제시된 미생산 지표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2014년부터 온라인으로 삶의 질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삶의 질 지표 검토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지표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논의와 수정을 거쳐 2017년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제공된 국민 삶의 질 지표 분류체계 중 가장 최근의 사회통합 영역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Ⅳ-5〉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사회통합 관련 지표

영역	하위 영역	지표통계명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시민참여	정치 참여	• 투표율		
		•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시민적 의무와 권리	• 자원봉사활동참여율		
		• 시민의식		
		• 부패인식지수		
	신뢰	• 대인신뢰		
		• 기관신뢰		
가족 공동체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망		
		• 자살률		
	공동체 참여	• 사회단체 참여율		
		• 지역사회 소속감		
사회복지	사회복지	• 공적연금 가입률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통합’ 영역은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여러 지표로 나뉘어 있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영역은 시민참여 영역이지만, 그밖에도 가족・공동체 영역 중에서 가족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공동체 관련 내용이 해당되며, 또한 사회복지에서도 사회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한다. 사회복지 영역은 2011년 국민 삶의 질 지표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에서는 시민참여에 포함되었으나 이후 독립하였다.

‘시민참여’ 영역은 ‘정치참여’와 ‘시민적 의무와 권리’, 그리고 ‘신뢰’라는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참여’ 하위영역에는 투표율과 정치적 자기역량인식이 주요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주요지표로 제시된 투표율은 주요 투표 즉 국회의원, 대통령, 그리고 지방자치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참여율이란 투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의 비

율이다.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은 개인 행위가 지역의 정치 및 행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치적 효능감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매년 5점 척도로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평균값으로 측정된다.

‘시민적 의무와 권리’ 하위영역에는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시민의식, 부패인식지수가 포함된다.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된다. 시민의식은 투표참여, 세금납부, 법과 규칙 준수, 정부 업무에 대한관심, 정당 및 사회단체 참여, 타인 생각과 의견 존중, 윤리적・친환경적 상품 구매, 군복무 의향 등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의향을 측정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각 항목에 대한 7점 척도 평균값으로 계산한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이용하며, 공공 및 정부 부문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지를 측정한다.

‘신뢰’ 하위영역에는 주요지표로 대인신뢰와 기관신뢰가 포함된다. 대인신뢰는 일반사람들에 대한 개인들의 신뢰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한 중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의 비율로 측정된다. 기관신뢰는 주요 사회기관들에 대한 신뢰 정도를 의미하며, 중앙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 교육계, 의료계, 대기업, 종교계, 금융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평균한 것이다.

‘시민참여’ 영역 외에 사회통합과 관련된 내용은 가족・공동체 영역에서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이다. 공동체 부분에는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참여’의 두 하위영역이 해당된다.

‘사회적 관계’ 하위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지표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2년마다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외롭고 말상대가 필요할 때 함께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여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의 평균으

로 측정한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의 비율로 측정하는 일반적 방식을 따르고 있다.

‘공동체 참여’ 하위영역에서는 사회단체 참여율과 지역사회 소속감이 지표로 포함된다. 사회단체참여율은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지난 1년간 친목/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 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등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된다. 지역사회 소속감은 거주지역에 대한 통합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시, 도)에 소속감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한 중에서 긍정적 응답의 비율로 측정된다.

‘사회복지’ 영역에는 공적연금 가입률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그리고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이 주요지표로 제시되어 있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국가 전체 GDP 중에서 공공복지를 위해 정부가 지출한 비율을 의미한다. 공적 연금 가입률은 가입대상자 중에서 군인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개임부담 의료비 비중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로 측정된다.

나. 사회통합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국민 삶의 질 지표에 포함된 영역들 중에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 국가통계의 지표로 발표된 사회통합 영역 구분 내용을 본 연구의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6>과 같다.

이들 중에서 사회복지 영역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에서는 범영역(cross-cutting)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시민참여’에서 정치참여 하위영역은 정치적 효능감과 투표 등 정치참여에 해당되며 시민성에 해당한다. 시민적 의무와 권리 하위영역에는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통한 참여라는 측면에서 연대에 해당되는 반면,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시민의식

이나 공공영역의 청렴도와 투명도에 대한 부패의식은 시민성 영역으로 각각 나뉜다. 마지막으로 신뢰 역시 둘로 나뉜다. 사회적 협력을 위한 기반으로서 대인 신뢰가 주로 사회적 결속과 유대를 강화한다면, 기관에 대한 신뢰는 시민들이 정부를 포함한 공공영역의 활동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면에서 시민성과 더 관련이 깊다.

〈표 Ⅳ-6〉 국민 삶의 질 지표 영역과 프레임워크 영역의 비교

영역	하위영역	주요 지표	프레임워크 해당 하위 영역
시민참여	정치참여	• 투표율	시민성
		•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시민적 의무와 권리	•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연대
		• 시민의식	시민성
		• 부패인식지수	
	신뢰	• 대인 신뢰도	연대
		• 기관신뢰도	시민성
공동체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망	연대
		• 자살률	
	공동체참여	• 사회단체 참여율	
		• 지역사회 소속감	
사회복지		• 공적연금가입률	해당 없음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개인부담 의료비 비율	

시민참여와 별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가족・공동체 영역 중 공동체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참여’는 각각 사회적 관계망과 자살률, 그리고 사회단체 참여율과 지역사회 소속감을 지표로 포함한다. 이들 모두 본 보고서의 사회통합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사회적 결속과 연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대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영역에는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과 공적연금 가입률, 그리고 개인부담 의료비 지출이 주요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앞서 본 연구의 사회통합 프레임워크 설명에서 제시되었듯이 사회복지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사회통합의 조건에 가깝고 그

자체가 사회통합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일종의 범영역(cross-cutting) 쟁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개선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 삶의 질 지표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우선 사회통합에 해당되는 많은 지표들이 시민참여와 공동체라는 별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하위영역 수준에서의 구성을 살펴보기 이전에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시민참여 영역과 가족・공동체 영역 중 공동체 영역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필요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의 사회통합 영역에서 시민성 하위영역은 주로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시민참여 영역에 해당되며, 연대 하위영역은 주로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가족・공동체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해 시민적 참여와 공동체 소속이 미치는 영향이 각기 조금씩 다르고 해외 주요 삶의 질 지표에서도 별개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시민참여와 공동체 영역을 통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시계열적,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함께 현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지표가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집행했을 때 변화가 발생할 있는 가변성과 함께 성과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더욱이 지표가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과 부합되는 측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수치화된 자료가 존재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자료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비춰보면 위의 <표 Ⅳ-6>에 제시된 사회통합 지표는 개념적 포괄성 측면에서 또한 체계적 일관성 측면에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 사회통합 통계의 체계성과 일관성, 포괄성의 측면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보완되어야 할 지표들을 적시하면 아래 <표 Ⅳ-7>과 같다.

〈표 Ⅳ-7〉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와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개선안

영역	하위영역	국가주요지표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시민 참여	정치 참여	● 투표율 ●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 정치행위참여*		
	시민적 의무와 권리	● 시민의식 ●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		
	신뢰	● 대인신뢰도 ● 기관신뢰도 ● 투명성인식** ● 공정성인식*		
공동체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망 ● 자살률*** (건강영역으로) ● 차별 경험 유무*		
	공동체참여	● 사회단체참여율 ● 지역사회 소속감***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신규로 포함되어야 할 지표
** 이동해야 할 지표
*** 삭제해야 할 지표

3. 하위영역별 필요지표

새롭게 개편하고자 하는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시민참여 영역과 가족·공동체 영역에 포함될 신규 지표들은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하위영역들인 포용과 연대, 시민성의 핵심 내용들을 반영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그에 따른 사회통합의 과제를 잘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한국의 사회통합이 다양성의 증가에 따라서 서로 이질적인 집단들이 서로를 포용할 것과 다양한 소수자 집단들에 대한 관용과 개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존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사회통합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차별 경험의 유무와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은 모두 중요한 지표이다. 다만 차별 경험 유무의 경우 현재 정부 승인 통계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통계에 반영되어 조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 관련 통계가 발전하게 되면 이러한 수요가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차별과 관련하여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 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한편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은 현재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조사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장기 시계열을 염두에 두고 조사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소수자 집단을 보다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시민성 하위영역에서 추가될 신규 지표는 정치행위 참여와 공정성 인식이다. 정치행위 참여는 지표체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선거 투표율 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공정성 인식은 투명성 인식과 더불어 사회의 기본적 공공가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8〉 하위영역별 개선·개발 필요 지표

영역	추가 및 보완 지표	사유
시민참여	•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	다양성 증가로 차별과 배제 증가
	• 정치행위 참여	투표 이외의 정치적 참여의 중요성 증가
	• 공정성 인식	공공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실태 조사 필요
공동체	• 차별 경험 유무	다양성 증가로 차별과 배제 증가

참 고 문 헌

강신욱, 이현주, 김석호, 박수진, 박은경 (2012).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사회통합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장영식, 조흥식, 차명숙 (2008).「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노대명. 노대명 (2009). 사회통합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19.

노대명, 이현주, 강신욱, 강은정, 전지현, 이은혜 (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강신욱, 전지현 (2010).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사회통합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준, 김용기, 이동원 (2009).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이재열 (2009). "사회의 질과 삶의 질,"「한국의 사회동향과 삶의 질」, 한국사회학회 특별심포지엄 발표자료(2009.4.24.), 한국사회학회.통계개발원.

이재열, 조병희, 장덕진, 유명순, 우명숙, 서형준 (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21(2), 113-149.

이희길, 신지성 (2010). 사회지표 개편 기초연구. 통계개발원.

이희길, 심수진 (2009).「삶의 질과 사회지표 체계 연구」, 통계개발원.

장수찬. (2002). “기획논문: 사회자본과 행정; 한 사회의 대인신뢰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정부학연구」, 8(1), 45-69.

장수찬 (2004). 한국 연줄사회조직의 특성과 신뢰구조의 이해: 이중적 신뢰구조가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세계지역연구논총」, 22(2), 359-394.

장용석, 조문석, 정장훈, 정명은 (2012).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학, 46(5), 289-322.

전태국 (2014).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 비교. 사회과학연구 53(2). pp.307~368.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병구, 이용수, 이경영, 이승주, 어수하, 오완근, 장용석, 박찬열, 김긴주, 김미현 (2015).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한국개발연구원.

통계청 (2015). 2015년 사회조사보고서: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2016).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 보건・교육・안전・가족・환경.

Beauvais, C., & Jenson, J. (2002). *Social cohesion: Updating the state of the research* (Vol. 62). Ottawa: CPRN.

Berger-Schmitt, R. (2000). *Social cohesion as an aspect of the quality of societies: Concept and measurement.* ZUMA.

Bian, Y., Davis, D., & Wang, S. (2007). "Family social capital in Urban China: A social network approach". In *Social Change in Contemporary China: CK Yang and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Diffusion.*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Council of Europe. (2005).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 Belgium: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Dahrendorf, R., Frank, F., & Hayman, C. (1995). *Report on wealth creation and social cohesion in a free society.* Londres, The Commission on Wealth Creation & Social Cohesfion.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125.

Friedkin, N. E. (2004). "Social cohes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0, 409-425.*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Free Press.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Habermas, J., & Habermas, J. (1985).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Beacon press.

Herrmann, P. (2006), "Social Quality: Opening Individual Well-Being For A Social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6(1), 27-49.

Hogg, M. A. (1992).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 cohesiveness: From attraction to social identity.* Harvester Wheatsheaf.

Jenson, J. (1998). "Mapping social cohesion: The state of Canadian research"

(pp. 109-28). Family Network, CPRN.

Lin, N., Cook, K. S., & Burt, R. S. (Eds.). (2001).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Transaction Publishers.

Lockwood, D. (1964).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In *Explorations in social change,* 244-257.

Markus, A. B., & Arunachalam, D.(2008) “Mapping Social Cohesion: The Scanlon Foundation Surveys. (1 ed.)” Clayton, Victoria: *Monash Institute for the Study of Global Movements.*

Markus, A. (2017) "Mapping Social Cohesion 2016: The Scanlon Foundations Surveys Full Report." *Melbourne: Monash Institute for the Study of Global Movements*

Maxwell, J. (1996). *Social dimensions of economic growth.*

McCracken, M. (1998). “Social cohes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In *CSLS Conference on the State of Living Standards and the Quality of Life in Canada* (pp. 30-31).

Mouzelis, N. (1997). “Social and System Integration: Lockwood, Habermas, Giddens.” *Sociology,* 31(1), 111-119.

O'Connor, P. (1998). “Mapping social cohesion.”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OECD publishing.

OECD (2017a).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OECD (2017b).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rust.* OECD publishing.

Putnam, R. D. (2001).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Shah, H., & Marks, N. (2004). *A well-being manifesto for a flourishing society.* New Economics Foundation.

UN (1995) *Report of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Copenhagen, 6-12 March.

UN (2017). *World Happiness Report.*

UN DESA (2009) *Creating an Inclusive Society: Practical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UNDP (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UNDP.

UN ECLAC (2010) *Social Cohesion in Latin America: Concepts, frames of reference and indicators*

UN ECLAC (2007) *Social Cohesion: Inclusion and a Sense of Belonging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C/G.2335), Santiago, Chile.

Walker, A., & Van der Maesen, L. (2004). "Soci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Challenges for quality of life in the contemporary world: advances in quality of-life studies, theory and research.*

Woolley, F. (1998). "Social cohesion and voluntary activity: making connections." In *CSLS Conference on the State of Living Standards and the Quality of Life in Canada* (pp. 30-31).